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230-000478-1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전승훈 · 신영임

2009. 3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전승훈·신영임

2009.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현 상황 하에서 정부는 감세와 소득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계소비구조,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될 때에만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이후 지난 5년 간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결과를 적시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 역시 국회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을 심의·의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요 약 / 3

I. 서 론 /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기존 연구 23
3. 연구 주제 및 방법론 27

II.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 37

1. 문제제기 37
2. 가구의 소비구조: 2007년 37
3. 가구 소비구조의 변화: 1982~2007년 58
4. 경기변동과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74
5. 소결 106

III. 가계소비의 불평등도 분석 / 113

1. 서론 113
2. 가계 소비의 소비불평등도 분석: 2007년 기준 114
3.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1982~2007 117
4. 경기변동과 소득분배 125
5. 소결 143

IV. 가계소비와 한계소비성향 / 147

- 1. 문제제기 147
- 2. 가구 특성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2007년 기준 148
- 3. 경기변동과 한계소비성향의 변화 160
- 4. 소결 178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85

- 1. 요약 185
- 2. 정책시사점 189

참고문헌 / 193

표 목차

[표 I-1]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 흑자율 추정결과	26
[표 I-2] 소비 및 소득 항목의 구성	33
[표 II-1] 가계소비지출의 구조: 2007년	38
[표 II-2]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 구조(소득수준)	40
[표 II-3] 가구 특성별 항목별 소비 비중(소득수준)	42
[표 II-4]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소득수준)	43
[표 II-5]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구조(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45
[표 II-6] 가구 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	46
[표 II-7] 가구특성별 평균소비성향(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47
[표 II-8]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가구 유형)	49
[표 II-9] 가구 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가계유형)	50
[표 II-10]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가계유형)	51
[표 II-11]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주택소유)	53
[표 II-12] 가구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주택소유)	54
[표 II-13]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주택소유)	54
[표 II-14]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거주지역)	56
[표 II-15] 가구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거주지역)	57
[표 II-16]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거주지역)	57
[표 II-17] 가구 소득 및 소비의 변화 추이	60
[표 II-18]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61
[표 II-19]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화	63
[표 II-20]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1분위	64
[표 II-21]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2분위	65

[표 II-22]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3분위	66
[표 II-23]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4분위	67
[표 II-24]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5분위	68
[표 II-25]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6분위	69
[표 II-26]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7분위	70
[표 II-27]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8분위	71
[표 II-28]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9분위	72
[표 II-29]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10분위	73
[표 II-30]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77
[표 II-31]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82
[표 II-32]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전체가구)	87
[표 II-33]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소득1분위)	88
[표 II-34]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소득10분위)	88
[표 II-35] VAR 결과	92
[표 II-36]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지출의 비중	93
[표 II-37]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지출의 비중	94
[표 II-38]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비중 및 성장률 변화	99
[표 III-1] 지니계수 측정결과: 2007년	114
[표 III-2]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 분석: 2007년	116
[표 III-3]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117
[표 III-4]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120
[표 III-5]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 분석	122
[표 III-6]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124
[표 III-7]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126
[표 III-8]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127
[표 III-9]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4 전체가구)	130

목 차 **viii**

[표 III-10]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	132
[표 III-11]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 전체소비 ..	133
[표 IV-1] 2007년 소비함수 추정결과	152
[표 IV-2] 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153
[표 IV-3]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소득수준)	155
[표 IV-4]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근로자 가구 vs. 비근로자 가구) ...	156
[표 IV-5]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가구 유형)	158
[표 IV-6]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주택 소유)	159
[표 IV-7]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거주지역)	160
[표 IV-8]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162
[표 IV-9]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164
[표 IV-10]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4)	167
[표 IV-11] VAR 결과: 전체소득분위	170
[표 IV-12] VAR 결과: 종속변수=MPC, 1~5분위	171
[표 IV-13] VAR 결과: 종속변수=MPC, 6~10분위	172

그림 목차

[그림 II-1] 실질GDP 증가율의 추이	78
[그림 II-2] 실질이자율의 추이	78
[그림 II-3]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79
[그림 II-4] 충격반응함수: 전체소비금액	101
[그림 II-5] 충격반응함수: 식료품비 비중	101
[그림 II-6] 충격반응함수: 주거비 비중	102
[그림 II-7] 충격반응함수: 광열·수도비 비중	102
[그림 II-8] 충격반응함수: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비중	103
[그림 II-9] 충격반응함수: 피복·신발비 비중	103
[그림 II-10] 충격반응함수: 보건·의료비 비중	104
[그림 II-11] 충격반응함수: 교육비 비중	104
[그림 II-12] 충격반응함수: 교양·오락비 비중	105
[그림 II-13] 충격반응함수: 교통·통신비 비중	105
[그림 III-1] 소비 및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119
[그림 III-2] 충격반응함수: 소비불평등도	138
[그림 III-3] 충격반응함수: 식료품비의 불평등기여도	138
[그림 III-4] 충격반응함수: 주거비의 불평등기여도	139
[그림 III-5] 충격반응함수: 광열·수도비의 불평등기여도	139
[그림 III-6] 충격반응함수: 가사용품의 불평등기여도	140
[그림 III-7] 충격반응함수: 피복·신발비의 불평등기여도	140
[그림 III-8] 충격반응함수: 보건·의료비의 불평등기여도	141
[그림 III-9] 충격반응함수: 교육비의 불평등기여도	141
[그림 III-10] 충격반응함수: 교양·오락비의 불평등기여도	142

X 목 차

[그림 III-11] 충격반응함수: 교통·통신비의 불평등기여도	142
[그림 IV-1] 한계소비성향의 추이	163
[그림 IV-2] 충격반응함수: 성장률, 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	175
[그림 IV-3] 성장률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176
[그림 IV-4] 부채비율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177
[그림 IV-5] 이자율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177
[그림 IV-6] 한계소비성향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	178



요약

요 약

- 본 연구는 1982~2007년 기간의 「가계동향조사(舊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다음 주제를 검토하였음
 -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 측정
 -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 II장의 요약

- 제 II장에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
 -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199.3만원임
 - 항목별 소비 구성을 보면,
 - 식료품(50.3만원, 25.2%), 기타소비지출(36.5만원, 18.3%), 교통 및 통신(35.0만원, 17.6%), 교육(21.8만원, 11.0%) 등의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주거비(7.2만원, 3.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8.6만원, 4.3%), 교양·오락(9.3만원, 4.7%), 광열·수도(9.6만원, 4.85) 등의 소비항목은 소비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항목별 소비비중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 모든 분위에서 식료품,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 교육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지출비중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지다가 9분위, 10분위에서는 지출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2007년 기준 소득분위별 가계소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전체 가구
소비지출	594	951	1,263	1,613	1,854	2,074	2,261	2,560	3,016	3,741	1,993
식료품	184	269	357	430	486	545	588	627	714	824	503
주거비	38	65	69	69	78	76	69	79	82	90	72
광열수도	50	68	81	92	97	103	108	113	121	133	96
가구집기·가사용품	20	34	47	66	79	88	94	112	132	192	86
피복 및 신발	16	36	55	73	90	100	115	132	167	229	101
보건의료	71	83	88	101	103	101	110	116	137	165	108
교육	11	56	86	160	195	234	268	318	402	454	218
교양오락	20	34	49	64	75	84	100	117	151	242	93
교통 통신	68	140	205	273	332	393	410	481	546	653	350
기타소비지출	117	165	224	285	319	353	398	464	565	759	365
총소득	483	961	1,432	1,858	2,248	2,630	3,060	3,648	4,397	6,334	2,706
경상소득	387	833	1,267	1,690	2,080	2,457	2,871	3,426	4,172	6,037	2,522
비경상소득	97	127	165	168	168	173	189	222	225	296	183

□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 총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73.7%로, 가구 소득 중 약 73.7%를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약 79.0%로 측정됨
- 소득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22.8%로 측정되어, 총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소득수준)

(%)

	1	2	3	4	5	6	7	8	9	10	전체 가구
총소득 기준	122.8	99.0	88.2	86.8	82.5	78.9	73.9	70.2	68.6	59.1	73.7
경상소득 기준	153.4	114.1	99.7	95.5	89.1	84.4	78.8	74.7	72.3	62.0	79.0

- 가구 특성별로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중에서는 근로자 외 가구가,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이 낮았음

6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소비지출의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소비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외환위기라는 경제충격이 가구의 소비행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경제상황이 향후 가계 소비행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

- VAR모형 추정을 통해 구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비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데에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의 순서로 거시 변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
 - 충격의 지속정도나 시작규모를 살펴보면,
 -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다른 변수들과 동행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이들 항목

의 경우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은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시점이 경기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충격의 시작점과 차이가 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지출항목으로 드러남

- VAR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은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때의 소비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 III장의 요약

- 2007년 기준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0.340이고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0.368,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 0.370임

지니계수 측정결과: 2007년

	지니계수
소비지출	0.340
총소득	0.368
경상소득	0.370

- Shorrocks(1982)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 항목별 소비비중 대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비항목은 교육으로 나타남

8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교육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52.9%임
- 이는 교육비 지출 비중 1% 증가 시 소비지니계수가 1.529% 증가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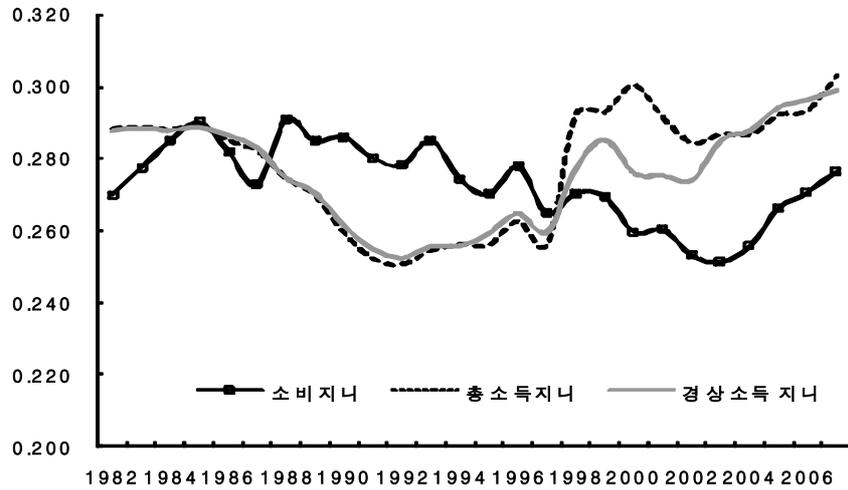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71.4	71.2	48.2	129.9	116.6	81.3	152.9	131.1	109.7	105.7

-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982~2007년 기간 중 연도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 소비불평등도가 1982년 이후 1985년까지는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소비 및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 소비불평등도 충격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 경제성장률 충격은 1~4분기에는 소비불평등도를 상승시키지만, 5분기 이후에는 소비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변동이 항목별 소비의 불평등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II장에서 예측한 경기변동에 따른 항목별 소비비중 변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소비의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제 IV장의 요약

- 제 IV장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후,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측정결과에 따르면 총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임
 - 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235로 측정되었고,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825로 측정됨
 - 한계소비성향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이와는 다른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일정정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짐
 - 특히 소득 1~4분위 집단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 소비성 부채의 존재, 유동성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2007년 기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전체	0.3856	0.3235	0.2825
1분위	0.6426	0.6282	0.1593
2분위	0.5180	0.4671	0.1937
3분위	0.4618	0.4082	0.1986
4분위	0.4545	0.3908	0.2491
5분위	0.4317	0.3650	0.2863
6분위	0.4128	0.3456	0.3113
7분위	0.3868	0.3225	0.3101
8분위	0.3673	0.3059	0.2996
9분위	0.3590	0.2959	0.3474
10분위	0.3092	0.2537	0.3277

-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 전기의 GDP증가율의 1% 증가가 이번 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9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소비의 침체 현상이 나타나며,
 - 이러한 가계소비의 침체는 경기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일정기간 (약 1분기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
 - 부채비율증감과 이자율은 한계소비성향과 음의 상관관계
 - 이는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상승이 다음기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

12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경기관련 변수가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GDP증가율의 경우 1~2분기 정도지만, 이자율이나 부채비율은 4~7분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경기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남

정책시사점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함

- 소득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2분위, 경상소득 기준으로 볼 때 1~3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의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소비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이 경기변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위기 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더 악화됨을 의미
- 이자율과 금융부채비율의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움

- 민생안정 차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 한계소비성향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가계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은 가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정책대상자를 선택해야 함
 - 주택 미소유 가구와 도시 지역 외 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가 구나 도시지역 거주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았지만,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비슷한 수준임
 -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계특성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가계소비 진작이 유일한 정책목표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여타 가계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선정해야 함

-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은 가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방법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총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나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지만, 비경상소득의 한계소

1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특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낮게 측정됨

- 이러한 현상이 함의하는 바는 만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이전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금을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한다면, 정책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일시적인 지원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며,
 - 중산층의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한편 정부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 역시 효과적일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이 가계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채상환이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등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
- 경기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가계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함
 - 경기변동이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및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상승 시 1분기 정도의

시차를 갖고 가계소비가 증가하거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짐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소비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박종규(2008)는 정책의 시의성, 적절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가계로 하여금 정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대응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안심과 믿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 적절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소득, 고용, 가계부채의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최소화해 나갈 때 소비심리도 서서히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
- 이자율과 가계의 금융부채비율의 변화추이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이자율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적으로 이자율이나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자율, 부채비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16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불평등도의 변화추이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현재의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가 소비불평등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가계소비가 가계의 후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소비불평등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도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인적자본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교육비지출 규모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있어 차이가 남
 - 소득분위별 가계지출구조를 살펴보면, 교육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지출비중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지다가 9분위, 10분위에서는 지출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 고소득층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이미 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임
- 교육비지출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녀세대의 소

득수준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실제 안종범·전승훈(2008)은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자녀세대의 교육수준 및 교육수준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음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3. 연구 주제 및 방법론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감세 혹은 소득 이전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계 소비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계소비구조,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될 때에만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 등이 효과적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 목표 대상을 정하고자 할 때, 즉 어느 집단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계소비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불평등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로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가구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불평등도간의 관계, 경기변동과 소비불평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많지 않다. 자산효과, 이자율, 미래소득이 한계성향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 가구특성별, 연도별로 한계소비성향의 추이를 검토한 후, 이를 통해 재정·조세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경기변동과 소비구조 및 가계소비행태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과 같은 경제위

기 상황 하에서 가계의 소비구조 및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가계소비구조, 소비의 불평등구조, 한계소비성향 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민간소비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 위축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및 고용불안감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소비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감세 및 이전지출 정책을 고려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는 가계소비와 관련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조세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2~2007년 기간의 「가계동향조사(舊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특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의 분석을 통해 가계소비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조세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인 재정·조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목적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 기존 연구

가. 가계소비구조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 중 가계소비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가계 부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 구조, 추이 등을 파악하여, 이를 분기단위,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위한 기본정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국민소득 추계, 경제동향 분석 등을 위한 통계, 그리고 주거 대책비 산정,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가구 유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선형·김근홍(2003)은 노인가계의 지출 구조를, 소연경(2000)은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황덕순·정운영(1998)은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김동석(2006)은 가계소비지출 통계자료에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을 적용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함수를 추정한 후, 경제성장률, 인구, 가구구성 등에 대한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2005~2020년 기간 중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향후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동석(2006)은 소비지출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며, 소비지출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이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 등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종규(2008)는 최근의 경제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패

2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계정의 가계최종소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박종규(2008)는 2008년 2/4분기의 경우 전기 대비 소비 감소가 기록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가계소비를 구성하는 소비내역의 변화의 특징은 국외소비지출, 가계시설 및 운영,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 등 외출형 소비가 감소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성 음료, 통신, 기타소비지출 등 재택형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종규(2008)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7년 4분기와 유사한 양상이다. 한편 박종규(2008)는 소비심리가 이처럼 악화되고 예비적인 동기에 의한 저축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변동성이 높고 소비자 금융이 발달할수록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유발되고,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대한 분포만으로 경제구성원의 후생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정도 어려움이 있다(김대일, 2008). 따라서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소비불평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소비불평등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존재하는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김학주(2005)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불평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남상호·임병인(2008)은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소비분배구조추이와 양극화의 진전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경상소

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은 오히려 불평등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출 측면의 양극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대일(2007) 도시기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훨씬 작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대일(2007)은 향후 불평등도 논의에 있어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영·이광호(2004)는 소득과 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와 요인 분해 및 계층 별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의 민감도를 분석함을 통해 경기변동의 충격과 소득 및 소비지출 불평등 간의 동태적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변동과 소득분배의 관계는 1998년 1분기를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경제 위기 이전에는 양의 경기변동 충격이 2분기 이후에 서서히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양의 경기변동 충격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양의 단위경기변동 충격은 소비지출 분배를 개선시켜 소비지출 지니계수를 약 0.0055 감소시키며, 소비불평등의 변화 중 경기변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비중은 약 3~6%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 한계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계소비성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별로 없다. 다만 자산효과,

26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이자율, 미래소득이 한계소비성향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범식 외(2009)는 조세환급(tax rebate)의 방법, 대상, 규모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소득5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1.10으로 1을 초과하는 반면, 5분위의 경우에는 0.60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았다. 한편 2008년 소득 1, 2분위 계층의 흑자율은 -44.3%, 3.3%에 불과해 일시적인 소득보조가 주어질 경우 소비보다는 부채 상환이나 저축증대에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표 1-1] 평균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 흑자율 추정결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소비성향	144.4	96.7	85.2	76.3	62.5
한계소비성향	1.10	0.88	0.80	0.73	0.60
흑자율(%)	-44.0	3.3	14.8	23.7	37.5

주 1. 평균소비성향과 흑자율은 2008년 기준

2. 한계소비성향은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경상 및 비경상소득을 모두 포함한 가계소득에서 조세, 연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분석기간은 1982년 1/4분기~2008년 4/4분기)

자료: 김범식 외(2008)

한편 김범식 외(2009)는 소득 5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추정결과와 일본의 조세환급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최소 0.1에서 최대 0.6이었던 점¹⁾을

- 1)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조세환급의 방법은 분할 현금지급, 일시불 현금지급, 소비쿠폰지급의 순서대로 효율적이었다. Hori and Shimizutani(2002)에 따르면 일본에서 1998년 시행한 일시불 현금지급 방식의 조세환급의 한계소비성향은 0.6으로, 투입된 환급액의 60%가 추가로 소비되었다. 반면, Hori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시행한 소비쿠폰지급 방식의 조세환급의 한계소비성향이 약 0.1이었다. 한편 Ishikawa and Ueda(1984)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일반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0.685인데 반해 보너스 소득에 대한

고려하여 2009년 중 정부가 조세환급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실질민간소비의 증가분을 최대 4.5조원에서 최소 0.2조원으로 추정하였다.

최요철·김은경(2007)은 장기 소비함수식을 이용하여 주식자산의 한계 소비성향은 0.05이고, 주택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은 0.02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주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비슷하나 주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10 내외 수준인 미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요철·김은경(2007)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미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의 전체 소비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이 저조하고 주식보유비중도 낮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박명호(2007)는 특정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소비함수를 근사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미래노동소득의 불확실성이 예비적 저축의 동기를 가져와 현 시점의 최적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 주제 및 방법론

가. 연구주제

본 연구는 크게 가계 소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본 분석의 연구결과는 최근의 경제상황

한계소비성향은 약 0.437이다.

에 따라 향후 가계소비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해 연구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은 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위기는 분배 상태를 악화시키고, 분배상태의 악화는 사회경제적 통합을 저해하여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배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분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김대일(2008), 남상호·임병인(2008) 등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비는 개인 및 가구의 후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가구의 소비불평등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소비구조의 변화 및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항목별 비중 변화와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다. 한계소비성향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가계 유형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가구의 소비성향이 경기변동 및 경기상황에 대한 예측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 ②는 제 II장에서 논의되고, ③, ④, ⑤는 제 III장에서, ⑥, ⑦은 제 IV장에서 논의된다.

- ① 가구 특성별 가구 지출 구조의 특징
- ② 연도별 가구 지출 구조의 변화 및 경기변동이 가구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③ 가구의 소비불평등도 변화 추이
- ④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화가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⑤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⑥ 가구 특성별 한계소비성향의 측정
- ⑦ 연도별 한계소비성향의 변화 및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연구 자료

가계소비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태를 잘 반영하는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舊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가계조사 자료이다. 농가, 어가,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²⁾, 외국인 가구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을 제외한 1인 이상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실태를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조사는 2006년 이후부터는 1인 이상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5년까지는 1인가구가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2002년 이전에는 도시 이외의 지역³⁾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

2)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1)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 주택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와 2)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3)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 지역은 읍면 지역을

어 있었다. 또한 2002년까지는 근로자 외 가구⁴⁾의 가구소득을 공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연도별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구조를 가구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2인 이상 도시지역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행태와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구조 변화행태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1982~2007년 기간 중 2인 이상 도시지역 가계를 대상으로 소비구조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소비불평등도,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on Model; 이하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에는 VAR 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시계열자료가 확보하기 위해 1982~2005년 기간 중 2인 이상 도시지역 가계의 소비지출 자료에 대한 분기별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가계의 소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구의 소비지출을 분석할 때에는 소비지출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자료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균 소비성향 등을 분석할 때 소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소득 및 소비의 정의 및 소비 항목의 구분 내용에

의미한다.

- 4)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이윤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한다.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관공서나 회사, 상점 등에 고용되어 정신적 노동(봉급자) 또는 육체적 노동(노무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봉급 또는 노임을 받아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의 장·차관 및 청장급 이상과 법인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이사급 이상 등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가구주는 법인경영자가구로 근로자 가구에서 제외된다.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 및 소비의 정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하는 지출’을 가계지출로 정의한다. 이때 가계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소비지출이 일반적인 가계소비를 의미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비지출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비지출을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문화, 교통·통신, 그리고 기타소비지출 등 10개의 대분류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항목별 지출 역시 10개 대분류항목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항목인 식료품은 곡물과 주로 주식으로 사용하는 곡물 가공품, 외식 등을 포함하는 지출항목이다. 둘째 항목인 주거비는 주거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소비지출을 의미하는데, 재산증식을 위한 주택 및 토지의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셋째 항목인 광열·수도는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등을 의미한다. 단 연료 중 차량용 연료는 교통·통신비로 분류되어 광열·수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항목인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은 일반가구 및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등 가사에 필요한 가정용 내구재, 식기주방용품, 가사소모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사사용인에 대한 급료 및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유아를 맡길 경우 보육료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에 포함이 된다. 다섯 번째 항목인 피복 및 신발은 의류 및 신발 구입에 사용된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항목인 보건·의료비는 의약품비, 진료비 및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기저귀 등 유아 보건용소모품도 보건·의료비에 포함된다. 일곱 번째 항목인 교육비는 유치원 이상 학교에 납입하는 납입금과 교과서 및 문방구 용품, 사교육비

32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등을 포함한다. 단, 자녀가 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비소비지출 항목중 기타 비소비지출에 포함된다. 여덟 번째 항목인 교양·오락비는 교양, 오락, 문화생활 등에 사용된 소비지출로 TV, 오디오 등 관련 내구재 구입이 포함된다. 아홉 번째 항목인 교통 및 통신비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정보의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지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비지출은 위 각 비목에 분류되지 않은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 등이 기타 소비지출에 포함된다.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지급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의미한다. 자녀가 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송금하는 금액 역시 비소비지출에 포함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경상소득은 가구 소득 중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다. 비경상소득은 경상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교제·축의·조의 등에 의하여 받은 금액과 복권·경품권·경마 등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 손해보험 탄 금액, 퇴직금, 연금일시금, 장학금 등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 중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처분 경상소득(disposal current income)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처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을 가처분 총소득(disposal total income)으로 정의하였다. 앞으로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총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경상소득과 가처분 총소득을 의미한다.

[표 1-2] 소비 및 소득 항목의 구성

항 목	구 성
가계지출	○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 소비지출과 비 소비지출로 구성
소비지출	○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
식료품	○ 곡물과 주로 주식으로 사용하는 곡물 가공품, 외식도 포함
주거비	○ 주거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소비지출 - 재산증식을 위한 주택 및 토지등의 구입비용은 제외
광열 수도	○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 차량용 연료는 교통 통신비에 포함됨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 일반가구 및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등 가사에 필요한 가정용 내구재, 식기주방용품, 가사소모품 등이 포함됨 ○ 가사사용인에 대한 급료 및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유아를 맡길 경우 보육료도 포함
피복 및 신발	○ 의류 및 신발 구입에 사용된 소비지출
보건·의료	○ 의료 및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교육	○ 유치원 이상 학교에 납입하는 납입금과 교과서 및 문방구 용품, 사교육비 등 포함 - 단, 자녀가 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비소비지출 항목중 기타 비소비지출에 포함됨
교양 오락	○ 교양 오락, 문화 생활 등에 사용된 소비지출로 TV, 오디오 등 관련 내구재 구입 포함
교통 및 통신	○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정보의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기타소비지출	○ 기타소비지출 위 각 비목에 분류되지 않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지급 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 ○ 자녀가 외지에서 공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송금하는 금액
소득	
경상소득	○ 가구 소득중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이외의 소득 ○ 교제·축의·조의 등에 의하여 받은 금액·복권·경품권·경마 등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손해보험 탄 금액·퇴직금·연금일시금·장학금 등으로 받은 금액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1. 문제제기
2. 가구의 소비구조: 2007년
3. 가구 소비구조의 변화: 1982~2007년
4. 경기변동과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5. 소 결

II.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1. 문제제기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가계 소비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계소비구조,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될 때에만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 등이 효과적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 II장에서는 가구 특성별 및 연도별 로 가계소비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소비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가구의 소비구조: 2007년

가.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199.3만원이다. 소비항목 별로 보면 식료품(50.3만원, 25.2%), 기타소비지출(36.5만원, 18.3%), 교통 및 통신(35.0만원, 17.6%), 교육(21.8만원, 11.0%) 등의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2만원, 3.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8.6만원, 4.3%), 교양·오락(9.3만원, 4.7%), 광열·수도(9.6만원, 4.85) 등의 소비항목은 소비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II-1] 가계소비지출의 구조: 2007년

(단위: 천원, %)

	소비지출 금액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
	평균소비성향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	
	총소득대비 비중	경상소득 대비 비중		
소비지출	1,993	73.7	79.0	100.0
식료품	503	18.6	19.9	25.2
주거비	72	2.6	2.8	3.6
광열·수도	96	3.6	3.8	4.8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86	3.2	3.4	4.3
피복 및 신발	101	3.7	4.0	5.1
보건·의료	108	4.0	4.3	5.4
교육	218	8.1	8.7	11.0
교양·오락	93	3.5	3.7	4.7
교통·통신	350	12.9	13.9	17.6
기타소비지출	365	13.5	14.5	18.3
총소득	2,706			
경상소득	2,522			
비경상소득	183			

평균소비성향은 전체 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소득 중 가구가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가구의 소득 중 총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과 경상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을 계산하였다. 전체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270.6만원이고, 이중 경상소득은 252.2만원이다.

총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73.7%이다. 즉 가구 소득 중 약 73.7%를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약 79.0%로 측정되었다.

나. 가계 특성별 소비지출 구조

여기서는 소득,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등 가구 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가구특성을 구분한 후, 각 특성별로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한다.

(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구조

[표 II-2]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각의 분위별로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를 측정하였다.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소득수준 기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월평균 약 59.4만원으로 측정되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374.1만원으로 측정되었다. 가구의 총소득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월평균 48.3만원으로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633.4만원으로 측정되었다. 경상소득은 1분위는 월평균 38.7만원, 10분위는 월평균 603.7만원으로 측정되었다.

항목별 규모를 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식료품 지출과 기타소비지출, 교통 및 통신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그 외 소득 분위별로 항목별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를 비롯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가 다른 소비지출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양·오락비와 교육비의 규모가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소비지출 규모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였다. 측정결과 총소비지출의 변이계수는 48.0으로 측정되었으며, 총소득과 경상소득의 변이계수는 각각 64.7과 67.3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소득분위별로 볼 때 소비지출의 격차가 소득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0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소비항목별로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교양·오락, 교육, 피복 및 신발 등과 관련된 소비지출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분위 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비, 광열·수도, 보건·의료, 식료품 등과 관련된 소비지출은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득분위 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 구조(소득수준)

(천원)

	1	2	3	4	5	6	7	8	9	10	변이 계수
소비지출	594	951	1,263	1,613	1,854	2,074	2,261	2,560	3,016	3,741	48.0
식료품	184	269	357	430	486	545	588	627	714	824	39.5
주거비	38	65	69	69	78	76	69	79	82	90	19.5
광열·수도	50	68	81	92	97	103	108	113	121	133	26.1
가구집기·가사용품	20	34	47	66	79	88	94	112	132	192	58.6
피복 및 신발	16	36	55	73	90	100	115	132	167	229	62.6
보건·의료	71	83	88	101	103	101	110	116	137	165	25.2
교육	11	56	86	160	195	234	268	318	402	454	67.0
교양·오락	20	34	49	64	75	84	100	117	151	242	69.9
교통·통신	68	140	205	273	332	393	410	481	546	653	52.5
기타소비지출	117	165	224	285	319	353	398	464	565	759	53.0
총소득	483	961	1,432	1,858	2,248	2,630	3,060	3,648	4,397	6,334	64.7
경상소득	387	833	1,267	1,690	2,080	2,457	2,871	3,426	4,172	6,037	67.3
비경상소득	97	127	165	168	168	173	189	222	225	296	30.2

항목별 소비비중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식료품,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1분위의 경우 보건·의료비(12.0%), 광열·수도(8.4%), 주거비(6.3%)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1.9%), 피복 및 신발(2.7%), 교양·오락(3.3%),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3.3%) 등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1분위의 경우 보건·의료(8.8%), 광열·수도(7.1%), 주거비(6.9%)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양·오락(3.5%),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3.6%), 피복 및 신발(3.8%)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분위의 경우 보건·의료(7.0%)와 교육비(6.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양·오락(3.8%)과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3.8%)과 피복 및 신발(4.4%)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4분위의 경우 교육(9.9%)과 보건·의료(6.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소비항목의 경우 대체로 소비비중이 비슷하였다. 그리고 5분위 이상 분위의 경우 대체로 교육비의 비중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피복 및 신발 소비 비중과 교양·오락관련 소비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보건·의료(38.8), 교육(37.8), 그리고 주거비(36.9) 등의 소비항목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소비지출(6.0)과 식료품(9.7)의 변이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중 보건·의료비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의 변이계수는 작지만 소비비중의 변이계수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소비지출 규모의 변이계수가 작은 것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보건·의료비 지출규모가 작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비 소비비중의 변이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총소비 지출규모가 작아서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고소득층의 경우 총소비 지출 규모가 커서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I-3] 가구 특성별 항목별 소비 비중(소득수준)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변이 계수
식료품	30.9	28.3	28.3	26.7	26.2	26.3	26.0	24.5	23.7	22.0	9.7
주거비	6.3	6.9	5.5	4.3	4.2	3.6	3.1	3.1	2.7	2.4	36.9
광열·수도	8.4	7.1	6.4	5.7	5.2	4.9	4.8	4.4	4.0	3.6	27.1
가구집기·가사용품	3.3	3.6	3.8	4.1	4.2	4.2	4.2	4.4	4.4	5.1	11.9
피복 및 신발	2.7	3.8	4.4	4.5	4.8	4.8	5.1	5.2	5.5	6.1	19.8
보건·의료	12.0	8.8	7.0	6.2	5.6	4.8	4.9	4.5	4.5	4.4	38.8
교육	1.9	5.9	6.8	9.9	10.5	11.3	11.9	12.4	13.3	12.1	37.8
교양오락	3.3	3.5	3.8	4.0	4.0	4.0	4.4	4.6	5.0	6.5	20.9
교통 통신	11.4	14.7	16.2	16.9	17.9	18.9	18.1	18.8	18.1	17.5	13.6
기타소비지출	19.7	17.4	17.8	17.7	17.2	17.0	17.6	18.1	18.7	20.3	6.0

소득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22.8%로 측정되어, 총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의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소비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1분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153.4%로 측정되어 경상소득으로 가계소비지출의 2/3정도만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의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소득집단은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2분위까지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위까지이다. 반면 최고소득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총소득기준으로 볼 때 전체 소득의 59.1%, 경상소득 기준으로 볼 때 총소득의 62.0%만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소득수준)

(%)

	1	2	3	4	5	6	7	8	9	10	변이 계수
총소득 기준	122.8	99.0	88.2	86.8	82.5	78.9	73.9	70.2	68.6	59.1	21.7
경상소득 기준	153.4	114.1	99.7	95.5	89.1	84.4	78.8	74.7	72.3	62.0	28.3

(2) 근로자 가구 vs. 비근로자 가구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를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관공서나 회사, 상점 등에 고용되어 정신적 노동(봉급자) 또는 육체적 노동(노무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봉급 또는 노임을 받아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단, 관공서의 장·차관 및 청장급 이상과 법인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이사급 이상 등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가구주는 법인경영자가구로 근로자 가구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이윤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한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월평균 약 212.0만원이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이보다 작은 월평균 약 180.3만원이다.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근로자 가구가 월평균 302.8만원과 282.7만원으로, 근로자 외 가구가 월평균 222.4만원과 206.8만원이다.

항목별 소비 규모를 보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모두에서 식료품 지출과 기타소비지출, 교통 및 통신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그

4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외 근로자 가구의 경우 교육(23.7만원)관련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4만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근로자 외 가구는 교육비(19.1만원)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6.8만원)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7.5만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비교집단이 2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이계수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났다. 총소비의 변이계수가 11.4로 측정되었으며,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변이계수는 21.6과 21.9로 측정되었다. 이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가 소득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비항목별로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교통·통신(20.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5.9), 교육(15.2), 피복과 신발(14.9), 교양·오락(14.7) 등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6.0), 광열·수도(0.7), 보건·의료(3.9) 등은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II-5]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단위: 천원)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변이계수
소비지출	2,120	1,803	11.4
식료품	533	457	10.9
주거비	74	68	6.0
광열·수도	96	97	0.7
가구집기·가사용품	94	75	15.9
피복 및 신발	110	89	14.9
보건·의료	105	111	3.9
교육	237	191	15.2
교양오락	101	82	14.7
교통 통신	390	291	20.6
기타소비지출	381	342	7.6
총소득	3,028	2,224	21.6
경상소득	2,827	2,068	21.9
비경상소득	201	156	17.8

주: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이윤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함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항목별 소비의 총소비 대비 비중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등과 관련된 소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주거비(3.5%)의 비중이 가장 낮은데 비해,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4.2%)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이계수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 항목별로 볼 때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보건·의료(14.0)와 광열·수도(12.9)부문이다. 이는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총소

46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비 지출액 규모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두 항목의 소비지출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두 항목의 소비지출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II-6] 가구특성별 항목 별 소비비중(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단위: %)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변이계수
식료품	25.2	25.3	0.3
주거비	3.5	3.8	5.8
광열·수도	4.5	5.4	12.9
가구집기·가사용품	4.4	4.2	3.3
피복 및 신발	5.2	4.9	4.2
보건·의료	5.0	6.1	14.0
교육	11.2	10.6	3.9
교양오락	4.8	4.6	3.0
교통 통신	18.4	16.2	9.0
기타소비지출	17.9	19.0	4.2

주: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이윤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함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 70.0%, 경상소득 기준 75.0%이고,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 81.1%, 경상소득 기준 87.2%로 측정되었다.

[표 II-7] 가구특성별 평균소비성향(근로자 가구 vs. 근로자외 가구)

(단위: %)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변이계수
총소득	70.0	81.1	10.4
경상소득	75.0	87.2	10.6

주: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을 이유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함

(3) 가구 유형에 따른 분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가구를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등으로 구분한다.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모자가구는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각각 의미한다. 일반가구는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작고, 맞벌이 가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가구는 월평균 77.4만원, 모자가구는 161.2만원, 맞벌이 가구는 268.4만원, 일반가구는 202.7만원이다.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노인가구는 월평균 88.4만원과 74.9만원, 모자가구는 195.8만원과 185.5만원, 맞벌이가구는 410.6만원과 394.6만원, 그리고 일반가구는 264.8만원과 244.8만원이다.

항목별 소비 규모를 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식료품 지출과 기타소비 지출, 교통 및 통신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컸다. 그 외 소비항목의 경우

48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노인가구의 경우 보건·의료(11.2만원)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교육(0.5만원)과 피복 및 신발(2.3만원), 교양·오락(2.5만원) 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모자가구의 경우 교육비(31.8만원)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7.1만원), 교양·오락(7.5만원), 가구 집기 및 가사용품(7.6만원) 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교육비(36.8만원)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4만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마지막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교육비(20.1만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5만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 유형별로 소비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소비의 변이계수가 45.1,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변이계수는 56.3과 59.2로 측정되었다. 이는 가구 유형별로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가 소득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비항목별로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교육(72.3), 교통·통신(66.5) 피복과 신발(53.9), 교양·오락(51.9) 등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19.2) 주거비(22.3), 광열·수도(25.6) 등은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다.

[표 II-8]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가구 유형)

(단위: 천원)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변이계수
소비지출	774	1,612	2,684	2,027	45.1
식료품	223	383	652	514	41.4
주거비	49	87	74	75	22.3
광열·수도	59	86	113	98	25.6
가구집기·가사용품	31	76	124	85	48.3
피복 및 신발	23	96	141	105	53.9
보건·의료	112	71	107	110	19.2
교육	5	318	368	201	72.3
교양·오락	25	75	122	101	51.9
교통·통신	66	209	504	357	66.5
기타소비지출	181	212	481	380	45.3
총소득	884	1,958	4,106	2,648	56.3
경상소득	749	1,855	3,946	2,448	59.2
비경상소득	135	102	160	199	27.4

주: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모자가구는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각각 의미함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비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인가구의 경우 교육비(0.7%)의 지출 비중이 낮은 반면 보건·의료비(14.5%) 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모자가구의 경우 교육비지출(19.7%) 비중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등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이계수는 교육비(72.6)와 보건·의료(70.3)에서 상대적으로 컸으며, 가구집기 와 가사용품(7.8)과 식료품(8.9)에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50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표 II-9] 가구 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가계유형)

(단위: %)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변이계수
식료품	28.8	23.7	24.3	25.3	8.9
주거비	6.3	5.4	2.7	3.7	35.7
광열·수도	7.6	5.3	4.2	4.8	27.2
가구집기·가사용품	4.0	4.7	4.6	4.2	7.8
피복 및 신발	3.0	5.9	5.2	5.2	26.0
보건·의료	14.5	4.4	4.0	5.4	70.3
교육	0.7	19.7	13.7	9.9	72.6
교양오락	3.2	4.6	4.6	5.0	17.6
교통 통신	8.5	13.0	18.8	17.6	32.6
기타소비지출	23.4	13.1	17.9	18.7	22.9

주: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모자가구는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각각 의미함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높았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평균소비성향이 103.3으로 측정되어, 소비에 필요한 경상소득 부족 현상이 관측되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총소득 기준 65.4%, 경상소득 기준 68.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10]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가계유형)

(단위: %)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변이계수
총소득	87.5	82.4	65.4	76.5	12.2
경상소득	103.3	86.9	68.0	82.8	17.0

주: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모자가구는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각각 의미함

(4)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비교

[표 II-11]에서는 가구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구분한 후 각각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하였다. 주택 소유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월평균 약 217.8만원이며, 주택 미소유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이보다 작은 월평균 약 158.7만원이다.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주택 소유가구가 월평균 296.2만원과 275.4만원이며, 주택 미소유 가구가 월평균 214.3만원과 201.6만원이다.

항목별 소비 규모를 살펴보면, 주택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가구 모두에서 식료품과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외의 항목에서는 두 유형의 가구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나 절대액수의 규모에서는 주택소유자 가구(24.8만원)와 주택 미소유자 가구(15.3만원)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주택 소유자와 주택 미소유자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를 측정한 결과, 총소비의 변이계수는 22.2로 측정되었다. 이는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변이계수 22.7과 21.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 근로자 가구 여부, 가구 유형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총소비지출의 변이계수가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변이계수보다 작았던 것과

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득이 감소한 만큼 소비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소비격차가 소득격차보다 작게 나타난다. 그런데 만일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때 가구의 소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소비격차와 소득격차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주택 미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나 평균소비성향은 주택 소유가구와 비슷하고⁵⁾, 그 결과 소비격차와 소득격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미소유자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것은 주택미소유자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중범·전승훈(2006)에 따르면 주택구입은 가계가 저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소비항목별로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교육(33.5), 주거비(17.6), 보건·의료(29.9) 등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광열·수도(17.6), 식료품(18.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8.5) 등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5) [표 II-13]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비슷한 수준이다.

[표 II-11]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구조(주택소유)

(단위: 천원)

	주택소유	주택미소유	변이계수
소비지출	2,178	1,587	22.2
식료품	544	415	18.9
주거비	60	97	32.8
광열·수도	104	81	17.6
가구집기·가사용품	93	70	19.5
피복 및 신발	111	80	23.0
보건·의료	121	79	29.9
교육	248	153	33.5
교양오락	104	69	28.5
교통 통신	381	281	21.3
기타소비지출	412	261	31.7
총소득	2,962	2,143	22.7
경상소득	2,754	2,016	21.9
비경상소득	208	127	34.2

주택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 가구의 항목별 소비의 총소비 대비 비중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단, 주택미소유자의 주거비비중이 6.1%로 주택소유자의 주거비 비중 2.8%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주거비 비중의 변이계수 역시 53.1로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크게 측정되었다.

변이계수로 측정된 주택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가구의 항목별 소비비중의 격차가 큰 소비항목은 교육(11.8), 기타소비지출(9.8) 등이었다. 반면 피복 및 신발(0.8), 교통·통신(1.0) 등은 주택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가구의 소비비중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5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표 II-12] 가구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주택소유)

(단위: %)

	주택소유	주택미소유	변이계수
식료품	25.0	26.2	3.3
주거비	2.8	6.1	53.1
광열·수도	4.8	5.1	4.7
가구집기·가사용품	4.3	4.4	2.8
피복 및 신발	5.1	5.0	0.8
보건·의료	5.6	5.0	7.9
교육	11.4	9.6	11.8
교양오락	4.8	4.4	6.5
교통 통신	17.5	17.7	1.0
기타소비지출	18.9	16.5	9.8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주택소유자와 주택미소유자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미소유자의 소득수준이 주택소유자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자료 분석결과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택 미소유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소비액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평균소비성향 역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주택소유)

(단위: %)

	주택소유	주택미소유	변이계수
총소득	73.5	74.1	0.5
경상소비	79.1	78.7	0.3

(5) 거주 지역에 따른 비교

[표 15]에서는 거주지역을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하였다. 도시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의미하며, 도시 이외 지역은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지역 거주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월평균 약 208.7만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이보다 작은 월평균 약 162.5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근로자 가구가 월평균 282.6만원과 264.1만원으로, 근로자 외 가구가 월평균 223.4만원과 205.9만원으로 측정되었다.

항목별 소비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 거주 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 모두에서 식료품과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관련 소비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외의 항목에서는 두 유형의 가구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나 절대액수의 규모에서는 도시 거주 가구(23.8만원)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14.1만원)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주택 소유자와 주택 미소유자 가구의 소비지출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계수를 측정한 결과, 총소비의 변이계수는 17.6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변이계수 16.6과 17.5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주택 미소유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 이외의 지역 거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⁶⁾ 소득수준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도시 이외의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평균소비성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 이외의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아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도시 거주 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표 II-15]에 소개하였다.

[표 II-14] 가구특성별 소비지출구조(거주지역)

(단위: 천원)

	도시지역	도시 이외 지역	변이계수
소비지출	2,087	1,625	17.6
식료품	525	416	16.3
주거비	76	53	25.1
광열·수도	99	89	7.5
가구집기·가사용품	91	69	18.7
피복 및 신발	108	76	24.9
보건·의료	110	98	7.8
교육	238	141	36.3
교양오락	100	68	27.0
교통 통신	364	296	14.5
기타소비지출	377	318	12.0
총소득	2,826	2,234	16.6
경상소득	2,641	2,059	17.5
비경상소득	185	174	4.3

주: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함

도시지역 거주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의 항목별 소비의 총소비 대비 비중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단, 도시지역의 교육비 비중이 11.4%로 도시 외 지역의 8.7%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교육비 비중의 변이계수는 19.3으로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

변이계수로 측정된 도시지역 거주 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의 항목별 소비비중의 격차가 큰 소비항목은 광열·수도(10.1), 보건·의료(9.8), 교양·오락(9.6) 등이었다. 반면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1), 식료품(1.3) 등은 도시지역 거주 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의 소비비중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15] 가구특성별 항목별 소비비중(거주지역)

(단위: %)

	도시지역	도시 이외 지역	변이계수
식료품	25.1	25.6	1.3
주거비	3.7	3.3	7.6
광열·수도	4.7	5.5	10.1
가구집기·가사용품	4.3	4.3	1.1
피복 및 신발	5.2	4.7	7.5
보건·의료	5.3	6.1	9.8
교육	11.4	8.7	19.3
교양오락	4.8	4.2	9.6
교통 통신	17.4	18.2	3.2
기타소비지출	18.1	19.6	5.7

주: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도시지역 거주 가구와 도시 이외 지역 거주 가구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지역 거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 73.8%, 경상소득 기준 79.0%이고, 도시 이외 지역 거주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 72.7%, 경상소득 기준 78.9%이다.

[표 II-16] 가구 특성별 평균소비성향(거주지역)

(단위: %)

	도시지역	도시 이외 지역	변이계수
총소득 기준	73.8	72.7	1.1
경상소득 기준	79.0	78.9	0.1

주: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함

3. 가구 소비구조의 변화: 1982~2007년

제 3절에서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행태와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구조 변화행태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82~2007년 기간 중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까지는 1인가구가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2002년 이전에는 도시 이외의 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조사의 경우 2002년까지는 근로자 가구만의 가구소득을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가.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총소비지출은 1982년 24.8만원에서 2007년 242.4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하였다. 1982~2007년 기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982~1990년 기간 중에 소비지출은 연평균 13.3% 증가하였으며, 199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간까지는 연평균 11.6% 증가하였다. 이후 1997~2000년 기간 중에는 소비지출이 연평균 3.7%, 2000~2007년 기간 중에는 소비지출이 연평균 6.0% 증가하였다.

이상을 통해 우선 소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제 충격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8]은 가구 평균소비성향의 변화추이이다. 총소득 기준 평균비성향은 1982년 76.8%에서 2007년 70.1%로 연평균 0.4% 감소하였으며,

경상소득 기준 평균소비성향은 1982년 78.7%에서 2007년 74.1%로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1982~2007년 기간 중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은 총소득과 경상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2~2007년 기간 중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9.6%보다 높은 10.0%와 9.8%였다.

한편 1997~2000년 기간 동안에는 소비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이 3.7%로 총소득 및 경상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1.6%와 0.5%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중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으로는 연평균 2.1%,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표 II-17] 가구 소득 및 소비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10억원, %)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소비지출	GDP
1982	322	315	8	248	557
1983	349	341	8	263	656
1984	396	387	9	289	751
1985	403	393	10	308	841
1986	453	437	15	340	981
1987	542	520	22	386	1,152
1988	596	572	24	420	1,371
1989	772	729	43	578	1,548
1990	916	859	57	670	1,867
1991	1,123	1,050	73	805	2,260
1992	1,298	1,209	88	921	2,575
1993	1,475	1,382	92	1,065	2,907
1994	1,589	1,477	112	1,106	3,402
1995	1,786	1,681	105	1,224	3,988
1996	2,008	1,876	131	1,399	4,486
1997	2,142	2,004	139	1,443	4,911
1998	1,966	1,813	153	1,285	4,841
1999	2,005	1,857	147	1,442	5,295
2000	2,249	2,032	217	1,611	5,787
2001	2,417	2,229	188	1,747	6,221
2002	2,581	2,405	176	1,813	6,843
2003	2,769	2,626	143	1,977	7,247
2004	2,951	2,809	142	2,089	7,794
2005	3,064	2,929	135	2,177	8,105
2006	3,247	3,119	129	2,315	8,480
2007	3,457	3,273	184	2,424	9,012
연평균증가율(82~07)	10.0	9.8	13.5	9.6	11.8
연평균증가율(82~90)	14.0	13.4	28.5	13.3	16.3
연평균증가율(90~97)	12.9	12.9	13.5	11.6	14.8
연평균증가율(97~00)	1.6	0.5	16.0	3.7	5.6
연평균증가율(00~07)	6.3	7.0	-2.3	6.0	6.5

[표 II-18]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단위: %)

	총소득	경상소득
1982	76.8	78.7
1983	75.5	77.2
1984	72.9	74.6
1985	76.5	78.4
1986	75.2	77.8
1987	71.3	74.3
1988	70.6	73.5
1989	74.9	79.3
1990	73.2	78.0
1991	71.7	76.7
1992	71.0	76.2
1993	72.2	77.0
1994	69.6	74.8
1995	68.6	72.8
1996	69.7	74.6
1997	67.3	72.0
1998	65.4	70.9
1999	71.9	77.6
2000	71.7	79.3
2001	72.3	78.4
2002	70.2	75.4
2003	71.4	75.3
2004	70.8	74.4
2005	71.0	74.3
2006	71.3	74.2
2007	70.1	74.1
연평균증가율 (82~07)	-0.4	-0.2
연평균증가율 (82~90)	-0.6	-0.1
연평균증가율 (90~97)	-1.2	-1.1
연평균증가율 (97~00)	2.1	3.3
연평균증가율 (00~07)	-0.3	-1.0

나. 가계 소비항목 구성의 변화

1982~2007년 기간 중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0개 가계소비 항목의 총소비 대비 비중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0대 소비항목 중에서 총소비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교통·통신부문으로 1982년 6.6%이던 비중이 2007년 18.3%로 연평균 4.2%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출이 1982년 7.2%에서 2007년 12.1%로 연평균 2.1% 증가하였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항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 지출 비중은 1982년 7.8%에서 2007년 4.3%로 지출비중이 연평균 2.4% 감소하였으며,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역시 1982년 40.7%에서 2007년 25.0%로 연평균 1.9% 감소하였다. 피복 및 신발 지출 비중 역시 1982년 8.1%에서 2007년 5.3%로 연평균 1.7% 감소하였으며, 주거비 역시 1982년 3.8%에서 2007년 3.2%로 연평균 0.6% 증가하였다.

[표 II-20]~[표 II-29]은 소득 분위별로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위에서 교통·통신관련 지출 비중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식료품, 피복 및 신발, 광열·수도 분야 지출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교육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분위에서는 0.6%, 2분위에서는 2.4%, 3분위에서는 1.6%, 4분위에서는 2.9%, 5분위에서는 3.3%, 6분위에서는 2.9%, 7분위에서는 3.6%, 8분위에서는 1.9%, 9분위에서는 1.8%, 그리고 10분위에서는 1.2%였다. 분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교육비 지출 역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19] 항목별 소비비중의 변화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0.7	3.8	7.8	4.3	8.1	5.9	7.2	3.7	6.6	11.8
1983	39.5	4.4	7.5	4.6	8.2	5.8	7.4	3.8	6.4	12.4
1984	39.1	4.7	7.5	4.5	7.7	5.2	6.7	3.8	6.3	14.5
1985	38.3	4.0	7.8	4.8	7.3	5.1	7.7	3.5	6.5	15.0
1986	36.4	4.4	7.0	5.3	7.4	5.5	8.1	3.9	6.6	15.5
1987	35.6	4.2	6.2	5.3	7.3	5.6	7.8	4.2	6.9	16.8
1988	34.7	4.2	5.2	5.2	8.0	5.5	7.9	4.4	7.3	17.5
1989	32.3	3.8	4.6	5.7	8.5	5.3	8.1	4.8	8.4	18.5
1990	32.7	4.2	4.5	5.5	8.2	4.8	8.3	4.6	9.0	18.3
1991	32.0	4.1	4.1	5.7	7.9	5.0	8.5	5.0	9.1	18.6
1992	30.6	4.3	4.1	5.2	7.8	5.0	9.0	5.0	9.1	19.9
1993	30.6	3.8	4.3	4.0	7.9	5.1	10.1	4.9	10.8	18.4
1994	29.7	3.6	4.1	4.7	7.5	4.6	9.1	5.1	12.2	19.3
1995	28.8	3.3	4.2	4.6	8.0	4.6	9.8	5.2	11.8	19.8
1996	28.2	3.4	4.3	4.3	7.6	4.5	10.3	5.0	12.6	19.9
1997	28.4	3.2	4.8	4.0	6.8	4.5	10.8	5.0	13.3	19.3
1998	27.4	3.3	5.6	3.9	5.5	4.5	11.1	4.4	14.6	19.6
1999	27.5	3.1	5.1	3.7	5.5	4.5	11.0	4.7	16.2	18.7
2000	27.3	3.2	5.2	3.5	5.8	4.3	11.0	5.2	16.3	18.2
2001	26.1	3.2	5.1	4.0	5.7	4.3	11.1	4.8	17.1	18.5
2002	26.2	3.0	4.9	4.0	5.7	4.4	11.2	4.6	17.2	18.7
2003	26.4	2.9	4.6	3.9	5.7	4.6	12.0	4.9	17.4	17.5
2004	26.8	2.9	4.5	4.0	5.3	4.4	11.9	4.8	18.0	17.4
2005	26.3	2.9	4.6	4.5	5.4	4.7	11.8	4.9	17.7	17.2
2006	25.6	3.2	4.5	4.5	5.4	4.6	11.7	4.9	18.1	17.5
2007	25.0	3.2	4.3	4.6	5.3	4.7	12.1	5.0	18.3	17.6
연평균증가율 (82~07)	-1.9	-0.6	-2.4	0.2	-1.7	-0.9	2.1	1.2	4.2	1.6
연평균증가율 (82~90)	-2.7	1.2	-6.7	3.1	0.1	-2.5	1.7	2.5	3.9	5.7
연평균증가율 (90~97)	-2.0	-3.8	0.8	-4.6	-2.7	-1.1	3.9	1.4	5.8	0.7
연평균증가율 (97~00)	-1.4	0.0	3.2	-4.0	-4.9	-1.5	0.6	1.5	6.9	-1.9
연평균증가율 (00~07)	-1.3	0.2	-2.7	3.7	-1.2	1.3	1.5	-0.8	1.6	-0.5

6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표 II-20]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1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6.9	5.9	9.8	3.1	6.4	6.2	5.9	1.9	6.0	8.0
1983	45.7	6.4	9.8	3.0	7.3	5.4	6.4	2.4	5.8	7.8
1984	42.8	9.3	8.9	3.1	6.1	4.8	5.4	2.1	6.2	11.3
1985	41.0	4.9	9.2	3.6	6.9	4.1	9.6	3.5	7.3	9.9
1986	38.4	7.5	7.8	4.0	7.6	6.2	8.5	3.1	7.5	9.4
1987	39.5	8.0	7.8	5.3	6.0	5.5	6.8	2.3	6.6	12.4
1988	39.3	6.9	6.3	4.5	6.8	6.4	6.7	2.9	7.2	13.0
1989	37.3	6.4	6.2	5.3	6.9	6.4	7.8	3.0	6.6	14.0
1990	38.6	5.1	5.9	4.9	7.7	5.2	7.8	3.0	6.3	15.5
1991	38.1	6.2	5.7	4.8	7.1	5.4	6.4	3.7	7.3	15.4
1992	36.0	6.4	5.9	3.7	6.9	5.9	9.0	3.8	7.7	14.7
1993	31.6	3.9	4.8	9.4	10.0	4.5	7.4	6.8	5.0	16.5
1994	33.8	6.3	5.5	4.9	6.7	5.3	8.3	4.3	7.9	17.0
1995	34.0	5.6	6.4	4.5	7.2	5.4	8.0	4.1	8.5	16.2
1996	33.8	5.6	6.5	3.8	6.2	6.0	9.2	3.8	8.8	16.3
1997	33.4	5.4	7.2	3.9	6.0	6.4	8.5	3.7	9.4	16.0
1998	30.4	6.2	8.1	3.4	4.5	5.7	8.8	3.4	12.2	17.4
1999	30.8	4.5	7.5	3.0	4.7	7.2	8.1	3.5	12.1	18.6
2000	31.9	4.5	8.3	3.1	4.4	6.1	8.3	3.7	13.3	16.4
2001	30.1	5.4	7.3	3.7	4.5	5.7	8.2	3.3	15.2	16.7
2002	31.2	5.2	7.7	3.1	5.0	6.0	8.7	3.2	14.6	15.4
2003	30.5	5.1	6.6	3.4	4.4	6.1	8.8	3.7	15.1	16.3
2004	31.2	4.8	6.5	3.3	4.2	5.4	8.0	3.3	17.4	15.8
2005	30.6	4.4	6.9	3.4	4.1	5.4	9.6	2.6	18.5	14.6
2006	29.1	5.6	6.5	3.7	4.2	5.8	7.4	3.4	15.5	18.8
2007	28.7	6.2	6.4	3.9	4.4	6.8	6.7	3.8	16.9	16.3
연평균증가율 (82~07)	-1.9	0.2	-1.7	0.8	-1.4	0.3	0.6	2.9	4.2	2.9
연평균증가율 (82~90)	-2.4	-1.9	-6.2	5.8	2.4	-2.2	3.6	6.1	0.7	8.7
연평균증가율 (90~97)	-2.0	0.9	3.0	-3.5	-3.4	3.0	1.2	3.2	5.8	0.4
연평균증가율 (97~00)	-1.5	-6.4	4.8	-7.3	-10.3	-1.6	-0.6	-0.4	12.3	0.9
연평균증가율 (00~07)	-1.5	4.8	-3.7	3.3	0.2	1.4	-3.0	0.6	3.4	-0.2

[표 II-21]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2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5.5	5.7	8.9	3.1	7.3	6.5	6.0	2.6	6.3	8.1
1983	44.4	6.3	8.4	4.1	8.6	6.1	4.6	2.3	5.8	9.4
1984	41.7	6.0	8.4	4.5	7.9	5.3	5.0	3.5	5.6	12.1
1985	44.3	7.7	8.6	3.8	6.9	5.2	4.2	2.4	6.8	10.1
1986	40.7	5.4	7.9	4.3	6.7	5.8	8.4	2.3	6.4	12.1
1987	39.1	5.5	7.4	4.8	6.7	5.6	7.6	2.3	7.9	13.1
1988	38.8	6.7	6.1	5.3	7.1	5.3	5.2	3.6	7.2	14.7
1989	36.9	4.9	5.7	5.5	8.0	6.3	6.6	4.1	6.9	15.2
1990	38.2	5.3	5.8	4.8	7.5	5.5	6.3	4.1	6.5	15.9
1991	35.5	6.2	5.0	5.3	7.9	5.3	7.2	4.1	8.1	15.4
1992	32.7	5.8	4.9	5.3	7.6	5.6	7.4	4.4	7.7	18.6
1993	32.6	7.2	5.4	3.0	6.9	4.7	9.8	3.6	6.1	20.7
1994	33.6	4.5	5.2	4.2	7.3	5.6	7.7	4.7	9.7	17.5
1995	31.4	4.6	5.2	4.7	7.8	5.7	8.8	4.3	9.8	17.8
1996	31.5	5.0	5.6	3.3	7.2	5.5	8.9	4.3	10.7	17.9
1997	31.7	4.0	6.2	3.3	6.2	5.7	10.6	3.8	11.6	16.8
1998	30.0	4.4	7.2	3.5	4.8	5.1	8.7	3.5	13.7	19.1
1999	30.1	4.1	6.8	3.1	5.0	5.3	9.9	4.1	15.0	16.5
2000	30.5	4.0	6.8	3.1	5.1	4.9	9.3	4.5	14.5	17.3
2001	28.5	3.8	6.4	3.8	5.3	4.9	9.6	4.3	16.2	17.2
2002	29.8	3.4	6.5	3.0	5.0	5.3	9.2	3.5	17.4	16.7
2003	30.3	3.7	6.1	3.2	5.0	5.2	9.9	4.0	17.3	15.4
2004	30.7	4.0	5.8	3.7	4.5	4.7	9.5	3.6	17.9	15.5
2005	29.2	5.2	5.9	4.2	4.4	5.2	9.2	3.6	17.7	15.5
2006	29.7	4.8	5.9	4.1	4.2	5.4	9.3	3.4	17.5	15.6
2007	27.9	4.3	5.9	4.1	4.8	4.4	10.8	3.6	17.8	16.3
연평균증가율 (82~07)	-1.9	-1.1	-1.6	1.1	-1.7	-1.6	2.4	1.2	4.3	2.8
연평균증가율 (82~90)	-2.2	-0.8	-5.2	5.5	0.3	-1.9	0.6	5.6	0.5	8.7
연평균증가율 (90~97)	-2.6	-3.9	0.9	-5.1	-2.7	0.5	7.6	-1.0	8.6	0.8
연평균증가율 (97~00)	-1.3	-0.1	2.9	-1.6	-6.1	-5.2	-4.5	5.6	7.8	1.0
연평균증가율 (00~07)	-1.3	1.1	-1.9	3.9	-0.9	-1.6	2.3	-3.1	2.9	-0.8

[표 II-22]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3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4.1	4.9	8.6	3.9	7.3	5.2	6.3	2.7	6.9	10.2
1983	43.4	6.1	8.7	3.8	7.4	7.5	4.8	2.7	6.0	9.7
1984	44.1	5.4	7.9	3.7	7.5	5.8	7.3	2.5	5.6	10.2
1985	42.3	5.2	8.8	3.6	6.3	4.9	4.9	2.8	7.3	13.7
1986	42.8	5.6	8.0	5.4	7.2	6.1	5.9	2.1	5.7	11.2
1987	39.3	6.8	6.7	4.7	6.9	6.3	5.5	3.2	6.7	13.8
1988	39.1	5.4	5.8	5.0	7.7	5.4	6.6	3.2	6.7	15.1
1989	35.4	4.4	5.5	5.5	8.4	5.5	6.6	4.3	7.1	17.4
1990	36.0	5.8	5.0	5.6	7.9	5.1	7.0	4.2	6.9	16.5
1991	34.9	4.1	4.7	5.5	8.1	5.8	7.9	4.6	6.8	17.6
1992	34.8	4.0	4.9	4.5	7.4	5.1	7.2	5.0	8.3	18.8
1993	32.8	7.8	4.4	4.1	6.4	5.8	5.7	5.0	6.0	22.0
1994	32.1	4.3	4.8	5.3	7.4	4.6	7.4	5.2	10.2	18.6
1995	31.0	3.9	4.8	4.0	7.7	5.3	8.5	4.5	12.3	18.1
1996	31.1	3.9	5.3	3.8	7.0	5.0	10.1	4.4	11.3	18.1
1997	31.0	4.7	5.7	3.9	6.4	4.9	9.2	4.4	11.5	18.3
1998	29.9	3.5	7.0	3.3	5.8	5.4	9.0	3.8	13.8	18.5
1999	30.2	3.7	6.2	3.3	4.6	5.3	9.5	4.0	16.4	16.9
2000	29.8	4.3	6.4	2.8	5.2	5.0	10.0	4.8	15.5	16.3
2001	28.9	3.6	6.1	3.5	5.1	4.7	10.0	4.4	16.7	17.0
2002	29.0	3.8	5.9	3.0	5.0	5.4	9.1	4.0	16.8	18.0
2003	28.1	3.3	5.2	4.1	5.2	5.2	9.6	4.6	17.2	17.5
2004	29.1	4.0	5.5	4.1	4.7	4.6	10.9	3.9	18.3	14.8
2005	28.5	3.5	5.5	4.3	4.7	5.1	9.2	4.4	19.3	15.7
2006	28.1	3.9	5.5	4.4	4.6	4.7	8.4	4.0	20.9	15.4
2007	27.2	4.2	5.2	4.4	4.8	4.9	9.3	3.8	18.9	17.3
연평균증가율 (82~07)	-1.9	-0.6	-2.0	0.5	-1.7	-0.3	1.6	1.5	4.1	2.1
연평균증가율 (82~90)	-2.5	2.2	-6.6	4.6	0.9	-0.1	1.4	5.9	0.0	6.2
연평균증가율 (90~97)	-2.1	-2.9	2.0	-5.1	-2.8	-0.7	4.0	0.6	7.7	1.4
연평균증가율 (97~00)	-1.3	-3.2	3.8	-10.0	-7.0	0.9	2.8	3.0	10.3	-3.8
연평균증가율 (00~07)	-1.3	-0.2	-3.0	6.6	-1.0	-0.5	-1.1	-3.1	2.9	0.8

[표 II-23]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4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5.2	4.5	8.0	4.4	7.5	5.8	5.1	2.3	6.6	10.5
1983	43.8	5.0	8.0	3.7	8.2	6.3	5.6	3.1	5.8	10.5
1984	43.0	4.1	7.9	5.0	7.9	5.7	5.6	3.6	6.2	11.0
1985	43.0	5.1	7.7	4.3	7.2	5.4	3.6	2.9	6.7	14.1
1986	39.6	3.9	7.3	3.8	8.1	5.7	7.5	3.3	7.4	13.5
1987	37.6	6.9	6.3	6.2	6.9	6.3	4.9	3.4	6.5	15.0
1988	39.4	5.2	5.9	5.2	7.5	5.3	5.4	3.9	6.7	15.5
1989	34.9	4.2	5.0	5.1	8.7	5.6	7.2	4.9	6.9	17.5
1990	33.8	5.1	4.8	5.4	7.8	4.8	7.4	4.0	10.0	17.0
1991	34.6	3.7	4.5	5.5	7.9	5.8	8.1	4.6	7.2	18.1
1992	33.6	3.6	4.6	5.0	8.0	5.7	7.9	4.2	8.4	19.0
1993	33.6	1.6	4.8	5.5	8.6	6.8	11.8	5.2	6.8	15.2
1994	32.1	4.9	4.7	5.0	7.3	5.1	7.9	4.7	9.9	18.4
1995	30.9	4.0	4.7	4.4	7.8	5.0	8.5	4.4	12.0	18.4
1996	29.2	2.9	4.8	4.6	7.5	5.2	9.3	4.8	11.9	19.8
1997	30.5	2.8	5.4	3.4	6.1	5.0	9.9	4.7	13.0	19.3
1998	29.4	3.0	6.1	4.3	5.4	4.8	8.6	4.0	15.8	18.6
1999	30.0	3.4	5.7	3.2	5.2	4.7	10.1	4.2	15.2	18.3
2000	29.5	3.0	5.9	3.6	5.5	4.9	10.3	4.4	16.4	16.4
2001	29.0	3.4	5.8	3.3	5.3	5.0	9.9	4.3	16.6	17.6
2002	27.5	3.4	5.3	3.4	5.2	4.6	10.7	4.3	19.1	16.6
2003	28.0	3.0	5.2	3.5	5.1	4.9	10.7	4.1	18.8	16.7
2004	28.0	3.3	5.1	3.5	4.7	4.5	11.3	4.3	18.7	16.6
2005	27.5	3.0	5.1	4.4	4.9	5.3	10.3	4.2	19.0	16.3
2006	27.9	3.3	5.0	4.5	5.1	4.8	11.6	4.6	17.6	15.6
2007	27.3	3.9	4.7	5.1	4.7	4.3	10.5	4.0	19.7	15.9
연평균증가율 (82~07)	-2.0	-0.6	-2.1	0.6	-1.9	-1.2	2.9	2.2	4.5	1.7
연평균증가율 (82~90)	-3.6	1.6	-6.2	2.5	0.4	-2.3	4.7	6.9	5.4	6.1
연평균증가율 (90~97)	-1.5	-8.2	1.7	-6.1	-3.6	0.5	4.3	2.4	3.8	1.8
연평균증가율 (97~00)	-1.0	2.3	3.0	1.5	-2.9	-0.3	1.2	-2.4	8.2	-5.2
연평균증가율 (00~07)	-1.1	3.8	-3.2	5.0	-2.5	-1.9	0.2	-1.2	2.6	-0.5

[표 II-24]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5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4.5	2.6	8.4	4.8	7.7	6.8	5.4	3.4	6.6	9.8
1983	42.4	4.5	7.8	4.5	7.8	6.0	6.4	2.9	6.6	10.9
1984	41.4	3.7	7.5	3.9	8.1	6.0	6.4	2.8	7.0	13.1
1985	41.6	4.1	8.2	5.0	6.2	6.1	6.0	2.6	6.7	13.6
1986	39.1	3.5	8.3	4.9	8.4	4.9	6.4	3.4	7.0	14.0
1987	37.6	3.5	6.7	6.2	7.4	6.2	6.7	3.1	6.1	16.6
1988	36.8	4.1	5.6	5.1	8.3	5.5	6.9	3.6	7.3	16.9
1989	35.1	3.9	5.1	5.8	8.5	5.2	7.1	4.7	6.3	18.4
1990	35.8	3.7	5.0	5.1	8.4	5.2	7.1	4.1	6.8	18.9
1991	34.6	4.3	4.4	5.4	8.0	5.3	7.4	5.8	7.3	17.5
1992	31.7	4.2	4.5	5.1	7.3	5.2	9.0	4.9	9.6	18.4
1993	29.0	3.4	4.1	4.3	7.7	3.7	8.8	5.2	18.5	15.2
1994	32.1	2.7	4.5	5.1	7.7	5.3	8.9	5.1	10.5	18.2
1995	29.9	3.5	4.5	4.5	8.0	4.6	9.5	5.4	10.8	19.2
1996	29.3	3.8	4.4	4.6	7.2	4.2	8.5	5.0	13.1	20.0
1997	30.2	3.0	5.1	3.8	6.7	4.4	10.9	4.6	12.7	18.7
1998	28.9	3.1	5.9	3.7	5.2	4.9	11.1	4.7	14.7	17.7
1999	30.0	3.1	5.4	3.5	5.5	4.4	10.7	4.5	15.6	17.3
2000	29.1	3.1	5.4	3.2	5.5	4.4	10.1	5.1	16.8	17.3
2001	27.2	3.5	5.2	3.8	5.8	4.5	9.5	5.0	16.9	18.5
2002	28.4	3.3	5.2	3.6	5.4	4.2	10.8	4.3	16.6	18.1
2003	26.9	3.1	4.9	3.3	5.5	5.0	11.3	4.9	17.9	17.3
2004	28.4	2.7	4.8	3.7	5.3	4.1	10.7	4.2	18.7	17.6
2005	26.9	3.1	4.8	4.7	4.9	5.0	12.0	4.2	16.9	17.5
2006	26.3	2.9	4.7	3.8	5.1	4.6	11.8	4.2	19.0	17.6
2007	27.0	2.9	4.8	4.5	4.9	5.6	12.2	4.2	17.2	16.7
연평균증가율 (82~07)	-2.0	0.6	-2.2	-0.3	-1.7	-0.8	3.3	0.8	3.9	2.2
연평균증가율 (82~90)	-2.7	4.7	-6.2	0.7	1.1	-3.3	3.5	2.2	0.4	8.6
연평균증가율 (90~97)	-2.4	-2.9	0.2	-4.3	-3.0	-2.6	6.2	1.7	9.4	-0.2
연평균증가율 (97~00)	-1.3	1.3	1.9	-4.9	-6.6	0.5	-2.4	3.2	9.7	-2.5
연평균증가율 (00~07)	-1.1	-0.8	-1.7	4.9	-1.5	3.5	2.8	-2.8	0.4	-0.6

[표 II-25]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6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3.7	4.0	8.3	3.8	8.2	5.9	5.8	2.9	6.6	10.8
1983	42.0	3.8	7.4	4.2	7.4	5.3	8.0	3.4	6.6	11.9
1984	43.6	4.2	8.3	3.2	7.6	5.4	4.1	3.8	7.1	12.7
1985	42.5	4.0	7.7	5.1	7.0	6.2	5.6	3.1	6.4	12.4
1986	37.9	4.9	7.7	4.4	6.4	6.1	7.5	3.6	6.6	14.9
1987	35.7	3.8	6.4	6.2	7.0	6.2	7.9	3.9	6.5	16.3
1988	35.4	4.3	5.6	5.1	8.2	5.8	7.5	4.1	6.9	17.2
1989	32.4	3.8	4.7	5.6	8.3	5.4	7.5	4.6	9.0	18.7
1990	33.6	4.0	4.6	5.9	8.5	4.7	8.2	4.5	8.0	18.0
1991	32.3	3.7	4.3	5.2	8.0	5.8	8.8	4.8	8.9	18.2
1992	31.3	3.9	4.2	5.2	8.5	5.1	8.3	4.9	9.6	18.9
1993	30.3	1.8	4.5	3.5	7.2	6.4	13.8	4.8	10.2	17.5
1994	30.2	3.6	4.2	4.2	7.1	4.8	8.6	4.7	13.0	19.6
1995	29.6	3.1	4.3	4.9	8.0	4.1	9.4	5.3	11.8	19.5
1996	28.9	2.9	4.2	4.4	7.9	4.4	10.0	5.2	13.5	18.6
1997	29.5	3.0	4.8	3.9	7.0	4.5	10.1	5.2	13.1	18.8
1998	28.2	2.7	5.6	3.7	5.0	4.6	10.8	4.2	15.6	19.5
1999	28.2	2.7	5.0	3.8	6.0	4.6	10.8	4.7	16.2	18.1
2000	28.4	2.6	5.0	3.6	5.9	4.4	10.2	5.2	16.7	17.9
2001	27.0	3.1	5.1	3.4	5.3	4.3	11.3	4.6	17.8	18.1
2002	26.7	2.5	4.9	3.7	5.6	4.5	11.4	4.8	17.9	18.0
2003	27.6	2.7	4.8	3.8	5.6	4.1	12.0	4.7	17.6	17.1
2004	27.8	2.5	4.7	3.9	5.3	4.4	12.1	4.5	17.3	17.5
2005	27.6	2.8	4.5	4.6	5.1	4.8	11.8	4.8	18.1	15.9
2006	25.5	2.8	4.5	5.1	5.1	4.1	12.3	4.7	19.3	16.6
2007	25.3	3.7	4.3	4.4	5.4	4.8	12.0	4.8	18.2	17.1
연평균증가율 (82~07)	-2.2	-0.4	-2.6	0.6	-1.6	-0.9	2.9	2.1	4.1	1.9
연평균증가율 (82~90)	-3.2	-0.2	-7.2	5.9	0.5	-2.8	4.5	5.6	2.3	6.7
연평균증가율 (90~97)	-1.8	-3.9	0.7	-5.8	-2.7	-0.6	2.9	2.1	7.4	0.6
연평균증가율 (97~00)	-1.3	-4.2	1.4	-2.7	-5.6	-0.8	0.6	0.2	8.2	-1.7
연평균증가율 (00~07)	-1.6	4.8	-2.2	2.9	-1.2	1.0	2.3	-1.1	1.3	-0.6

[표 II-26]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7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41.7	3.0	7.5	3.9	8.1	7.2	5.5	3.9	6.8	12.4
1983	41.6	4.4	7.6	3.4	8.0	5.6	6.8	3.2	6.8	12.6
1984	40.0	4.5	7.5	5.4	8.9	4.3	4.0	4.1	6.5	14.8
1985	40.4	2.8	7.7	5.2	7.7	5.2	5.9	3.6	7.3	14.3
1986	38.2	4.5	6.7	6.4	7.5	5.1	5.4	4.7	5.8	15.6
1987	35.0	3.0	6.5	5.2	7.0	6.4	8.8	4.4	6.9	16.8
1988	36.6	2.8	5.7	4.6	8.8	5.7	8.4	4.0	7.1	16.3
1989	32.7	3.0	4.7	6.1	8.6	5.4	8.1	5.0	7.8	18.7
1990	33.3	3.9	4.4	5.5	8.0	5.1	9.4	4.3	8.9	17.3
1991	32.7	5.0	3.9	5.6	7.4	4.9	9.2	5.0	8.8	17.5
1992	31.0	3.7	4.2	4.6	7.6	5.0	9.7	4.9	9.2	20.2
1993	24.4	2.9	3.2	2.7	7.7	4.0	8.7	3.7	21.1	21.6
1994	28.7	2.7	3.8	4.9	7.6	4.2	8.9	5.0	15.0	19.1
1995	28.4	3.2	4.1	4.7	7.7	5.0	10.3	5.3	11.2	20.1
1996	27.4	3.1	4.1	4.5	7.5	4.1	11.4	4.9	13.2	19.8
1997	28.2	2.6	4.4	4.4	6.7	4.2	10.6	5.4	14.1	19.3
1998	27.9	2.9	5.5	3.6	5.4	4.9	11.1	4.5	14.8	19.4
1999	27.4	2.5	4.7	3.6	5.4	4.4	10.1	5.4	17.5	18.8
2000	27.6	3.4	5.0	3.4	5.5	4.0	11.5	5.2	16.9	17.5
2001	26.1	2.8	4.9	4.0	5.9	3.8	11.3	4.7	19.0	17.6
2002	25.7	2.6	4.6	3.5	5.4	3.9	12.6	4.8	18.1	18.8
2003	26.3	2.5	4.4	4.0	5.7	4.3	12.2	4.8	18.2	17.7
2004	26.6	2.7	4.3	4.5	5.5	4.6	12.3	5.0	17.7	16.9
2005	26.6	2.5	4.5	4.8	5.6	4.6	12.7	4.9	17.4	16.4
2006	25.2	2.8	4.3	5.0	5.3	4.1	12.9	4.9	18.1	17.3
2007	24.1	2.8	3.9	4.6	5.4	4.4	13.4	5.3	18.8	17.3
연평균증가율 (82~07)	-2.2	-0.4	-2.6	0.6	-1.6	-1.9	3.6	1.2	4.2	1.3
연평균증가율 (82~90)	-2.8	3.2	-6.5	4.2	-0.1	-4.3	6.9	1.3	3.5	4.3
연평균증가율 (90~97)	-2.3	-5.4	0.0	-3.1	-2.4	-2.7	1.8	3.3	6.8	1.6
연평균증가율 (97~00)	-0.7	8.7	4.6	-8.5	-6.4	-1.5	2.8	-1.3	6.2	-3.2
연평균증가율 (00~07)	-1.9	-2.8	-3.4	4.5	-0.4	1.4	2.2	0.1	1.6	-0.2

[표 II-27]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8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39.3	3.6	7.1	3.9	9.1	5.2	8.9	3.9	6.9	12.1
1983	39.5	3.7	7.5	4.2	8.3	5.1	9.2	3.7	7.1	11.8
1984	38.5	4.9	6.8	3.6	7.0	6.0	6.0	4.3	6.8	16.1
1985	35.6	2.4	7.3	4.7	6.7	6.0	9.7	3.7	6.4	17.5
1986	37.0	4.4	6.8	4.1	7.6	4.9	8.6	3.7	6.9	15.9
1987	36.3	3.3	6.4	5.6	7.0	5.8	6.7	4.3	6.6	18.1
1988	34.9	3.7	5.2	5.8	8.0	5.1	7.5	5.7	6.9	17.3
1989	31.8	2.9	4.5	5.8	9.1	5.6	8.1	4.7	7.8	19.7
1990	31.4	4.9	4.2	5.2	8.1	5.0	8.5	4.6	9.4	18.6
1991	31.2	4.4	3.9	6.2	8.0	4.7	8.9	5.1	8.7	19.0
1992	29.8	4.1	3.9	5.5	7.5	4.8	10.5	5.4	8.1	20.6
1993	31.9	3.6	4.6	2.4	4.6	6.7	13.5	4.2	13.9	14.7
1994	29.1	2.4	3.8	4.3	7.8	4.0	11.0	4.8	12.6	20.1
1995	27.4	2.3	3.7	4.5	8.0	3.6	11.6	5.4	13.4	20.2
1996	27.7	2.9	4.1	4.0	7.6	4.2	11.8	5.2	12.3	20.2
1997	26.9	2.5	4.4	4.0	6.7	3.8	12.6	5.5	14.4	19.3
1998	26.6	2.8	5.2	3.6	5.5	4.3	12.3	4.5	14.9	20.3
1999	27.2	2.5	4.7	3.8	5.6	4.3	11.9	5.1	16.1	18.8
2000	26.0	2.7	4.7	3.4	5.9	3.8	12.8	5.2	16.8	18.5
2001	26.0	3.0	4.7	4.0	5.7	3.9	13.0	5.0	16.8	18.0
2002	25.3	2.9	4.4	4.1	5.6	4.3	12.1	5.0	17.2	19.2
2003	25.6	2.7	4.1	4.7	6.0	3.9	13.4	5.0	17.1	17.5
2004	26.1	2.3	4.0	4.0	5.6	4.1	12.4	4.8	19.1	17.4
2005	25.1	2.3	4.0	4.7	5.5	4.5	13.2	4.9	17.5	18.3
2006	24.6	3.2	3.9	4.8	6.0	4.1	13.1	5.0	18.5	16.8
2007	23.9	2.9	3.8	4.1	5.2	4.3	14.2	5.1	18.6	17.8
연평균증가율 (82~07)	-2.0	-0.9	-2.5	0.3	-2.2	-0.7	1.9	1.1	4.1	1.5
연평균증가율 (82~90)	-2.8	3.9	-6.3	3.6	-1.4	-0.5	-0.5	2.2	3.9	5.5
연평균증가율 (90~97)	-2.2	-9.2	0.6	-3.5	-2.8	-3.8	5.7	2.3	6.3	0.5
연평균증가율 (97~00)	-1.0	3.3	2.1	-5.1	-3.7	-0.3	0.6	-1.3	5.3	-1.4
연평균증가율 (00~07)	-1.2	0.8	-3.0	2.6	-1.8	1.9	1.4	-0.3	1.4	-0.5

[표 II-28]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9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37.3	3.3	7.8	4.7	8.1	6.0	8.8	4.7	6.5	12.7
1983	35.8	3.9	6.8	5.8	8.6	5.7	7.6	5.6	6.8	13.4
1984	36.6	4.3	7.0	4.9	8.1	4.8	7.3	4.4	6.4	16.1
1985	37.0	3.1	7.6	4.9	8.7	4.4	9.3	3.5	6.3	15.4
1986	32.5	3.8	6.4	5.8	7.2	5.5	9.7	5.2	6.5	17.3
1987	35.3	3.1	5.6	4.6	7.6	4.7	7.9	6.4	6.9	17.8
1988	32.1	2.9	4.6	5.2	8.3	5.3	10.7	5.4	7.1	18.4
1989	30.0	3.8	4.1	6.0	8.7	5.2	9.7	5.3	8.6	18.6
1990	29.7	3.9	4.0	5.8	8.2	4.4	8.9	5.0	9.6	20.3
1991	29.4	3.5	3.6	5.9	7.8	4.5	9.0	5.2	11.5	19.6
1992	28.3	4.9	3.7	5.4	7.9	4.8	9.6	4.8	10.3	20.5
1993	30.5	1.6	4.2	3.0	9.6	5.4	12.5	3.9	7.2	22.0
1994	26.6	3.3	3.5	4.5	7.4	4.2	10.8	5.4	13.9	20.4
1995	26.5	3.1	3.7	4.5	8.3	4.3	10.8	5.6	12.1	21.1
1996	26.1	3.0	3.7	4.1	7.6	4.2	12.2	4.9	13.4	20.9
1997	26.0	2.8	4.0	4.3	7.3	4.2	11.7	5.3	13.8	20.6
1998	25.7	3.0	4.9	4.0	5.7	4.0	12.7	4.5	14.6	20.8
1999	25.5	2.4	4.4	3.9	5.6	3.7	12.2	5.0	16.9	20.4
2000	25.3	3.4	4.5	4.1	6.0	3.5	12.2	6.0	15.8	19.3
2001	24.3	2.8	4.4	4.4	6.2	3.9	12.4	5.3	16.8	19.5
2002	24.5	2.5	4.2	4.5	6.3	4.1	13.1	4.6	17.0	19.2
2003	25.2	2.4	4.1	4.0	6.3	4.5	13.1	5.2	17.4	17.9
2004	25.6	2.5	3.9	4.4	5.7	4.5	13.2	5.3	16.9	17.8
2005	24.8	2.7	3.9	4.3	6.1	4.2	12.7	5.6	17.1	18.4
2006	24.3	2.6	3.8	4.8	5.7	4.6	12.2	5.5	17.8	18.7
2007	23.7	2.1	3.8	5.0	6.2	4.7	13.7	6.0	17.5	17.5
연평균증가율 (82~07)	-1.8	-1.9	-2.8	0.2	-1.1	-1.0	1.8	1.0	4.1	1.3
연평균증가율 (82~90)	-2.8	2.0	-7.9	2.7	0.2	-3.8	0.2	0.7	5.1	6.0
연평균증가율 (90~97)	-1.9	-4.7	-0.1	-4.1	-1.6	-0.9	3.9	0.9	5.2	0.2
연평균증가율 (97~00)	-0.9	7.2	3.6	-1.9	-6.7	-5.2	1.4	3.8	4.7	-2.1
연평균증가율 (00~07)	-1.0	-7.0	-2.1	2.7	0.6	4.0	1.7	0.2	1.4	-1.4

[표 II-29] 소득 분위별 소비비중의 변화: 10분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34.2	3.2	6.8	5.5	8.9	5.0	9.5	5.2	6.5	15.2
1983	32.2	3.4	6.4	6.0	8.8	5.8	9.3	5.0	6.2	16.9
1984	32.4	3.8	6.7	5.7	7.5	4.6	10.7	4.6	5.9	18.1
1985	31.6	3.7	7.3	5.6	7.5	4.6	10.7	4.7	5.7	18.6
1986	30.8	3.4	5.9	7.0	7.2	5.3	9.5	4.6	6.5	19.7
1987	30.4	3.3	5.1	4.8	8.3	4.8	10.8	4.7	7.6	20.2
1988	28.8	3.5	4.2	5.7	7.8	5.4	9.4	4.9	8.6	21.8
1989	27.7	3.4	3.6	5.7	8.7	4.1	9.3	5.4	11.6	20.4
1990	28.2	2.8	3.7	6.0	8.8	4.2	9.2	5.5	11.6	20.1
1991	27.0	3.0	3.3	6.3	8.5	4.1	9.2	5.6	11.2	21.7
1992	26.3	3.7	3.1	5.9	8.6	4.3	9.5	5.9	9.7	22.9
1993	32.0	6.0	4.0	4.3	10.3	3.5	7.1	7.0	7.6	18.4
1994	26.6	3.4	3.1	5.1	8.1	4.5	9.1	5.8	13.6	20.7
1995	26.2	2.6	3.2	4.7	8.3	4.3	9.8	5.9	12.6	22.5
1996	25.0	3.0	3.1	4.7	8.3	4.0	9.7	6.1	14.1	22.1
1997	25.0	3.0	3.5	4.2	7.2	3.8	11.3	5.6	15.0	21.2
1998	24.1	3.5	4.2	4.7	6.0	3.5	13.0	5.2	14.5	21.3
1999	23.0	3.5	3.9	4.3	6.3	3.8	12.5	5.1	17.3	20.3
2000	22.9	2.5	4.0	3.9	7.1	3.8	11.6	6.2	17.3	20.8
2001	21.7	2.8	3.9	5.2	6.2	4.1	11.8	5.7	17.7	20.9
2002	22.4	2.6	3.9	5.5	6.9	3.6	10.9	5.8	16.6	21.9
2003	22.8	2.4	3.5	4.2	6.7	4.1	14.3	6.0	16.7	19.3
2004	22.7	2.6	3.4	4.0	5.9	3.8	13.8	6.1	17.8	19.8
2005	22.8	2.3	3.5	4.5	6.2	4.1	13.4	6.6	17.1	19.4
2006	22.3	2.6	3.6	4.4	6.3	4.6	13.1	6.3	16.8	20.0
2007	21.5	2.5	3.2	4.8	5.9	4.2	12.9	6.2	18.4	20.3
연평균증가율 (82~07)	-1.8	-0.9	-2.9	-0.5	-1.6	-0.7	1.2	0.7	4.2	1.2
연평균증가율 (82~90)	-2.4	-1.6	-7.4	1.0	-0.3	-2.2	-0.4	0.8	7.5	3.6
연평균증가율 (90~97)	-1.7	1.1	-0.5	-5.0	-2.7	-1.4	3.0	0.4	3.7	0.8
연평균증가율 (97~00)	-2.9	-6.7	4.0	-2.2	-0.6	-0.7	0.9	3.2	4.8	-0.7
연평균증가율 (00~07)	-0.9	0.3	-2.9	3.1	-2.6	1.6	1.5	0.0	0.9	-0.3

4. 경기변동과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가. 분석개요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경기변동이 소비지출의 구조에 어떤 충격효과를 미쳤으며, 둘째, 경기변동이 소비지출의 구조의 변화에 미친 파급효과의 규모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이다.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필수재의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치재와 내구 소비재 등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강중구(2009)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최근 경기침체로 내구소비재나 문화서비스재의 경우 기초소비재에 비하여 하락폭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하강국면에도 쉽게 지출이 줄지 않는 추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선택적 소비재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는 점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의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소비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이 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로는 기존의 소비이론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여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을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과 가계소비구조와의 관계를 놓고 VAR 모형을 설정하여 동태적 충격반응효과를 살펴보았다.

VAR모형은 전통적인 ARMA 모형을 다변수 모형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두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ARMA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단 이때 이동평균(MA)부분은 비선형함수 추정을 불가피하게 만들므로 생략한 채 자기회귀(AR)부분만을 고려하게 된다. VAR 모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구조방정식 모형에 비해 모형 내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많지 않고, 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손쉽게 추정될 수 있으며, 실제 예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VAR 모형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분석에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VAR모형의 예측 모형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선정하였다.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의 규모가 변동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 변동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소비재 종류별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VAR 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각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검정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자료⁷⁾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7년 1분기부터 2005년 3분기까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의 기간을 1987년 1분기에서 2005년 3분기로 선정한 이유는 사용가능한 변수들의 기간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본의 관측수가 대표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유의성과 시사점의 중요도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의 정의와 추이는 다음과 같다.

GDP증가율은 품목별 소비지출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경기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유동성제약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중 개인부

7)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변수는 거시경제변수와 한계소비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문의 금융부채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자산조사>의 이용가능한 자료는 2006년 한 해 뿐이고, <(도시)가계조사>는 자산 및 부채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가계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가계신용잔액/GDP, 가계부채/가계자산, 금융부채/GDP 등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중을 선택하였다. 가계신용잔액은 1996년부터 분기별 자료가 존재하여 표본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자율은 소득 및 소비의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부(富)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회사채(장외3년, AA- 등급)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비지출의 비중은 앞의 분석과 같이 기타를 제외하고 9개 항목으로 나누어진 통계청의 분류를 이용하여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의 비중을 구하였다.

명목변수들은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실질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계절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의 경우 EVIEWS 6.0의 Census X12 방법을 사용하여 계절조정을 한 후 사용하였다.⁸⁾

8) X11 method는 additive, trend filter(Henderson)와 seasonal filter는 X12 default 값을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Census X12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명절 등을 고려하여 계절조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다.

[표 II-30]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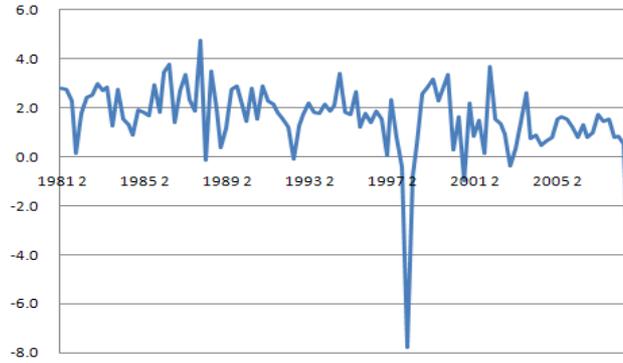
변수명	설명	출처	이용가능기간
Y	실질GDP증가율	한국은행	1970.2~
DA	가계부채비율 =부채/자산	한국은행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75.1~2005.3 (2002.4 이후 SNA기준 변경)
R	이자율(회사채, 장외3 년, AA-)	한국은행	1987.1~
ConsA_hB (A=1~9) (B=00~10)	소비지출의 비중 (A=1: 식료품 A=2: 주거비 A=3: 광열·수도비 A=4: 가구집기 A=5: 피복및신발 A=6: 보건·의료비 A=7: 교육비 A=8: 교양·오락비 A=9: 교통·통신비) (B=00: 전체가구 B=01~10: 소득1분위~ 소득10분위)	통계청 <가계조사>를 기초로 계산	1982.1~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실질 GDP, 실질이자율, 금융부채비율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그림은 각 변수들의 전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GDP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0~4% 사이에서 등락을 하였으나, 1998년 1분기에 -7.8%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후 성장률의 분산이 다소 작아지기는 하였으나, 2000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에 각각 -0.9%, -0.4%의 감소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다만 2008년 4분기에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의 전 세계적 확장과 내수부진 등의 이유로 -5.6%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78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그림 II-1] 실질GDP 증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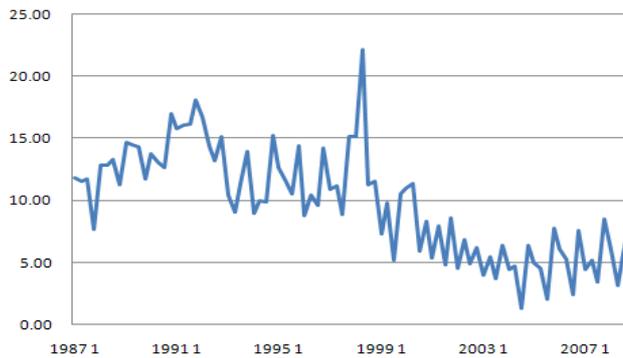
(단위: %)



실질이자율은 1987년 1분기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인 1991년까지는 10~15% 전후에서 이자율이 형성되었으나(평균 13.5%), 이후 1997년까지 평균 11.9%로 다소 낮아졌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2분기에는 2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2008년 3분기에는 5.67%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실질이자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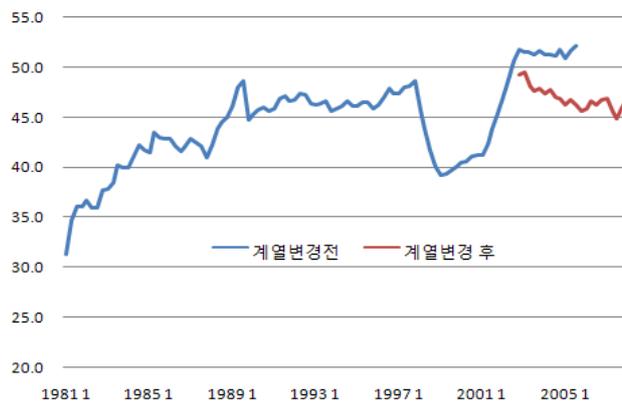
(단위: %)



금융부채비율의 경우 자금순환표 작성기준이 2005년까지는 1968 SNA를 따르다가 2002년부터 소급하여 1993 SNA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두 계열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1997년 4분기에는 48.7%까지 이르렀으나 1991년 1분기에는 39.3%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개인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 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금융부채의 증가율은 안정적인데 반해 금융자산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된 데 기인한다.

[그림 II-3]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단위: %)



다. 단위근 검정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첫 단계는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이다. 단위근 검정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는지 아니면 불안정한 시계열을 갖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불안정한 시계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

은 변수를 의미한다. 불안정한 시계열을 갖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에는 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n)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위근 검정을 통한 변수의 안정성 검정(stationarity test) 결과,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차분이나 추세제거를 통해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환한 후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각 변수에 대한 안정성 검정을 위해 ADF(Augmented Dickey Fuller) 단위근 검정을 하였다. ADF 검정법은 잔차항이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가 아니고,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시계열 변수의 후행차분들을 포함시켜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 검정식에서 $\rho=0$ 인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과 같다. 단위근 검정의 최적차수는 AIC(Akaike Info Criterion)를 선택하였다.⁹⁾

$$\Delta Y_t = \alpha_1 + \alpha_2 \cdot Trend + \rho \cdot Y_{t-1} + \sum_{i=0}^n \gamma_i \Delta Y_{t-i} + \varepsilon_t$$

검정결과

GDP증가율은 상수항이나 추세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상수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5% 유의수준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나, 1% 유의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만한 유의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위근의 존재가 구조적 충격(structural break)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순수한 의미의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조적 충격을 포함한

9) 일부 SIC(Schwarz Info Criterion)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결과가 바뀌기도 하였으나,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였다.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1997년 4분기와 1998년 1분기에서 Chow test를 실시한 후,¹⁰⁾ 1997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더미를 부여하여 구조적 변화를 제거한 변수의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유의수준에서도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GDP증가율 변수가 가지고 있었던 단위근은 구조적 충격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판명하였으며, VAR 분석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질이자율과 가계부채비율은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수항과 추세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상수항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모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GDP증가율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충격에 의한 단위근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검정하였다. 그러나 구조적인 충격을 제거한 후에도 단위근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차분안정화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이자율과 가계부채비율 모두 차분한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 소비지출 금액은 단위근이 존재하였으나 추세가 유의하였으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검정한 결과 1998년 1분기의 구조적인 변화가 1997년 4분기의 구조적인 변화보다 더 유의하게 나와¹¹⁾ 구조적인 변화와 추세를 제거하였다. 제거한 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비지출비중의 경우 수준변수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이었으나, 구조적 변화에 대한 Chow test는 모두 구조적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각 변수를 차분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들었다.

10) 1998년 1분기의 chow test F값: 2.367, p-value=0.1011; 1997년 4분기 chow test F값: 3.363, p-value=0.0402

11) 1998년 1분기의 chow test F값: 5.041, p-value=0.0000; 1997년 4분기 chow test F값: 4.173, p-value=0.0003

[표 II-31]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변수	수준변수	구조적 변화를 제거하거나 차분한 경우
Y	-6.739 ***	-4.522 ***
DA	-2.499	-5.638 ***
R	-2.627	-5.565 ***
소비지출총액	-3.205 *	-4.160 ***
식료품비(cons1_h00)	-1.337	-6.119 ***
주거비(cons2_h00)	-2.420	-18.713 ***
광열·수도비(cons3_h00)	-2.815	-4.305 ***
가구집기(cons4_h00)	-1.473	-5.071 ***
피복신발(cons5_h00)	-3.453 *	-4.021 **
보건·의료(cons6_h00)	-0.624	-9.052 ***
교육(cons7_h00)	-2.077	-5.933 ***
교양·오락(cons8_h00)	-3.099	-13.637 ***
교통·통신(cons9_h00)	-1.594	-5.262 ***

주 1) 상수항 및 추세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고함

2) *, ** 및 ***는 ADF 검정통계량(MacKinnon(1996) 임계치) 기준의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라. 인과관계 검정

VAR 분석을 하기에 앞서 경제변수들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검정하기 위해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다. Granger 인과관계는 다른 X변수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제약 회귀분석)에 비해 변수 X를 추가할 경우(비제약 회귀분석) 어떤 변수 Y에 대한 예측력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변수 X가 변수 Y의 원인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Granger 인과관계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식에서 모든 α_i 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X 는 Y 의 원인변수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모든 δ_i 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Y 가 X 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가설이 모두 기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X 와 Y 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Y_t = a_0 + \sum_{i=1}^m \alpha_i X_{t-i} + \sum_{i=1}^n \beta_i Y_{t-i} + \varepsilon_t$$

$$X_t = b_0 + \sum_{i=1}^k \gamma_i X_{t-i} + \sum_{i=1}^l \delta_i Y_{t-i} + \xi_t$$

Granger 인과관계는 후행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지만 후행 차수가 F값의 유의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후행길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VAR 분석을 할 때, 모형 내에서 변수가 정해지는 순서에 따라 분석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서 결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과관계 검정을 한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변수가 미래의 예측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서 선택된 후행의 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적합한 후행길이의 선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본 자료는 분기별 자료이기 때문에 1 ~ 4로 선택하였다. 적합한 후행길이는 F값의 유의미한 변화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후행길이가 1일 경우에는 소비지출비중과 가계부채비율, 이자율과 소비지출의 비중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후행길이가 2일 경우와 4일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방향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각 소비지출항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후행길이가 4가 되면서 F값의 유의도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항목(이자율이 소비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 소비지출비중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 성장률이 서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후행길이를 2로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시계열 자료들을 2차 후행하여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각 소비지출비중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변수들간의 전도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은 각 소비지출비중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원인변수이다. 성장률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10% 수준에서 유의하지만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자율은 가계소비지출비중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원인변수였으나,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종속변수에 가까워 성장률이나 가계부채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GDP증가율과는 반대로 4차 후행을 선택하여 영향의 시점이 길어질 경우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채비율은 이자율에는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이지만, 성장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이다. 소비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각 소비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았으나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과 교양오락비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만한 유의한 증거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지출항목이 부채비율의 영향을 받았으나,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경우에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항목들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재화 및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소비지출항목은 대부분의 이자율과 부채비율에 영향을 끼쳤으나,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교양 오락비는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었으며,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는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다른 변수들과 가장 관계가 유의한 것은 주거비였으며, 식료품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비와 같이 필수재와 가까운 성격의 경우에도 상호 영향력이 높은 편이었다.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 검정 F값은 유의도가 낮아진다. 각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전체가구, 소득1분위 가구, 소득10분위 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에 다른 변수들과의 영향력에 대한 F값이 더욱 유의한 편이었다.

소득분위별로 변수간의 영향력이 다른 항목도 존재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소득1분위는 이자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소득 10분위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반면, 식료품비의 경우 그 반대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구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식료품비나 주거비의 경우 모두 기초소비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정이 되는 변수인 반면,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조정이 되는 변수라고 볼 때,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주거비는 이자비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조정해야 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의 주거비는 단기적인 이자율의 변화에 급격히 소비비중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부채비율의 변화에 따라 소비비중을 변화시킬 것이다.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식

료품비는 단기적인 이자율 변화에 급격히 소비비중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부채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식료품비의 비중을 조정하겠지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미 식료품비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자율 변화에 따라 급격히 소비비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면 인과관계의 순서는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소비비중의 순서이거나 GDP증가율, 이자율, 소비비중, 부채비율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소비비중에 미치는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관계)이며, 전자의 결과 또한 유의한 편이기 때문에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소비비중’ 순서대로 VAR분석을 실시한다.

[표 II-32]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전체가구)

귀무가설	총소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가사용품
이자율↗성장률	1.546				
이자율↘성장률	2.649*				
부채비율↗성장률	1.051				
부채비율↘성장률	4.324**				
소비비중↗성장률	0.149	0.713	0.159	1.335	1.893
소비비중↘성장률	2.396*	0.033	0.035	1.966	0.821
부채비율↗이자율	2.859*				
부채비율↘이자율	1.081				
소비비중↗이자율	7.538***	4.374**	4.855**	1.753	1.384
소비비중↘이자율	9.369***	14.804***	5.861***	6.443***	3.263**
소비비중↗부채비율	6.781***	5.917***	6.130***	4.936***	3.354**
소비비중↘부채비율	2.973**	1.650	4.182**	0.353	3.322**
귀무가설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이자율↗성장률	1.546				
이자율↘성장률	2.649*				
부채비율↗성장률	1.051				
부채비율↘성장률	4.324**				
소비비중↗성장률	0.156	2.813*	0.227	1.858	0.539
소비비중↘성장률	2.399*	0.865	0.506	0.335	1.050
부채비율↗이자율	2.859*				
부채비율↘이자율	1.081				
소비비중↗이자율	2.869*	6.474***	7.983***	0.475	3.567**
소비비중↘이자율	0.062	4.173**	6.988***	1.380	9.938***
소비비중↗부채비율	3.630**	0.518	1.731	3.391**	1.042
소비비중↘부채비율	2.808*	0.112	1.793	3.353**	1.273

주: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I-33]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소득1분위)

귀무가설	총소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가사용품
소비비중↗성장률	0.365	1.707	1.046	0.934	0.301
소비비중↘성장률	2.629*	0.506	1.550	0.197	0.445
소비비중↗이자율	2.414*	1.796	0.661	2.420**	0.882
소비비중↘이자율	0.342	1.592	3.034*	2.108	0.399
소비비중↗부채비율	3.547**	1.474	1.652	3.413**	2.304
소비비중↘부채비율	1.978	2.629*	0.683	0.245	2.314
귀무가설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소비비중↗성장률	0.810	0.023	2.280	1.094	0.354
소비비중↘성장률	3.628**	1.044	1.585	0.774	0.539
소비비중↗이자율	1.831	0.903	6.100***	1.858	1.210
소비비중↘이자율	1.875	1.883	5.856***	2.651*	2.958*
소비비중↗부채비율	0.458	1.358	0.268	0.898	0.378
소비비중↘부채비율	2.458*	1.554	1.295	0.344	1.769

주: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II-34]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2, 소득10분위)

귀무가설	총소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가사용품
소비비중↗성장률	0.278	0.438	0.138	0.860	0.864
소비비중↘성장률	0.109	0.348	1.223	0.241	0.863
소비비중↗이자율	5.135***	0.954	0.662	1.472	1.291
소비비중↘이자율	9.036***	6.166***	2.034	1.600	5.030
소비비중↗부채비율	3.615**	2.067	4.335**	6.080***	0.117
소비비중↘부채비율	1.060	2.077	7.620***	1.504	0.416
귀무가설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소비비중↗성장률	0.623	1.495	1.321	0.223	0.252
소비비중↘성장률	1.834	0.027	1.692	0.717	0.442
소비비중↗이자율	1.926	1.121	4.902***	0.262	0.725
소비비중↘이자율	0.137	0.677	6.118***	0.932	1.609
소비비중↗부채비율	0.691	1.636	0.035	0.400	0.080
소비비중↘부채비율	4.610**	0.002	1.162	5.797	0.106

주: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마. VAR와 충격반응분석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소비지출비중 간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변수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고자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을 하였다.¹²⁾ Granger 인과관계 결과를 통한 변수 간 순서 선정을 기초로 VAR모형을 구축하였다.

VAR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특정 이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유용한 정보에 대한 손실을 줄이면서도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모형이다. 즉 VAR 모형 자체가 정책적 분석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으나 예측모형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제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소비지출비중 등의 관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VAR모형은 모형 내의 모든 변수의 현재 관측치를 내생변수로, 모든 시차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단기예측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VAR 모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외생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내생변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모형 작성자의 선택적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여 일반화된 유형의 모형으로 작성된다. 이 모형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주관적인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모형작성에서 요구되는 것은 모형 내에 포함시킬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뿐이다.

반면, 모형의 추정이나 분석결과는 모형 내에 어떤 변수를 포함시키는가에 주로 의존하여, 모형의 도입된 변수의 수가 대체적으로 적어 포함시킬 변수의 선정 결과에 따라 추정 및 자료 분석 결과가 민감한 변화를

12) VAR 모형의 추정은 경제성장률, 이자율, 금융부채비율 등 3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총소비지출과 항목별 소비지출 중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 9개 소비지출의 비중이 각각 변수로 추가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총 10개의 VAR 모형 추정이 이루어 졌다.

보이는 단점이 있다.

엄밀히 하면 비제약 VAR는 공적분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변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적분 관계를 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여기서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VAR(p)모형의 적정시차 p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가 최소가 되는 곳에서의 차수를 시차로 정하였으며 대부분 후행차수는 4였으나, 소비항목에 따라 6 이상에서 적정시차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 표는 GDP증가율, 부채비율, 이자율, 각 소비지출비중의 VAR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전기 자기자신의 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경제성장률, 부채비율, 전기의 소비금액이다. 반면 이자율은 전기 자신의 값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이자율은 다소 변동이 심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우선 전체소비금액과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 경제성장률, 부채비율의 증가에 따라 전체소비금액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만,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다.

변수 간의 상호관계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소비지출항목별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항목이 어느 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전기소비비중의 값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수들이 유의하지 않으며, 충격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 변화의 방향성만 참고하고, 충격반응분석을 위주로 검토한다.

전기의 성장률증가는 이번기의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성장률 증가로 인해 다른 소비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항목을 차지하는 항목들의 비중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항목들의 경우에도 전전기의 성장률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하며, 2분기의 계수가 더욱 유의하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전체 소비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소비비중도 증가한다.

전기의 부채비율의 증가는 이번기의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는 감소시키지만, 기타 항목들의 소비지출 비중은 증가시킨다. 그러나 모든 계수들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기 이자율의 증가는 이번기의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의 지출비중을 증가시키며, 기타 항목들의 소비비중은 감소시킨다. 역시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수들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 다만 3기 전의 이자율의 증가는 다소 유의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의 영향은 다소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35] VAR 결과

	Y	DA	R	총소비금액
Y(-1)	0.140 [0.83161]	0.177 [1.83814]	-0.379 [-1.68910]	102082 [0.21653]
Y(-2)	-0.086 [-0.53036]	0.142 [1.53626]	0.337 [1.56222]	78032 [0.17232]
Y(-3)	-0.188 [-1.17531]	0.059 [0.63622]	0.012 [0.05663]	-442588 [-0.98487]
Y(-4)	0.081 [0.51587]	0.007 [0.07319]	0.138 [0.65976]	89224 [0.20305]
DA(-1)	0.011 [0.04026]	0.118 [0.78016]	0.108 [0.30738]	644701 [0.87055]
DA(-2)	0.206 [0.79551]	0.037 [0.25004]	0.250 [0.72232]	592065 [0.81381]
DA(-3)	-0.118 [-0.45284]	-0.025 [-0.16440]	0.591 [1.69457]	-88342 [-0.12080]
DA(-4)	0.035 [0.13156]	0.111 [0.73688]	-0.956 [-2.72210]	174959 [0.23749]
R(-1)	-0.177 [-1.51204]	-0.007 [-0.10371]	-0.138 [-0.87951]	-606004 [-1.83851]
R(-2)	-0.038 [-0.32873]	-0.074 [-1.12700]	-0.226 [-1.46915]	-96438 [-0.29920]
R(-3)	-0.108 [-1.03717]	-0.034 [-0.57111]	-0.451 [-3.23697]	-377851 [-1.29344]
R(-4)	-0.114 [-1.07917]	-0.008 [-0.13391]	0.192 [1.36176]	-550044 [-1.85510]
총소비금액(-1)	0.000 [1.69356]	0.000 [1.24885]	0.000 [-0.15689]	0.145 [0.97115]
총소비금액(-2)	0.000 [-0.38140]	0.000 [0.02804]	0.000 [-2.55338]	-0.006 [-0.04306]
총소비금액(-3)	0.000 [-2.01257]	0.000 [1.18285]	0.000 [1.53007]	-0.262 [-2.10507]
총소비금액(-4)	0.000 [-0.96333]	0.000 [-0.46133]	0.000 [-1.07632]	0.598 [4.33721]
Adj. R2	0.044	0.305	0.641	0.579
F-statistic	1.129	2.223	5.994	4.844

[] 안은 t값을 의미함

[표 II-36]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지출의 비중

	식료품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 가사용품	피복신발
Y(-1)	-0.090 [-1.15088]	-0.011 [-0.40571]	-0.056 [-1.19200]	0.041 [1.29765]	0.105 [2.98121]
Y(-2)	0.188 [2.30869]	-0.034 [-1.23372]	0.031 [0.71450]	-0.045 [-1.39013]	0.019 [0.50056]
Y(-3)	0.051 [0.61486]	0.076 [2.68456]	0.079 [1.84781]	0.033 [1.02873]	0.006 [0.16400]
Y(-4)	-0.094 [-1.20433]	-0.015 [-0.51871]	-0.041 [-1.00149]	-0.019 [-0.62209]	0.009 [0.24197]
DA(-1)	-0.132 [-0.95306]	0.035 [0.73169]	-0.006 [-0.07857]	0.017 [0.31830]	-0.033 [-0.56633]
DA(-2)	0.004 [0.02958]	-0.051 [-1.04148]	-0.026 [-0.33965]	-0.032 [-0.59343]	0.094 [1.60490]
DA(-3)	-0.269 [-1.91230]	-0.117 [-2.37219]	0.103 [1.37224]	0.018 [0.33147]	0.075 [1.23098]
DA(-4)	0.205 [1.52264]	0.111 [2.28206]	-0.025 [-0.35854]	0.057 [1.11152]	-0.125 [-2.13107]
R(-1)	-0.030 [-0.58934]	0.000 [-0.00442]	0.037 [1.48296]	-0.011 [-0.57522]	-0.011 [-0.46433]
R(-2)	0.033 [0.67026]	0.017 [0.99427]	-0.025 [-1.02516]	0.025 [1.30409]	0.009 [0.40332]
R(-3)	0.048 [1.00118]	-0.021 [-1.25009]	-0.023 [-0.93800]	-0.008 [-0.42454]	0.000 [0.01233]
R(-4)	-0.007 [-0.14057]	0.002 [0.10852]	0.015 [0.58421]	0.002 [0.11533]	0.032 [1.52783]
소비비중(-1)	-0.428 [-3.44161]	-0.822 [-6.14482]	-0.161 [-1.20714]	-0.453 [-3.49752]	-0.548 [-4.31686]
소비비중(-2)	-0.412 [-3.34208]	-0.753 [-5.25453]	-0.434 [-2.90538]	-0.371 [-2.82316]	-0.372 [-2.82999]
소비비중(-3)	-0.451 [-3.81694]	-0.688 [-4.87579]	-0.151 [-1.12897]	-0.413 [-3.11623]	-0.393 [-3.06809]
소비비중(-4)	0.475 [3.87022]	-0.079 [-0.60781]	0.539 [3.79889]	0.274 [2.28281]	0.334 [2.86956]
Adj. R2	0.896	0.760	0.939	0.760	0.935
F-statistic	38.152	14.689	67.392	14.667	62.541

[] 안은 t값을 의미함

9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표 II-37]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지출의 비중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Y(-1)	-0.025 [-1.00008]	0.022 [0.45611]	0.075 [2.06988]	-0.050 [-0.82396]
Y(-2)	-0.016 [-0.65623]	-0.041 [-0.81367]	0.035 [0.89642]	-0.128 [-2.09553]
Y(-3)	-0.017 [-0.68189]	-0.026 [-0.49382]	0.020 [0.57407]	-0.068 [-1.06468]
Y(-4)	0.017 [0.71232]	0.049 [1.03499]	-0.004 [-0.12809]	0.018 [0.28984]
DA(-1)	0.039 [0.91990]	-0.088 [-1.05686]	0.020 [0.33417]	0.019 [0.18867]
DA(-2)	-0.052 [-1.28076]	-0.056 [-0.64121]	-0.029 [-0.47707]	-0.058 [-0.59053]
DA(-3)	0.060 [1.51196]	0.162 [1.80440]	-0.103 [-1.68803]	-0.091 [-0.90867]
DA(-4)	0.016 [0.40207]	0.083 [0.95693]	0.075 [1.29844]	-0.035 [-0.35690]
R(-1)	-0.001 [-0.06147]	0.072 [2.31448]	0.009 [0.41909]	-0.113 [-3.01063]
R(-2)	0.005 [0.31138]	-0.025 [-0.80348]	0.023 [1.11224]	-0.057 [-1.42392]
R(-3)	-0.033 [-2.25674]	0.006 [0.20905]	0.037 [1.79049]	-0.071 [-1.83545]
R(-4)	-0.008 [-0.54628]	0.022 [0.73689]	-0.006 [-0.28802]	-0.074 [-1.98766]
소비비중(-1)	-0.761 [-5.24777]	-0.736 [-5.41813]	-0.733 [-5.00330]	-0.635 [-4.89207]
소비비중(-2)	-0.417 [-2.31565]	-0.529 [-3.66201]	-0.627 [-3.46809]	-0.705 [-4.99682]
소비비중(-3)	-0.156 [-0.87535]	-0.580 [-4.36406]	-0.451 [-2.46777]	-0.469 [-3.25448]
소비비중(-4)	0.002 [0.01418]	0.172 [1.45373]	0.092 [0.61665]	0.159 [1.22350]
Adj. R2	0.460	0.983	0.550	0.636
F-statistic	4.681	257.649	6.262	8.525

[] 안은 t값을 의미함

충격반응 분석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는 경제 내에 발생하는 외생적인 충격에 대해서 각 경제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조정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변수 간의 상호연관관계 또는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모수를 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약조건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상대적으로 누가 외생적인지, 내생적인지를 경제이론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이 순서에 따라 분석결과의 차이가 커진다.

여기서는 충격반응함수를 사용하여 “경제성장 등의 변화¹³⁾가 각 소비지출의 비중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 그림은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소비지출 비중이 각 변수의 충격에 대해 충격이후 10분기 동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마다 4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위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GDP성장률의 반응, 오른쪽 위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부채비율의 반응, 왼쪽 아래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이자율의 반응,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각 소비지출비중의 변화 반응이다.

우선 경제성장률, 이자율, 금융부채비율 등이 총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에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총소비지출이 1기에는 오히려 감소하지만, 2기 이후 2분기 정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이 상승이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데에는 약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1기부터 3기 정도까지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13) 일반적으로 충격반응함수에서 충격은 각 변수 오차의 1 표준오차만큼의 충격으로 정의된다.

타났다. 그러나 소비증가의 크기는 아주 미미하였다. 금융부채비중이 증가하면 2기 이후 소비가 감소하여 약 6~7분기 정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기에 소비지출 증가할 경우 2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지만, 4기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에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장기에는 소비지출의 증가가 저축 및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총소비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를 위한 대출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분기에 이루어진 소비지출의 증가는 2분기 이후인 3분기에 일시적으로 금융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융부채비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분기 이후에는 금융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이자율, 금융부채비율과 각 항목별 소비비중 간의 관계를 상호간에 나타나는 영향력의 크기, 초기 방향성, 지속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식료품비 비중과 교통·통신비 비중이다. 이것은 두 항목이 원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 교육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의 순서대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반응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은 식료품비, 가사용품,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감소한다.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의 방향성도 성장률 충격에 대한 반응과 거의 같았다. 다만 교육비의 비중은 부채비율 충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비중의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지속될 경우의 방향성이나 반응의 기간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부채비율과 이자율 충격에 대한 각 소비지출 비중의 반응은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변화의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 성장률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식료품비의 경우에만 10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폭이 일정하였으나 대부분 1~3분기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 다소 차이가 있는 항목은 광열·수도비(3~9분기의 반응이 큼), 교육비(4~8분기의 반응이 큼), 교통·통신비(3~9분기의 반응이 큼) 정도였다. 둘째, 부채비율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대부분 4~5분기를 전후로 변동폭이 가장 컸다. 셋째, 이자율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6~8분기를 전후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각 변수들의 반응의 시차이다.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다른 경제 변수들과 동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 이후에 증감 변화 방향이 함께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이들 항목의 경우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은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시점이 충격의 시작점과 차이가 큰 편이다. 그래프를 옆으로 평행이동 시킨 듯이, 변수들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응을 하는 경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통신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충격의 초반(1~4분기)에는 다른 변수들과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른 변수들과 비슷한 시차를 두고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과 같은 경기 악화는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소비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변화할 때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등 소비비중이 경제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소비항목의 경우, 대체로 소비비중이 변화할 때 경제성장률의 변화 방향이 소비비중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들 소비항목의 경우 경기가 악화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해당 소비항목의 비중이 하락하고, 해당 소비비중의 하락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 식료품의 경우 1기에는 소비비중이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비중이 감소하지만, 2기 이후에는 소비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증가 후 감소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변화할 때 소비비중이 경제성장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비항목의 경우 대체로 소비비중이 변화할 때 경제성장률의 변화방향이 소비비중의 변화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악화 시 해당소비항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해당 소비항목 비중의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 교육비 지출 비중은 경제악화 시 소비비중이 증가하고, 소비비중 증가 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비 등 일부 소비항목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비중 및 성장률 변화

	소비비중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변화
식료품	감소(2기이후 증가)	증가(2기이후 감소)
주거비	증가	감소
광열·수도	증가	감소
가구집기·가사용품	감소	감소
피복 및 신발	감소	감소
보건·의료	감소	증가(3기이후 감소)
교육	증가	증가
교양·오락	감소	감소
교통 통신	증가	효과 거의 없음

둘째,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제성장률보다는 이자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충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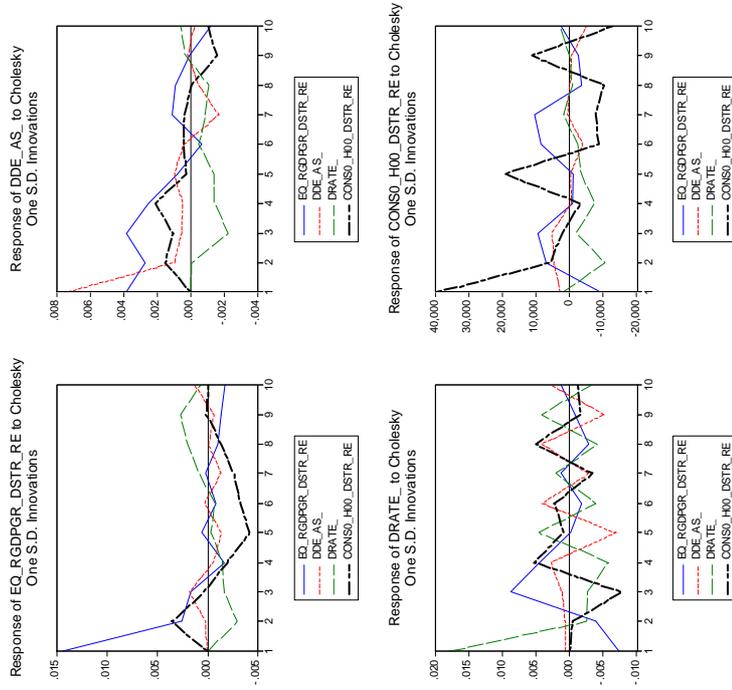
셋째, 소비지출의 변화시점과 다른 경제변수의 충격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보조금의 효과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항목들(주거비, 교육비 등)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항목들(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에 대한 보조금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은 필수재에 해당하며,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은 사치재나 문화재와 같은 서비스 품목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식료품비 비중의 변화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것으로 처럼 보였다. 이는 생계에 필요한 절대소비수준만 충족되면, 그 이상의 식료품비 지출은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동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거시경제변수의 충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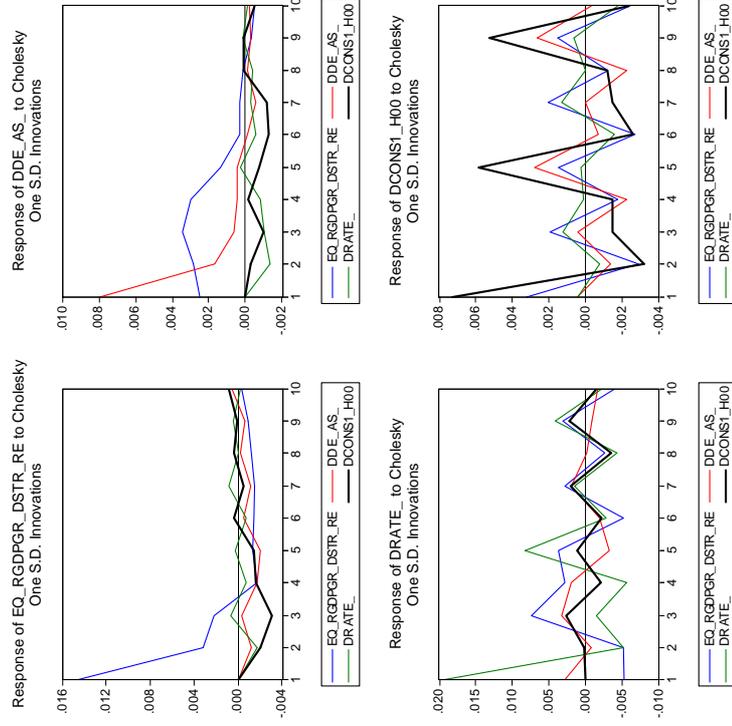
대한 반응의 크기가 미미하며, 보건·의료비의 특성 상 다른 소비항목과 대체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보건·의료비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을 말하기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주거비, 교육비 등은 다른 변수들과의 시차가 다소 존재하는 편이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때문에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반응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소비항목의 성격을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시차만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필수재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인 수준이 감소한 경우, 혹은 신용제약에 직면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비품목별 지출비중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책대상 집단 설정(targeting)을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가계의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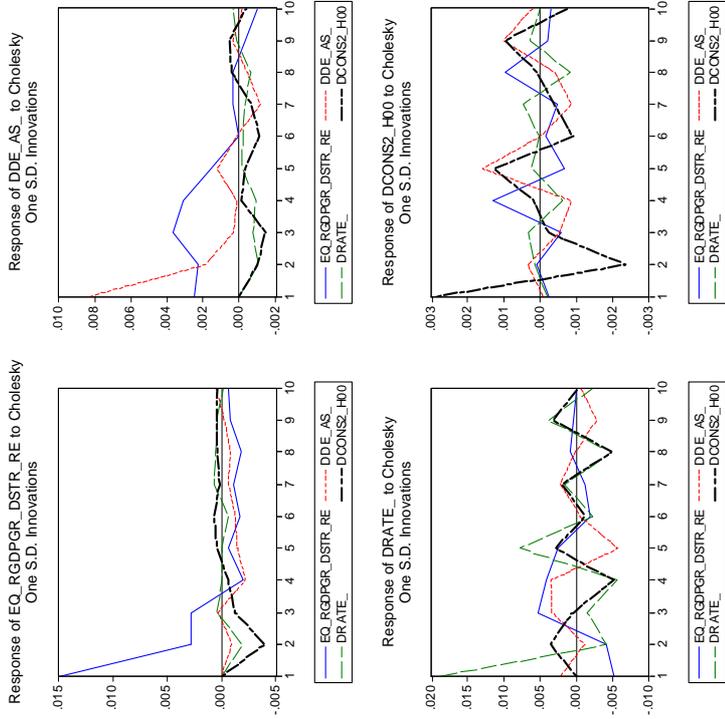
[그림 II-4] 충격반응함수: 전체소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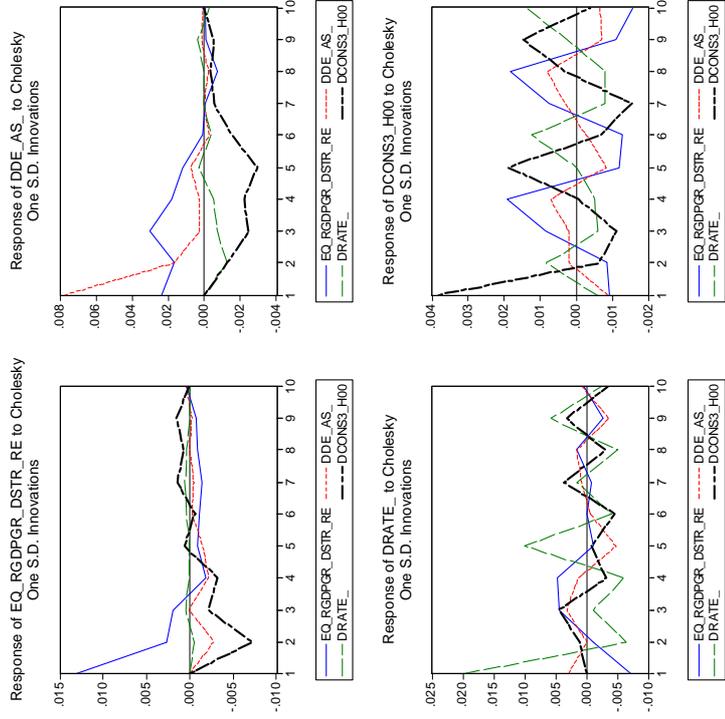
[그림 II-5] 충격반응함수: 식료품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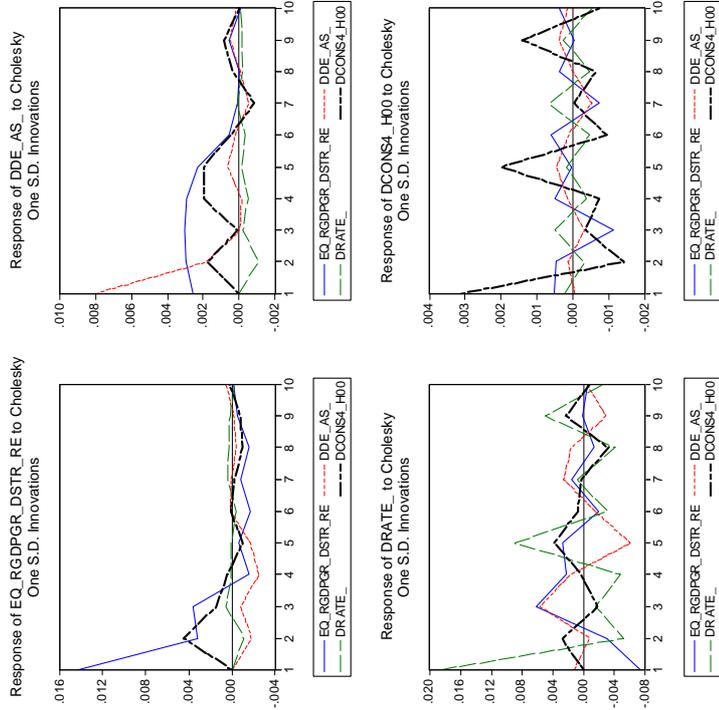
[그림 II-6] 충격반응함수: 주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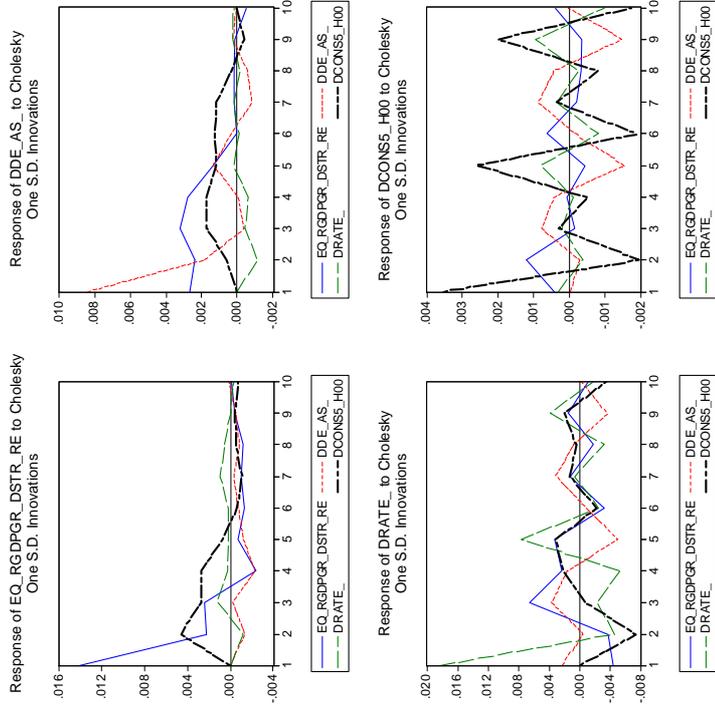
[그림 II-7] 충격반응함수: 광열수도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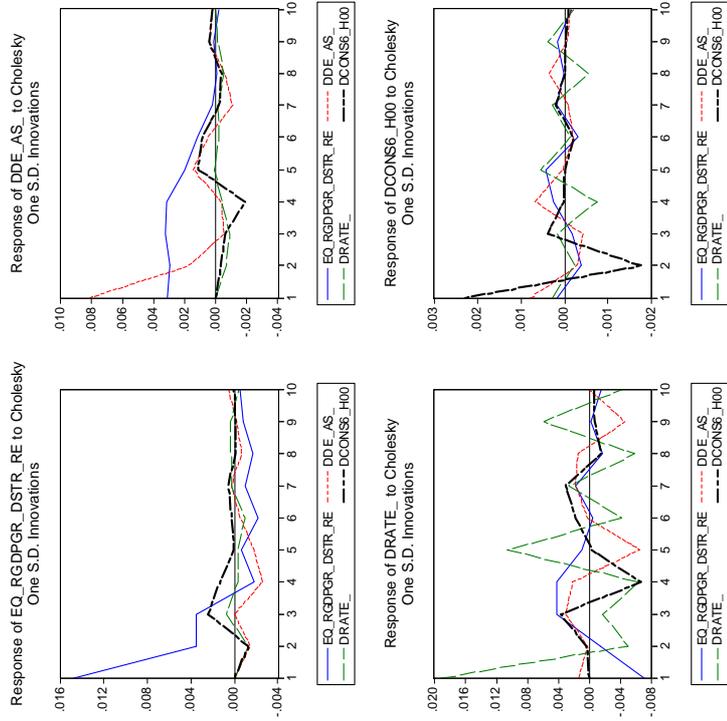
[그림 II-8] 충격반응함수: 가구집기사용품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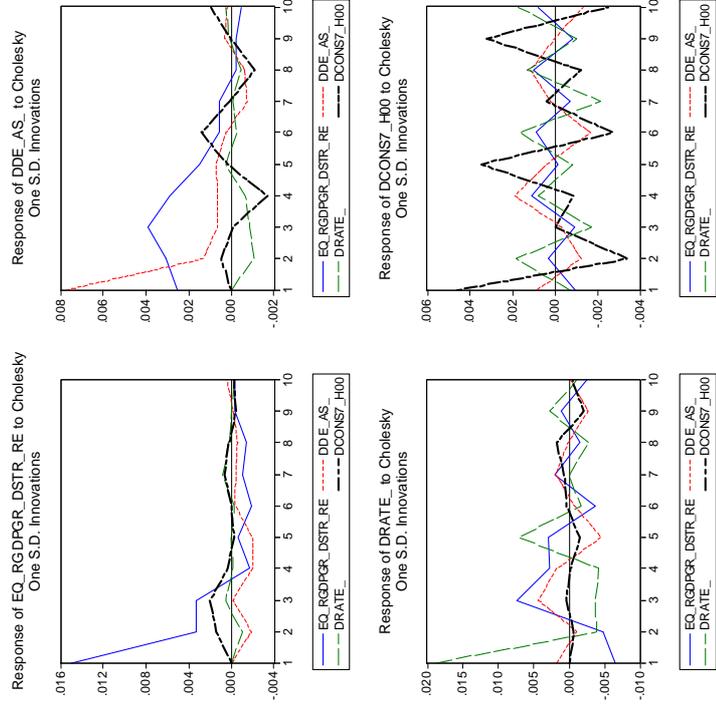
[그림 II-9] 충격반응함수: 피복신발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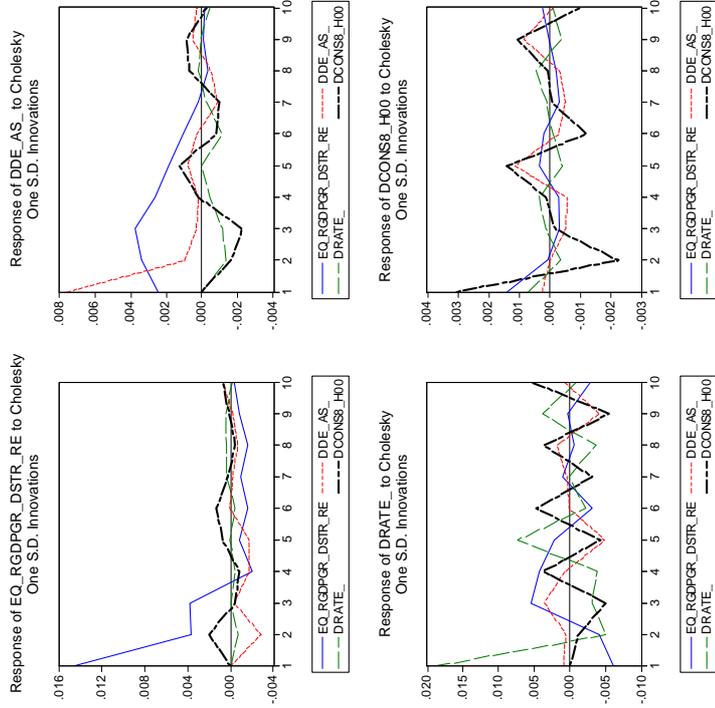
[그림 II-10] 충격반응함수: 보건의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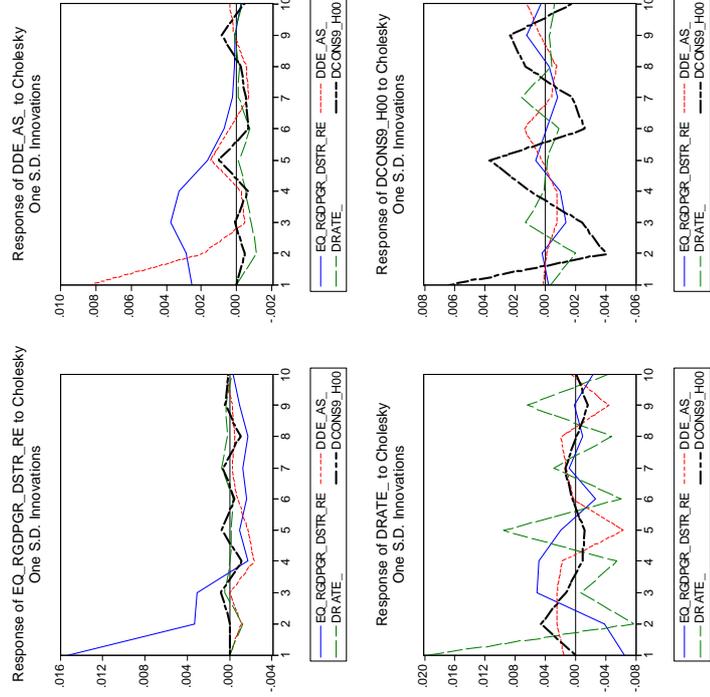
[그림 II-11] 충격반응함수: 교육비 비중



[그림 II-12] 충격반응함수: 교양오락비 비중



[그림 II-13] 충격반응함수: 교통통신비 비중



5. 소결

제 II장에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제 1절에서 가계의 특성별 소비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199.3만원이다. 소비항목 별로 보면 식료품(50.3만원, 25.2%), 기타소비지출(36.5만원, 18.3%), 교통 및 통신(35.0만원, 17.6%), 교육(21.8만원, 11.0%) 등의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2만원, 3.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8.6만원, 4.3%), 교양·오락(9.3만원, 4.7%), 광열·수도(9.6만원, 4.85) 등의 소비항목은 소비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총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73.7%로, 가구 소득 중 약 73.7%를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약 79.0%로 측정되었다.

둘째, 항목별 소비비중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식료품,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교육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지출비중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지다가 9분위, 10분위에서는 지출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출 여력이 부족하여 교육비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에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득층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이미 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비지출 규모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비지출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녀세대의

소득수준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넷째, 소득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22.8%로 측정되어, 총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의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소비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현재의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소득집단은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2분위 까지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구 특성별로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중에서는 근로자 외 가구가,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이 낮았다.

여섯째, 주택 미소유 가구와 도시 지역 외 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가구나 도시지역 거주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았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택미소유가구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 등을 위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지역 간 물가 차이 등으로 인해 필요생계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제 2절에서는 소비지출의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소비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라는 경제충격이 가구의 소비행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 3절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VAR모형 추정결과 구해진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비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데에는 일정정도 시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변수 간의 상호관계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소비지출항목별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항목이 어느 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전기소비비중의 값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수들이 유의하지 않으며, 충격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충격반응분석을 위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식료품비 비중과 교통·통신비 비중이다. 이것은 두 항목이 원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 교육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의 순서대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둘째, 반응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은 식료품비, 가사용품,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감소한다.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의 방향성도 성장률 충격에 대한 반응과 거의 같았다. 다만 교육비의 비중은 부채비율 충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셋째, 비중의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지속될 경우의 방향성이나 반응의 기간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부채비율과 이자율 충격에 대한 각 소비지출 비중의 반응은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변화의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성장률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3분기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 부채비율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대부분 4~5분기를 전후로 변

동쪽이 가장 컸다. 이자율에 대한 각 지출비중의 변화는 6~8분기를 전후로 나타났다.

넷째, 각 변수들의 반응의 시차는 소비항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다른 경제 변수들과 동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 이후에 증감 변화 방향이 함께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이들 항목의 경우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은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시점이 충격의 시작점과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응을 하는 경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비항목별 충격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제 위기 상황은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때의 소비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을 펼 때 소비구조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제성장률보다는 이자율과 부채비율에 대한 충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셋째, 소비지출의 변화시점과 다른 경제변수의 충격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보조금의 효과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항목들에 대한 보조금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소비항목의 성격을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시차만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되는 필수재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인 수준이 감소한

110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경우, 혹은 신용제약에 직면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계소비의 불평등도 분석

1. 서 론
2. 가계 소비의 소비불평등도 분석: 2007년 기준
3. 소비 불평등도의 변화: 1982~2007
4. 경기변동과 소득분배
5. 소 결

III. 가계소비의 불평등도 분석

1. 서론

기존의 불평등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가계 소득불평등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소득불평등도를 실측하는 연구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준영·임병인, 2001; 최희갑, 2002; 이정우·이성림 등 다수) 그런데 기존의 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소비는 개인 및 가구의 후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변수이다. 또한 소비자자료가 횡단면 자료에서 향상소득의 좋은 대용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남상호·임병인, 2008)

이에 제 III장에서는 가계소비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1982~2007년 기간 중 소비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10대 소비항목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소비항목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추이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소비항목의 불평등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지, 소비불평등도 및 이로 인한 후생수준의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항목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2. 가계 소비의 소비불평등도 분석: 2007년 기준

가. 지니계수 측정

여기서는 대표적인 불평등 측정지수인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 소비 불평등도가 소득불평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기준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0.340이고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0.368,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 0.370이었다.

[표 III-1] 지니계수 측정결과: 2007년

	지니계수
소비지출	0.340
총소득	0.368
경상소득	0.370

나. 소비 항목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각각의 소비항목이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소비불평등의 요인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에 여기서는 Shorrocks(1982)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소비불평등도를 소비항목 별로 분해하여, 항목별 소비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다.

Shorrocks(1982)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소비항목이 전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_k = \frac{S_k}{I}, \text{ 단 } \sum S_k = I \quad (1)$$

여기서 s_k 는 개별 소비항목 k 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며, S_k 는 소비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I 를 사용하여 측정된 소비항목 k 의 소비불평등도를 의미한다. 모든 소비항목에 대한 불평등도를 합산하면, 전체 소비불평등도 I 와 같아진다.

Shorrocks(1982)의 방법은 원래 소득불평등도를 개별 소득 항목으로 분해하는 목적으로 고안이 되었으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지수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소비에 대한 불평등도 분해에 적용하였으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1)식을 지니계수를 사용한 분해모형으로 보다 자세히 나타내면 (2), (3),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식은 개별 소비항목 k 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며, (3)식은 소비항목 k 의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4)식은 전체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s_k^*(G) = \frac{S_k^*(G)}{G(Y)} \quad (2)$$

$$S_k^*(G) = \frac{\mu_k}{\mu} \overline{G(Y^k)} = \frac{2}{n^2\mu} \sum_i (i - \frac{n+1}{2}) Y_i^k \quad (3)$$

$$G(Y) = \frac{2}{n^2\mu} \sum_i (i - \frac{n+1}{2}) Y_i \quad (4)$$

(2), (3), (4)식에서 k 는 소비유형, μ_k 는 k 유형 소비의 산술평균, μ

116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는 전체 소득의 산술평균, i 는 소득 크기별 순위(rank), n 은 가구수를 각각 의미한다.

[표 III-2]는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것이다. 소비항목 중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항목은 교통·통신으로 전체 지니계수의 약 19.5%가 교통·통신 관련 소비지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소비지출(18.9%)와 식료품(17.9%), 교육(15.7%) 등 역시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열·수도(2.4%), 주거(3.0%), 보건·의료(4.3%) 등은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소비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 분석: 2007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7.9	3.0	2.4	6.2	5.9	4.3	15.7	6.2	19.5	18.9

한편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는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소비불평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항목별 소비비중으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상대적 기여도는 개별소비항목의 소비불균형 완화효과를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즉, 개별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전체 소비 불균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항목별 소비비중 대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비항목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52.9%에 달하였다. 이는 교육비지출이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소비불평등도가 약 1.53단위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교양오락(131.1%), 구가 집기 및 가사용품(129.9%), 피복 및 신발(116.6%), 교통·통신(109.7%), 기타 소비지출(105.7%) 등이 상대적 기여도가 100% 이상인 소비항목이었다. 반면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식료품의 경우 소비비중을 고려한 상대적 기여도가 71.4%로 낮게 나타났다. 즉 식료품의 경우 소비비중이 높아서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측정되지만, 실제 소비비중을 고려할 경우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71.4	71.2	48.2	129.9	116.6	81.3	152.9	131.1	109.7	105.7

3. 소비불평등도의 변화: 1982~2007

가. 소비불평등도의 변화추이

[표 III-4]와 [그림 III-1]은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982~2007년 기간 중 연도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소비불평등도는 1982년 이후 1985년까지는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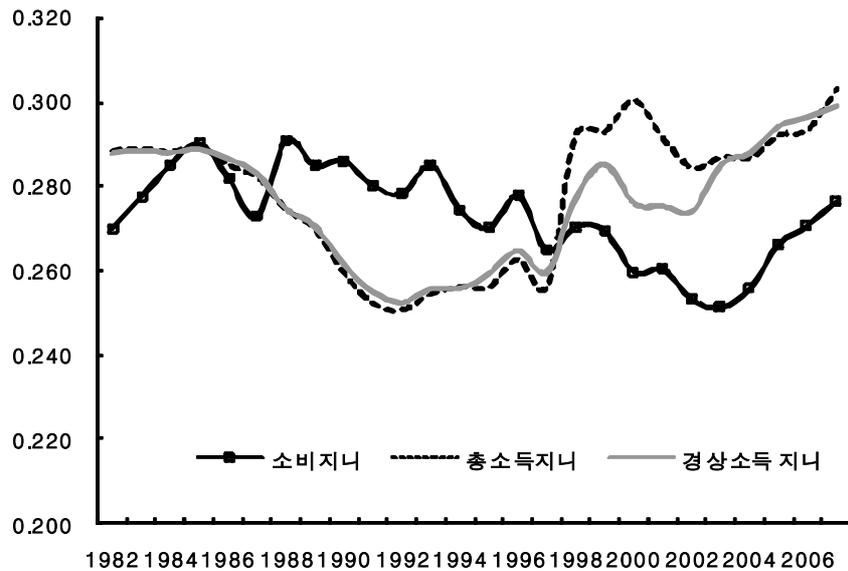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가계 소비의 불평등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불평등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1985~2003년 기간 중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10.8%, 2분위는 11.2%, 3분위는 11.7%, 4분위는 11.9%, 5분위는 11.7%, 6분위는 11.7%, 7분위는 11.6%, 8분위는 10.9%, 9분위는 10.1%, 10분위는 9.5%였다. 동 기간 중 총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10.9%와 비교해 보면, 9분위와 10분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증가율이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 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후 2000년대 초반에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한국 경제가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다다르면서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민주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분배 몫이 커졌던 것을 들 수 있다.(윤기중(1997) 참고)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우선 외환위기의 충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외환위기 이전에도 소득불평등도가 조금씩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방화와 정보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에 따른 연봉제 도입, 선진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간 마찰, 그리고 이혼률 상승,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비 증가 등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성명재(2001) 참고)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득불평등도와 소비불평등도는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효용수준, 불평등도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계소득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까지 동시에 분석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도 및 소비불평등도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경제상황 하에서 소득 및 소비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이든 불평등도의 심화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불평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III-1] 소비 및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표 III-4]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총소비	총소득	경상소득
1982	0.270	0.289	0.287
1983	0.277	0.289	0.288
1984	0.285	0.288	0.288
1985	0.290	0.289	0.289
1986	0.282	0.285	0.286
1987	0.273	0.282	0.283
1988	0.291	0.275	0.274
1989	0.285	0.270	0.270
1990	0.286	0.259	0.261
1991	0.280	0.252	0.255
1992	0.278	0.251	0.252
1993	0.285	0.254	0.256
1994	0.274	0.256	0.256
1995	0.270	0.256	0.259
1996	0.278	0.263	0.264
1997	0.265	0.256	0.260
1998	0.270	0.293	0.277
1999	0.269	0.293	0.285
2000	0.260	0.300	0.276
2001	0.260	0.291	0.275
2002	0.253	0.284	0.274
2003	0.251	0.287	0.285
2004	0.256	0.287	0.288
2005	0.266	0.292	0.294
2006	0.271	0.294	0.296
2007	0.276	0.303	0.299

나. 소비불평등도 분해결과의 비교

[표 III-5]는 1982~2007년 기간 중 항목별 소비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추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1982년 전체 소비불평등도의 31.0%를 설명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은 소비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식료품이 소비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 현재 식료품이 소비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7%이다. 피복 및 신발부문 지출과 광열·수도 부문 지출 역시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복 및 신발부문 지출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1980년대초반 9% 수준에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6%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열·수도의 경우 1982년에는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6.3%였으나, 이후 기여도가 하락하여 최근에는 2~3%대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비 지출과 교통·통신비 지출의 소비 불평등도 대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교육비지출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1982년 9.6%에서 2007년에는 17.5%로 증가하였으며, 교통·통신 부문 지출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1982년 5.7%에서 2007년 19.2%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대체로 19~21%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주거비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2~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은 대체로 5~6%대, 교양·오락은 6~7%대, 그리고 보건·의료는 대체로 4~6%대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5]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 분석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31.0	2.4	6.3	5.8	9.6	6.6	9.6	5.7	7.1	15.8
1983	28.3	2.7	5.5	6.7	9.9	6.1	10.1	6.3	6.7	17.6
1984	28.4	2.3	5.3	6.9	9.5	6.0	10.6	5.7	6.5	18.8
1985	27.7	2.9	5.5	6.6	8.9	5.7	10.8	5.7	6.0	20.1
1986	26.2	2.6	4.6	7.2	8.8	6.6	12.0	5.7	6.1	20.2
1987	26.7	2.4	4.2	6.9	8.9	5.8	11.9	6.0	6.4	20.7
1988	25.4	3.2	3.7	7.8	10.0	5.7	8.9	6.3	8.1	20.9
1989	23.6	2.8	2.6	7.8	9.3	5.2	10.4	6.9	10.6	20.8
1990	22.8	3.5	2.5	8.1	8.8	4.5	10.2	6.4	12.5	20.5
1991	22.1	4.2	2.0	8.4	8.4	4.5	10.4	7.0	12.6	20.5
1992	20.9	4.5	2.0	6.9	8.3	4.7	11.7	6.4	13.1	21.5
1993	19.1	4.1	2.1	7.7	7.5	4.5	12.7	6.7	14.5	21.2
1994	19.9	3.0	1.6	7.4	7.7	3.9	11.0	6.8	18.5	20.2
1995	19.1	3.3	1.6	7.5	8.0	3.5	12.3	7.1	16.6	21.1
1996	18.5	3.1	1.6	7.5	8.2	3.5	12.4	6.6	17.0	21.6
1997	18.4	3.1	1.9	6.9	7.1	3.8	14.3	6.5	17.9	20.2
1998	19.6	2.9	2.5	6.0	6.2	4.5	15.4	5.5	15.7	21.7
1999	17.8	2.6	2.1	5.8	6.1	4.3	14.6	6.4	19.0	21.2
2000	16.8	2.9	2.0	6.2	6.8	3.6	14.3	7.3	19.5	20.7
2001	15.4	2.9	1.9	7.0	6.3	3.6	13.8	6.6	19.8	22.5
2002	16.3	3.7	2.0	6.9	6.5	4.2	14.2	6.2	18.9	21.0
2003	17.5	2.2	1.9	5.9	6.7	4.1	17.0	7.2	17.7	19.7
2004	17.2	2.4	1.9	5.9	6.2	4.6	17.2	7.1	18.1	19.5
2005	16.8	2.8	1.7	6.6	6.4	4.8	17.2	7.6	16.5	19.7
2006	16.0	3.0	2.0	6.1	6.3	5.3	17.7	7.0	17.3	19.3
2007	15.7	2.9	1.7	6.3	6.2	4.5	17.5	6.9	19.2	19.2

[표 III-6]은 연도별로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항목별 소비비중으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식료품과 광열·수도 지출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식료품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82년 75.4%에서 2007년 62.8%로 하락하였으며, 광열·수도 지출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82년 77.7%에서 2007년 37.3%로 하락하였다. 반면 주거비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82년 50.9%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75.1%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몇몇 소비항목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보건·의료 부문 지출과 교육비 지출, 교양·오락비 지출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반면, 교통·통신 부문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기타소비지출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82년 133.9%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111.0% 내외의 값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추세적으로 높아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복 및 신발 부문 지출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10% 전후의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2~2007년 기간을 놓고 볼 때 교육, 교양·오락,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교통·통신, 피복 및 신발, 기타 소비지출, 보건·의료 등의 소비항목은 상대적 기여도가 대체로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의 경우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낮았다. 즉 이들 세 소비항목의 비중의 증가가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12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표 III-6]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단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1982	75.4	50.9	77.7	133.9	115.6	113.7	177.0	163.0	104.7	133.9
1983	71.7	53.5	71.8	141.3	115.2	109.2	182.8	166.2	102.4	135.7
1984	73.5	45.8	70.1	140.6	113.8	111.8	176.6	159.4	99.6	133.9
1985	73.6	55.1	71.5	137.3	112.1	108.9	175.4	158.4	92.1	132.8
1986	72.3	50.1	66.4	139.2	110.7	118.8	176.4	151.5	91.9	127.9
1987	75.2	49.9	65.1	131.1	112.2	106.6	172.1	157.1	93.6	122.3
1988	72.6	71.3	62.8	136.7	114.4	108.8	144.2	154.5	110.7	120.2
1989	72.3	60.8	54.5	129.1	108.2	97.1	148.7	146.6	131.8	113.8
1990	69.2	78.5	54.4	138.8	104.8	92.6	142.6	140.9	145.7	111.3
1991	68.7	89.7	48.1	140.5	102.7	87.4	142.3	140.9	144.0	110.0
1992	67.9	95.7	47.5	127.4	104.5	92.9	145.3	130.5	139.9	109.9
1993	65.3	96.9	44.3	148.1	97.5	90.6	143.6	137.6	142.3	105.1
1994	66.6	70.2	38.1	140.7	99.5	84.1	139.2	132.1	153.8	106.4
1995	66.2	79.1	37.5	147.1	100.1	79.8	139.9	138.1	140.4	107.9
1996	65.3	78.6	36.2	150.7	106.1	80.1	134.7	131.8	135.5	110.7
1997	64.8	78.4	39.4	148.6	104.1	86.4	145.0	129.2	135.1	106.5
1998	71.0	73.8	42.8	145.7	111.2	98.9	153.2	128.3	107.1	111.7
1999	64.6	71.4	41.6	142.3	107.1	98.4	145.4	134.0	118.3	114.2
2000	61.9	80.0	37.5	151.0	115.0	85.4	141.3	137.5	119.6	114.4
2001	59.4	79.0	38.6	157.0	109.5	86.7	136.7	134.9	116.1	119.7
2002	62.4	95.5	39.5	160.3	113.1	96.7	136.0	132.0	111.6	113.5
2003	66.5	65.1	38.8	142.0	117.1	90.7	154.6	147.4	101.4	111.6
2004	64.2	70.0	40.5	135.2	116.3	102.1	158.1	146.3	101.3	112.3
2005	64.0	76.9	36.1	140.0	115.5	102.0	155.3	152.2	95.2	115.2
2006	63.1	77.5	41.0	130.9	117.4	109.0	157.8	143.6	98.9	110.9
2007	62.8	75.1	37.3	127.6	114.7	95.3	154.9	143.7	106.5	110.1

4. 경기변동과 소득분배

가. 분석개요 및 자료

이 장에서는 소비불평등과 경기변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¹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도와 소비불평등도의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기존연구와는 다른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변동이 각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본다.

이 장에서 사용한 거시 자료는 II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고, 소비불평등도 자료는 이 장에서 미시자료에서 도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의 추이, 단위근 검정에서 공통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였다.

14) 김준영·이광호(2004)에 따르면 경제위기 전후의 경기변동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위기 이전에는 (+)의 경기변동 충격이 2분기 이후에 서서히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범 외(2006)는 소득분위별로 경기변동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소득계층은 경기순응적, 최고소득계층은 경기역행적 양상을 보였으며, 최저소득계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표 III-7]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변수	설명	출처	이용가능기간
Y	실질GDP증가율	한국은행	1970.2~
DA	가계부채비율 =부채/자산	한국은행,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75.1~2005.3 (2002.4 이후 SNA기준 변경)
R	이자율(회사채, 장외3년, AA-)	한국은행	1987.1~
Gini_consA (A=1~9)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 (A=1: 식료품 A=2: 주거비 A=3: 광열·수도비 A=4: 가구집기 A=5: 피복및신발 A=6: 보건·의료비 A=7: 교육비 A=8: 교양·오락비 A=9: 교통·통신비)	통계청 <가계조사>를 기초로 계산	1982.1~

나. 단위근 검정¹⁵⁾

상대적 불평등기여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분변수가 안정적이었으나 소비항목별로 다른 항목도 있었다. 전체소비와 보건·의료비의 불평등기여도는 불안정한 시계열이었으나 구조적 변화를 제거한 후 안정적으로 변화였다.

식료품비와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의 소비불평등 기여도는 단위근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조적 변화가 없어 차분하여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주거비, 광열·수도비의 불평등기여도는 차분한 결과 ADF 검정에서는 10%수준에서만 유의하였기 때문에 KPSS(Kwiatkowski Phillips

15) 거시변수에 대한 검정결과는 II장에 있으므로 생략

Schmidt Shin) 검정을 추가로 하였으나, 단위근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통·통신비의 불평등기여도는 구조적 변화를 제거한 후에도 단위근이 발견되어 차분하여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교통통신비는 구조적 변화를 제거한 후에도 단위근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차분하였다. 차분한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III-8]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상대적 불평등기여도	수준변수	구조적 변화를 제거하거나 차분한 경우
전체소비(gnc0)	-3.067	-4.527 ***
식료품비(gnc1)	-3.095	-4.765 ***
주거비(gnc2)	-1.610	-3.289 * ³⁾
광열·수도비(gnc3)	-1.650	-3.760 **
가구집기(gnc4)	-3.669 **	-9.613 ***
피복신발(gnc5)	-1.239	-4.686 ***
보건·의료(gnc6)	-1.686	-5.155 ***
교육(gnc7)	-2.068	-4.901 ***
교양오락(gnc8)	-0.465	-3.972 **
교통·통신(gnc9)	-2.130	-3.846 **

주 1) 상수항 및 추세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고함

2) *, ** 및 ***는 ADF 검정통계량(MacKinnon(1996) 임계치) 기준의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3) KPSS검정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함

다. 인과관계 검정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서 선택된 후행의 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적합한 후행길이의 선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본 자료는 분기별 자료이기 때문에 1 ~ 4로 선택하였다. 적합한 후행길이는 F값의 유의미한 변화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후행길이가 1일 경우에는 GDP성장률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와 이자율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후행길이가 2일 경우와 4일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방향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후행길이가 4일 경우의 F값이 더욱 유의하였다.

4가지 시계열 자료들을 4차 후행하여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소비항목별 불평등 기여도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GDP증가율은 다른 변수의 원인변수에 가깝다.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원인변수가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였다. 반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미치는 GDP증가율의 영향은 소비항목별로 다르다. GDP가 증가할수록 식료품과 교통·통신비가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반면 다른 소비항목들은 GDP증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계부채비율은 GDP증가율의 원인변수는 아니지만,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항목별로 다르다. 식료품, 광열·수도비, 피복 및 신발비, 교통·통신비의 불평등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거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항목의 불평등 기여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의 원인변수라기 보다는 종속변수에 가까웠다. 성장률이나 가계부채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는 모든 소비항목이 GDP성장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부채비율에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편이었는데, 주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의 불평등기여도는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비항목의 불평등기여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항목은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항목이었다.

[표 III-9]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4 전체가구)

귀무가설	전체소비 금액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 가사용품
이자율↗성장률	0.470				
이자율↘성장률	2.209*				
부채비율↗성장률	1.173				
부채비율↘성장률	4.225***				
불평등도↗성장률	1.042	0.464	0.526	0.779	0.607
불평등도↘성장률	1.561	6.626***	0.858	1.698	0.278
부채비율↗이자율	3.022**				
부채비율↘이자율	1.230				
불평등도↗이자율	1.587	3.230**	3.814***	2.001	1.500
불평등도↘이자율	1.747	1.189	1.801	1.104	2.970**
불평등도↗부채비율	2.142*	2.570**	1.047	2.440*	1.141
불평등도↘부채비율	3.294**	3.220**	1.097	2.619**	0.623
귀무가설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불평등도↗성장률	0.581	0.765	0.312	0.380	0.249
불평등도↘성장률	1.400	0.531	0.689	1.301	2.038*
불평등도↗이자율	2.493*	2.116*	2.175*	2.610**	1.776
불평등도↘이자율	2.409*	0.814	0.910	0.691	2.852**
불평등도↗부채비율	3.000**	1.787	2.247*	0.776	2.063*
불평등도↘부채비율	4.782***	0.965	0.869	0.707	2.847**

주: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라. VAR와 충격반응분석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 간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을 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결과를 통한 변수 간 순서 선정은 기초로 VAR모형을 구축하였다. VAR(p)모형의 적정시차 p는 AIC가 최소가 되는 곳에서의 차수인 4를 적정 시차로 정하였다.

전기의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라 이번 기 소비 불평등기여도가 증가하

는 경우는 가사용품, 교양·오락비 두 항목뿐이다. 특히 다른 대부분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양·오락비의 계수는 유의한 편이었다. 즉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교양·오락비의 소비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비 불평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전기의 경제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이번 기의 소비 불평등기여도가 감소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성장률이 소비의 불평등도에 영향을 주는 기간은 다소 짧은 편이어서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는 2기에는 충격이 약해졌다.

전기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이번 기 소비 불평등기여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불평등기여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광열·수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특정 소비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부채비율이 소비의 불평등도에 영향을 주는 기간은 경제성장률의 영향보다는 다소 긴 편이었다. 소비항목 별로 다르지만 2기에 영향이 더 커지거나, 2기에 다소 약해지더라도 3기나 4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 이자율의 증가는 대부분의 소비항목에서 불평등기여도를 증가시켰다. 특히 주거비, 피복비, 교양·오락비의 경우에는 4기 전의 값까지 지속적으로 작지 않은 양(+)의 영향을 끼쳤다.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0]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

	식료품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가가 사용품	피복·신발
Y(-1)	-0.920	-1.763	-0.090	1.390	-0.140
	[-4.78578]	[-1.14920]	[-0.29942]	[1.32195]	[-0.23269]
Y(-2)	0.071	1.233	0.407	-0.351	0.057
	[0.31341]	[0.79754]	[1.37760]	[-0.33065]	[0.09305]
Y(-3)	-0.094	2.237	0.307	0.749	0.556
	[-0.44885]	[1.43120]	[1.01714]	[0.68018]	[0.88952]
Y(-4)	-0.017	-1.310	-0.230	-0.903	0.274
	[-0.07975]	[-0.84966]	[-0.78266]	[-0.85376]	[0.45774]
DA(-1)	0.409	4.188	-1.170	-0.897	-1.548
	[1.28606]	[1.66231]	[-2.30193]	[-0.50477]	[-1.53433]
DA(-2)	0.431	-4.067	0.758	-1.670	0.452
	[1.34118]	[-1.58535]	[1.41642]	[-0.94824]	[0.43537]
DA(-3)	0.716	-0.001	-1.299	-0.183	2.808
	[2.16310]	[-0.00026]	[-2.37429]	[-0.09737]	[2.65771]
DA(-4)	-0.262	1.208	1.459	1.221	-1.168
	[-0.77970]	[0.46921]	[2.81685]	[0.68982]	[-1.09757]
R(-1)	-0.039	0.570	0.272	0.690	0.419
	[-0.30723]	[0.56809]	[1.43034]	[1.02822]	[1.05806]
R(-2)	0.030	1.182	-0.095	1.099	0.709
	[0.24221]	[1.22041]	[-0.50702]	[1.57865]	[1.79025]
R(-3)	-0.014	0.031	-0.196	-0.829	0.370
	[-0.11093]	[0.03351]	[-1.10158]	[-1.22853]	[0.96172]
R(-4)	0.110	1.819	-0.045	1.254	0.615
	[0.92161]	[1.93199]	[-0.24611]	[1.86343]	[1.65222]
기여도(-1)	-0.559	-0.708	-0.414	-0.920	-0.681
	[-3.75382]	[-5.29334]	[-3.08651]	[-6.84907]	[-5.22202]
기여도(-2)	-0.201	-0.639	-0.656	-0.482	-0.540
	[-1.31703]	[-4.20158]	[-5.00952]	[-2.58350]	[-3.68864]
기여도(-3)	-0.366	-0.523	-0.390	-0.350	-0.438
	[-2.50714]	[-3.50963]	[-2.87009]	[-1.90537]	[-3.05046]
기여도(-4)	0.106	0.015	0.213	-0.089	0.278
	[0.82031]	[0.11210]	[1.71557]	[-0.65161]	[2.25940]
Adj. R2	0.751	0.599	0.766	0.794	0.814
F-statistic	14.020	7.441	15.127	17.572	19.893

주: [] 안은 t값을 의미함

[표 III-11] VAR 결과: 종속변수=각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 전체소비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전체소비
Y(-1)	0.188	-0.819	1.707	-0.158	0.102
	[0.27904]	[-1.14778]	[2.15087]	[-0.15782]	[1.34593]
Y(-2)	-1.217	0.169	-0.011	0.211	-0.063
	[-1.82144]	[0.23348]	[-0.01301]	[0.21185]	[-0.79792]
Y(-3)	-0.181	-0.392	-0.847	-2.489	0.021
	[-0.25429]	[-0.52817]	[-1.01941]	[-2.46542]	[0.27334]
Y(-4)	0.374	0.360	0.529	0.566	-0.047
	[0.54779]	[0.50008]	[0.67604]	[0.57828]	[-0.60125]
DA(-1)	0.918	-0.342	-1.702	3.928	-0.216
	[0.81178]	[-0.27472]	[-1.32696]	[2.41355]	[-1.64294]
DA(-2)	0.325	0.579	0.666	0.253	0.083
	[0.29766]	[0.47149]	[0.50405]	[0.14045]	[0.64710]
DA(-3)	-0.236	0.942	-0.736	-1.694	0.273
	[-0.21121]	[0.73508]	[-0.55580]	[-0.98340]	[2.05398]
DA(-4)	-1.653	0.182	-0.477	-2.996	-0.190
	[-1.54086]	[0.15170]	[-0.37698]	[-1.87293]	[-1.52213]
R(-1)	-0.283	0.316	0.323	-1.317	0.055
	[-0.67257]	[0.68655]	[0.64965]	[-2.32321]	[1.17351]
R(-2)	-0.425	-0.188	0.736	0.033	-0.053
	[-0.97338]	[-0.40648]	[1.45164]	[0.05536]	[-1.11757]
R(-3)	-0.618	0.097	0.302	0.778	-0.034
	[-1.50703]	[0.22114]	[0.62846]	[1.33981]	[-0.70205]
R(-4)	-0.215	-0.302	0.300	-0.236	0.020
	[-0.53688]	[-0.70320]	[0.64487]	[-0.41235]	[0.42132]
기여도(-1)	-0.246	-0.612	-0.821	-0.331	0.344
	[-1.90992]	[-4.63991]	[-5.75464]	[-2.40642]	[2.47571]
기여도(-2)	0.220	-0.153	-0.621	-0.276	0.263
	[1.67621]	[-0.99155]	[-3.66821]	[-1.95013]	[1.83776]
기여도(-3)	0.220	-0.189	-0.405	0.164	-0.232
	[1.61272]	[-1.21383]	[-2.43581]	[1.18401]	[-1.67310]
기여도(-4)	0.191	0.287	-0.051	0.275	0.014
	[1.37178]	[2.18251]	[-0.37394]	[2.14748]	[0.11108]
Adj. R2	0.033	0.967	0.351	0.436	0.192
F-statistic	1.145	125.800	3.335	4.336	2.025

주: [] 안은 t값을 의미함

충격반응 분석

다음 그림은 경제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소비항목별 소비불평등기여도 변화의 충격에 대해 각 변수들이 충격이후 10분기 동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각 그림마다 4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위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률의 반응, 오른쪽 위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비율의 반응, 왼쪽 아래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이자율의 반응,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의 변화 반응이다.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의 반응함수를 보기 전에, 전체소비의 불평등도와 거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2]을 보면, 소비불평등도의 충격은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소비불평등도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Kaldor(1956, 1957) 등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가 소비격차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aldor(1956, 1957)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클수록 총저축이 커져서 자본저축을 가속화하고 성장이 촉진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소비불평등도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소비불평등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깨지고,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충격은 1~4분기에는 소비불평등도를 상승시키지만, 5분기 이후에는 소비불평등도를 감소시켰다. 이는 경제가 성장할 경우 초기에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불평등도가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소득 및 소비 증가 효과가 이전되면서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적하(滴下)효과(trickle down effect)¹⁶⁾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¹⁷⁾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와 거시변수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왼쪽 위의 그림에서 소비항목의 불평등기여도가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사용품, 교양·오락, 교통·통신비 항목을 제외한 소비항목은 불평등기여도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이 소비의 불평등기여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규모, 초기 방향성, 지속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변화의 규모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가사용품, 주거비, 교통·통신비의 순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의해 불평등 기여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응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 충격에 대해 절반 이상의 소비항목에서 불평등 기여도는 완화된다. 성장률 충격에 대해서 불평등 기여도의 초기 반응은 가사용품,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는 (-)효과(불평등 기여도 감소)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증가할

16) 트리클 다운효과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17) 쿠즈네츠(1956)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초기에는 불평등도가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 불평등도가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소비불평등도에 있어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중범(2003) 등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해서는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소비항목 중 교육비지출과 피복·신발관련 지출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고, 교양·오락비, 가사용품 등은 불평등기여도가 감소하게 된다. 앞서 제II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소비항목 중 교육비지출은 소비비중이 증가하고, 교양·오락비, 가사용품, 피복·신발 등은 소비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항목별 소비비중이 높아지는 교육비의 경우 소비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고, 항목별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교양·오락비와 가사용품의 경우 불평등 기여도 역시 낮아진다. 피복·신발관련 지출의 경우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지만 항목별 소비비중이 낮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는 항목의 소비비중이 높아지고,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는 항목의 소비비중의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불평등도는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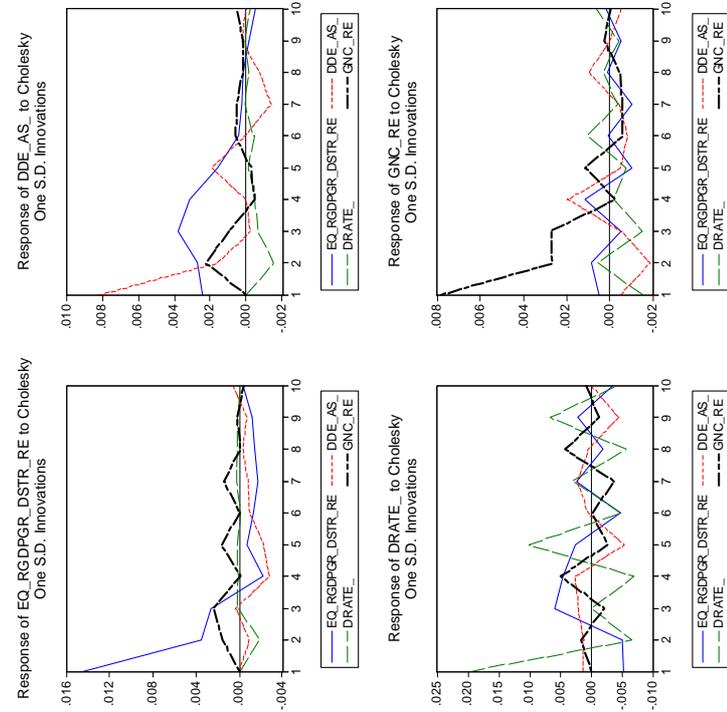
한편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충격에 대한 초기 반응의 방향성도 대부분 성장률 충격에 대한 반응과 거의 같았다. 다만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충격에 대한 불평등도의 반응은 1기보다 2기의 반응이 더욱 커지는 편이었으며, 매 기마다 (+)과 (-)의 반응을 반복하며 후기로 가더라도 변화의 폭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 변수에 대한 불평등기여도의 변화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반응의 변화폭이 커지는 시점은 앞 장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의 시차는 짧고, 부채비율과 이자율에 대한 반응 폭이 커지는 시점은 길었으나, 전반적으로 앞 장의 분석보다는 시차가 긴 편이었다. 직관적으로 거시경제의 변동이 소비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행태의 변화시점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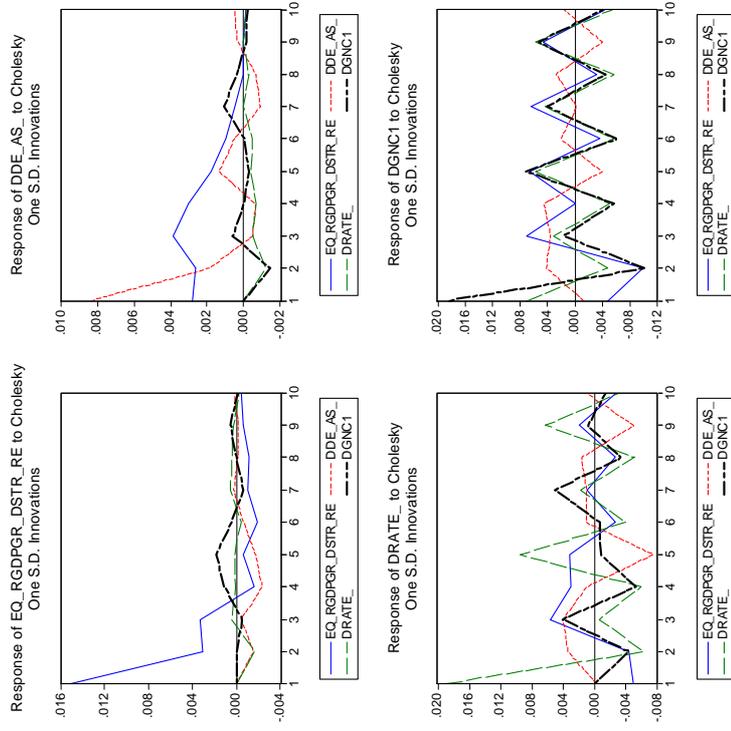
소비 불평등기여도와 다른 변수들의 동행성은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에서 동행적 측면을, 기타 소비항목의 경우 후행적 측면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차는 앞 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비지출의 크기가 언제 결정되는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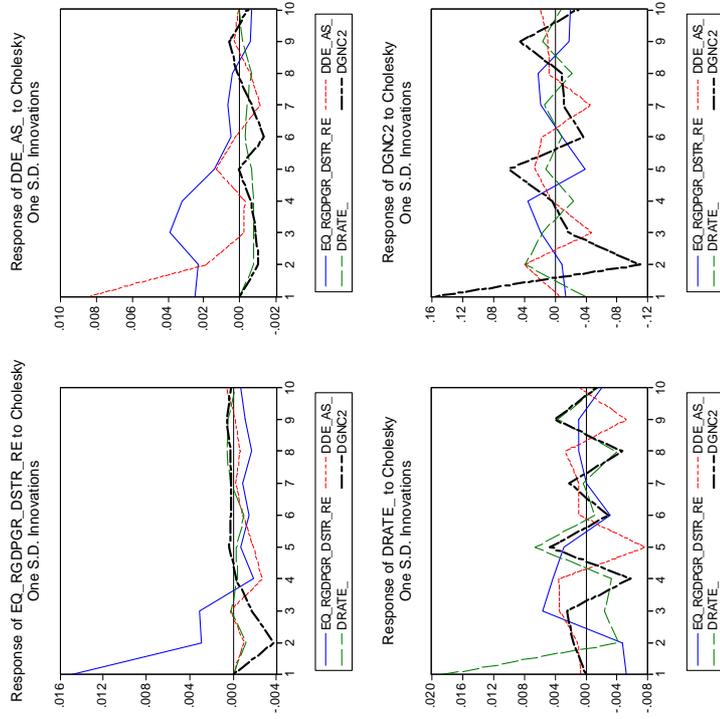
[그림 III-2] 충격반응함수: 소비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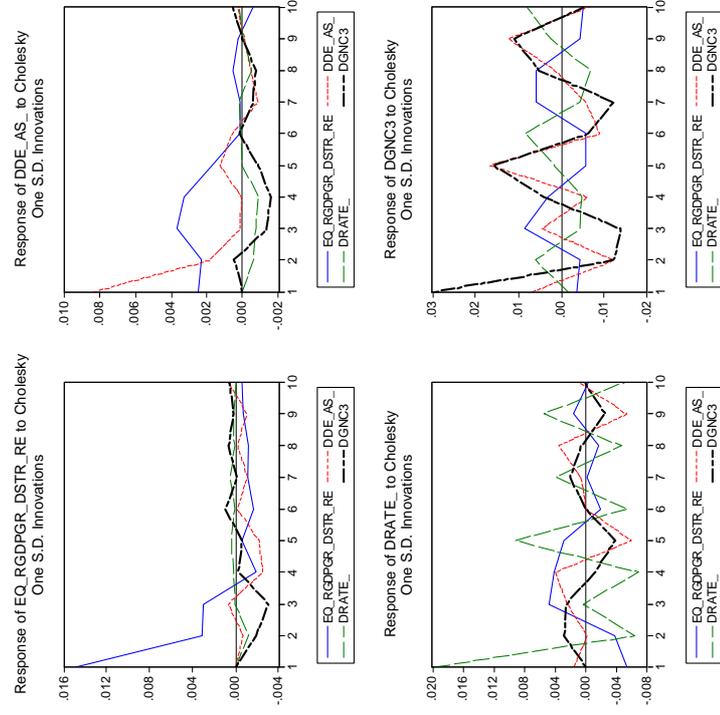
[그림 III-3] 충격반응함수: 식료품비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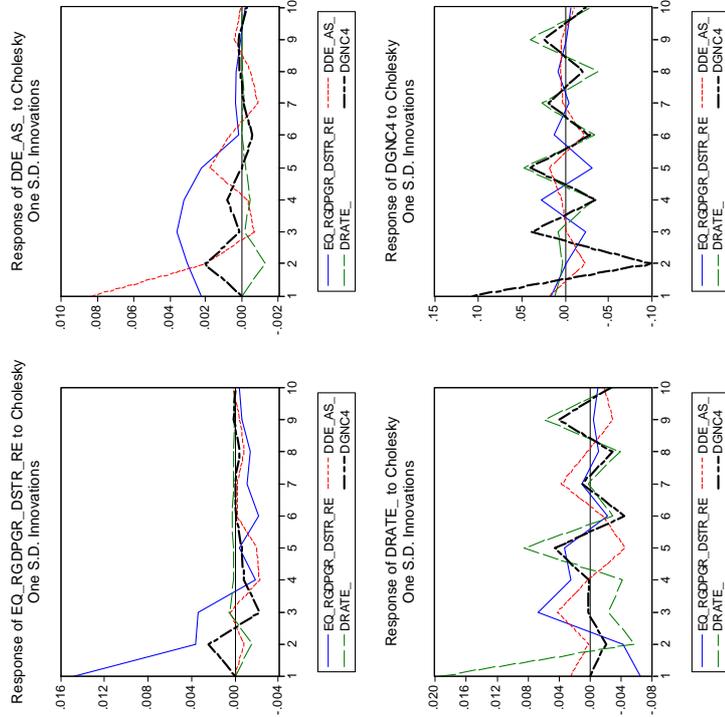
[그림 III-4] 충격반응함수: 주거비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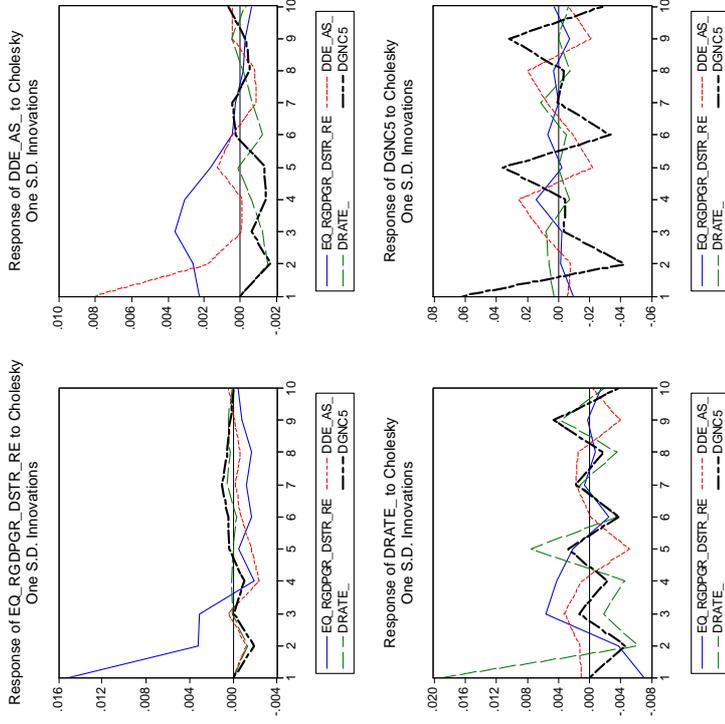
[그림 III-5] 충격반응함수: 광역수도비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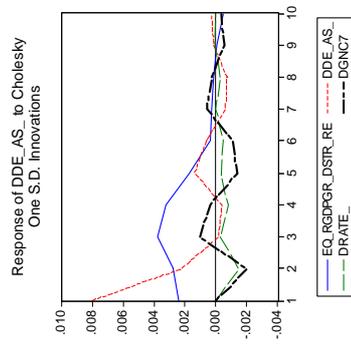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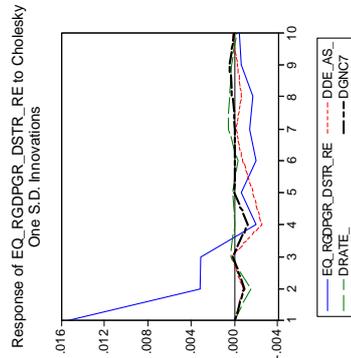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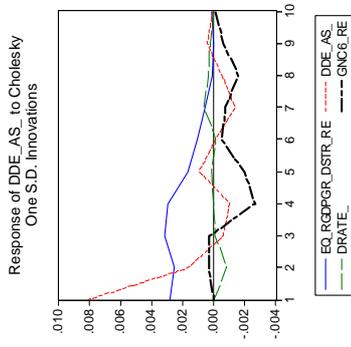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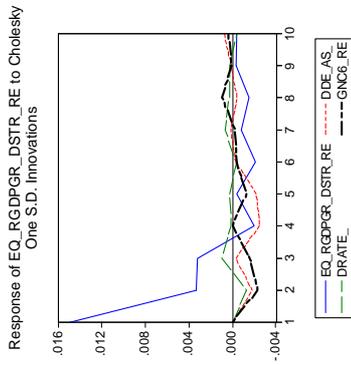
[그림 III-6] 충격반응함수: 가사용품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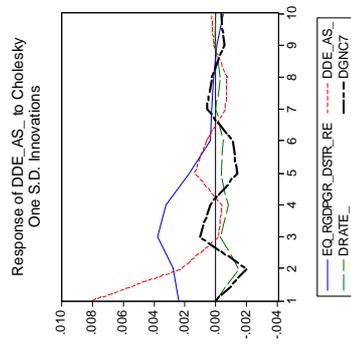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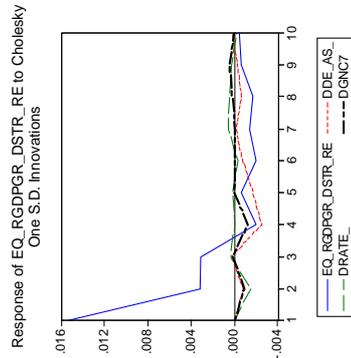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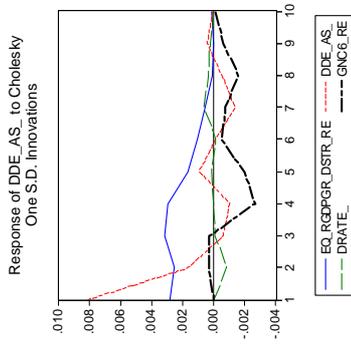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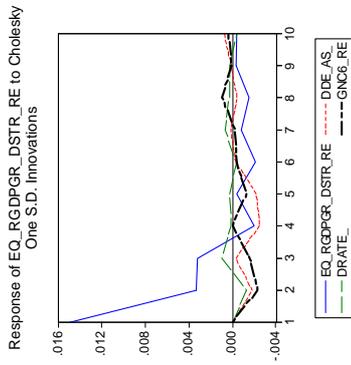
[그림 III-7] 충격반응함수: 피복신발비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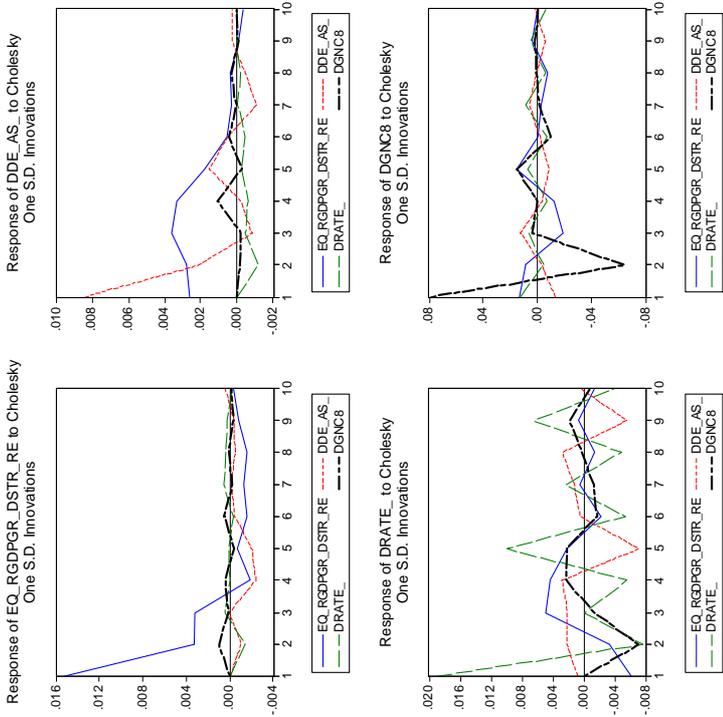
[그림 III-8] 충격반응함수: 보건의료비의 불평등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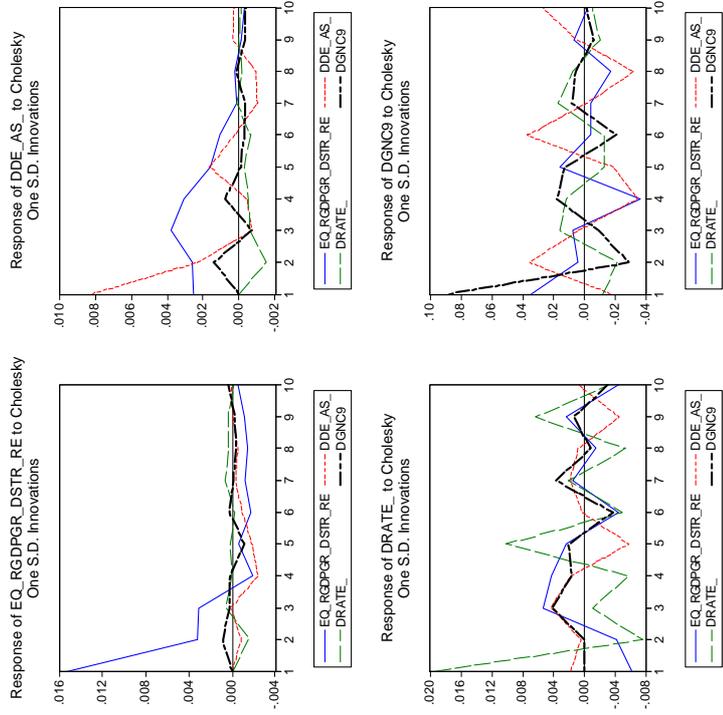
[그림 III-9] 충격반응함수: 교육비의 불평등기여도



[그림 III-10] 충격반응함수: 교양오락비의 불평등기여도



[그림 III-11] 충격반응함수: 교통통신비의 불평등기여도



5. 소결

제 III장에서는 지니계수 측정을 통해 가계소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제 2절에서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불평등도와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 소비 불평등도가 소득불평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기준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0.340이고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0.368,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 0.370이었다. Shorrocks(1982)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항목별 소비비중 대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비항목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52.9%에 달하였다. 이는 교육비지출이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소비불평등도가 약 1.53단위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교양오락(131.1%), 구가 집기 및 가사용품(129.9%), 피복 및 신발(116.6%), 교통통신(109.7%), 기타 소비지출(105.7%) 등이 상대적 기여도가 100% 이상인 소비항목이었다.

제 3절에서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982~2007년 기간 중 연도별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비불평등도는 1982년 이후 1985년까지는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가계 소비의 불평등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항목별 소비비중으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몇몇 소비항목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보건·의료 부문 지출과 교육비 지출, 교양·오락비 지출의 소비 불평등도

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반면, 교통·통신 부문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기타 소비지출의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982년 133.9%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111.0% 내외의 값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82~2007년 기간을 놓고 볼 때 교육, 교양·오락,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교통·통신, 피복 및 신발, 기타 소비지출, 보건·의료 등의 소비항목은 상대적 기여도가 대체로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의 경우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낮았다. 즉 이들 세 소비 항목의 비중의 증가가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비불평등도의 충격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경제성장률 충격은 1~4분기에는 소비불평등도를 상승시키지만, 5분기 이후에는 소비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변동이 항목별 소비의 불평등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Ⅱ장에서 예측한 경기변동에 따른 항목별 소비비중 변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소비의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IV

가계소비와 한계소비성향

1. 문제제기
2. 가구 특성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2007년 기준
3. 경기변동과 한계소비성향의 변화
4. 소 결

IV. 가계소비와 한계소비성향

1. 문제제기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감세 혹은 소득 이전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한계소비성향은 이러한 정책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 목표 대상을 정하고자 할 때, 즉 어느 집단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계소비성향을, 가구 특성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비성향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소비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비재 형태별 지출의 한계소비성향 추이를 발표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의 특성을 세분한 후, 각각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후, 정책운용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제 IV장에서는 2007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1인 이상 전국 가구를 소득,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각 가구집단 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다.

한편 가구의 소비성향은 경기변동 및 경기상황에 대한 예측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가계동향조사」 1982~2007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가계동향조사」 1982~2007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분기별 한계소비성향을 측정 한 후, VAR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가구 특성별 한계소비성향 분석: 2007년 기준

가. 소비함수

본 절에서는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가계지출함수를 추정한다. 가계지출함수 모형은 이철인(1998)이 사용한 함수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도되었다.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의 동태적 최적화를 도모하는 개인이 t 기에 직면 하는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⁸⁾

$$\begin{aligned}
 V_t(A_t) &= \text{Max}_{c_t, A_t^*} (U(c_t, z_t) + \delta E_t[V_{t+1}(A_{t+1})]) \\
 \text{s.t. } c_t &= y_t + \sum_j^g (A_{jt}^* - A_{jt}) \\
 A_t &= \sum_j^g A_{j,t} \\
 A_{j,t+1} &= A_{j,t}^* (1 + \bar{r}_{j,t})
 \end{aligned} \tag{5}$$

여기서 δ 는 효용함수의 할인율을 의미하고, z_t 는 시점 t 에서의 외생적 선호의 변화율, $A_{j,t}$ 는 t 기 초 j 번째 자산의 가치를 그리고 $A_{j,t}^*$ 는 t 기

18) 추정모형의 수리적 유도과정은 이철인(1998) 제 III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말 j 번째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bar{r}_{j,t}$ 는 자산 $A_{j,t}$ 의 수익률로서 불확실한 확률변수이다.

경제 내에 무위험자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자산의 상이한 수익률은 무위험자산의 수익률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5)식은 t 기에서 미래의 소비경로(consumption profile)을 결정하는 (6)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max_{\{c_t\}_0^T} E \sum_{t=0}^T \delta^{\tau-t} U(c_t, Z_\tau) \\ \text{s.t. } \sum_{t=0}^T d_\tau [c_\tau - y_\tau] = A \end{aligned} \quad (6)$$

여기서 $d_\tau (= 1/(1+r_\tau))$ 는 시점 τ 에서의 예산의 할인율을, r_τ 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리고 Z_t 는 t 시점에서의 외생적 선호의 변화를 의미한다.

효용극대화 과정의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c = d_t \cdot \lambda_t \quad (7)$$

$$\lambda_t = E_t(d_{t+1} \lambda_{t+1}) \quad (8)$$

효용함수가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수식(7)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Z_t \cdot c_t^{\beta-1} = d_t \cdot \lambda_t \quad (9)$$

수식 (9)에 로그를 취하여 $\log c_t$ 에 대해 정리하면 수식 (10)이 된다.

$$\log c_t = \frac{1}{1-\beta} (\log Z_t - \log d_t - \log \lambda_t) \quad (10)$$

$\log Z_t$ 는 t 기에서의 소비량과 관계없이 시간에 의존하는 선호를 의미하며, $\log \lambda_t$ 는 화폐의 한계효용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여기서 시간에 의존하는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로 가구주 연령을 대체하고, 화폐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현재소득과 미래 소득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변수 등으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c_{i,t} = a_{i,t} + b_1 age_{i,t} + b_2 \log y_{i,t} + c_i X_{i,t} + d_i A_{i,t} + \varepsilon_{i,t} \quad (11)$$

$age_{i,t}$ 는 가구주의 연령, $y_{i,t}$ 는 i 가구의 t 기 소득, $X_{i,t}$ 는 미래 소득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변수의 벡터, 그리고 $A_{i,t}$ 는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추정에 사용되는 이 모형이 의미는 소비수준이 현재까지 축적해 놓은 자산과 예상되는 미래 소득의 플로우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선호의 변화를 현재에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 기대로써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정보에 대한 완벽한 접근이 가능한 완전 예측(perfect foresight) 모형과는 달리 전기에 예측하지 못한 정보가 발생하면 매기 이를 모형에 새로 반영하여 소비수준을 다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모형은 Hall(1978)의 소비이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제분석에서는 모형의 종속변수로 모형의 종속변수로 가계의 월 평균소비액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 사용되었다.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계의 총소득에 대해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 사용되었다.¹⁹⁾ 그리고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주택소유여부가 사용되었다. 미래 소득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변수인 향후 경제활동 가능연수의 경우 사실상 연령의 함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구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로서 가구주의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연수, 가구원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 등을 변수에 포함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모형 1) 이외에도 가계의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한 모형(모형 2)을 구성한 후, 이 모형에 대해서도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는 가계 소비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상소득의 경우 재현이 가능한 일상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항상소득으로 인식하지만, 비경상소득의 경우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임시소득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V-1]는 2007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가계소비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추정결과에서 소득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한 설명변수의 계수값은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7년 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계소비의 총소득 탄력성은 0.5235로 측정되었다. 또한 모형 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상소득의 소득탄력성은 0.4094로, 비경상소득의 소득탄력성은 0.0260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19) 제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총소득은 가계의 가처분 총소득을 의미한다.

[표 IV - 1] 2007년 소비함수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5.8450	0.1174 ***	7.0595	0.1185 ***
연령	0.0164	0.0024 ***	0.0228	0.0026 ***
연령자승	-0.0002	0.0000 ***	-0.0002	0.0000 ***
성별	-0.0005	0.0132	0.0147	0.0142
교육수준(고졸 이상=1)	0.1658	0.0124 ***	0.0198	0.0133 ***
배우자 유무(유=1)	0.0551	0.0147 ***	0.0583	0.0159 ***
log(가구원수)	0.2924	0.0134 ***	0.3231	0.0144 ***
자가소유여부(소유=1)	0.0489	0.0100 ***	0.0592	0.0107 ***
log(총소득)	0.5235	0.0081 ***		
log(경상소득)			0.4094	0.0080 ***
log(비경상소득)			0.0260	0.0018 ***
Adj. R2	0.7695		0.733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나. 2007년 기준 한계소비성향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12)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β 는 소비함수 추정결과로 측정된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하며, $(C/Y)_i$ 는 i 집단의 평균소비성향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평균소비성향은 제 II장에서 사용한 것이다.

$$MPC = \beta \times \left(\frac{C}{Y}\right)_i \tag{12}$$

제II장의 분석에서 제시된 2007년 기준 1인이상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0.7366이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대에는 0.7901, 그리고 비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0.8859이다. 여기에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곱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면, 총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총소득이 10,000원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856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235로 측정되었고,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825로 측정되었다. 이는 비경상소득이 변하지 않고 경상소득이 10,000원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235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며, 경상소득이 변하지 않고 비경상소득이 10,000원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2,825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 가구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평균소비성향	0.7366	0.7901	10.8859
한계소비성향	0.3856	0.3235	0.2825

다. 가계특성별 한계소비성향

여기서는 소득,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등 가구 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가구특성을 구분한 후 각 특성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다. 이때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앞서 추정한 200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함수 추정결과를 통해 구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제 II장에서 측정한 평균소비성향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소득 분위에 따른 비교

전체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소득분위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0.6426으로 측정되었으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0.3092로, 소득 1분위 한계소비성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 역시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졌다. 그러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이와는 다른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정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4분위 집단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회적인 비경상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를 소비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 등에 사용하게 된다. 반면 고소득층은 경상소득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여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을 저축 등을 통해 적립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소비성 부채의 존재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도 소비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지출을 위해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구

의 경우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소비지출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낮게 측정된다.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성 부채 상환을 위해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다른 측면에서 반박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거의 1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경상소득에 대한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득이 낮게 측정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만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이전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금을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한다면, 정책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측정 결과가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3]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소득수준)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전체	0.3856	0.3235	0.2825
1분위	0.6426	0.6282	0.1593
2분위	0.5180	0.4671	0.1937
3분위	0.4618	0.4082	0.1986
4분위	0.4545	0.3908	0.2491
5분위	0.4317	0.3650	0.2863
6분위	0.4128	0.3456	0.3113
7분위	0.3868	0.3225	0.3101
8분위	0.3673	0.3059	0.2996
9분위	0.3590	0.2959	0.3474
10분위	0.3092	0.2537	0.3277

(2)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비교

[표 IV-4]에서는 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경우 근로자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3665로, 근로자 외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4243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처럼 근로자 외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수준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총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은 근로자 가구가 302.8만원, 근로자 외 가구가 222.4만원이다.

경상소득을 기준 한계소비성향 역시 근로자 외 가구가 0.3569로 근로자 가구의 0.3071보다 컸다.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 역시 근로자 외 가구가 0.2996으로 근로자 가구의 0.2736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IV-4]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근로자 가구 vs. 비근로자 가구)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근로자 가구	0.3665	0.3071	0.2736
근로자 외 가구	0.4243	0.3569	0.2996

주: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영세상인인 자영업주나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개인 경영자 및 법인경영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유업자로서 주로 영업을 이유로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가구 등을 포함함

(3) 가구유형에 따른 비교

여기서는 가구 유형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가구 등

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노인가구의 경우 0.4582, 모자가구는 0.4311이었으며, 맞벌이 가구는 이들 가구보다 약 0.1정도 낮은 0.3422였다. 그리고 이들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4007로 측정되었다.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 역시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과 유사하게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에게서 크게 측정되었다. 노인가구는 0.4231, 모자가구는 0.3558이었으며, 맞벌이 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0.2785와 0.3389였다.

한편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노인가구의 경우 0.1485로 아작았으나 모자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0.4086과 0.4352로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컸다. 일반가구의 경우 0.2637로 전체 가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측정결과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비경상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가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경상소득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불확실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가구의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성 부채의 존재 역시 노인가구의 비경상소득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평균소비성향이 103.3%로 일상적인 소비지출을 위해 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모자가구의 경우 유동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 월평균 총소득은 노인가구가 88.4만원, 모자가구가 195.8만원, 맞벌이 가구가 410.6만원, 일반가구가 264.8만원이다.

[표 IV-5]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가구 유형)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노인가구	0.4582	0.4231	0.1485
모자가구	0.4311	0.3558	0.4086
맞벌이 가구	0.3422	0.2785	0.4352
일반가구	0.4007	0.3389	0.2637

주: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모자가구는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각각 의미함

(4)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비교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가구를 주택 소유 가구와 주택 미소유 가구로 구분한 후 한계소비성향을 측정된 결과에서는 주택소유여부가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주택소유가구의 경우 0.3849이고, 주택 미소유 가구의 경우 0.3877로 측정되었으며,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주택소유가구는 0.3238, 주택미소유가구는 0.3223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주택 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 가구의 한계소비성향 측정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주택미소유가구의 소득수준이 총소득 기준 214.3만원으로 주택 소유가구의 296.2만원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소비성향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제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주택 미소유가구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위해 소비지출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주택미소유가구가 0.3246으로 주택소유가구의 0.27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주택미소유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주택마련 저축을 위해 소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지만,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에 부족했던 소비지출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주택 미소유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이전 정책을 펼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측정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소비진작을 목표로 주택 미소유 가구의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때 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보다는 일회적인 비경상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6]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주택 소유)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주택소유	0.3849	0.3238	0.2720
주택미소유	0.3877	0.3223	0.3246

(5) 거주 지역에 따른 비교

거주 지역에 따라 가구를 도시지역 거주 가구와 도시 외 지역 거주 가구로 구분한 후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주택 소유가구와 주택 미소유 가구의 한계소비성향 측정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도시 외 지역 거주가구의 소득수준이 총소득 기준 월평균 223.4만원으로 도시 지역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 282.6만원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한계소비성향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도시지역 거주 가구가 0.3865이고, 도시 이외 지역 거주가구가 0.3807로 측정되었다.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도시지역 거주가구가 0.3236, 도시 이외 지역 거주가가 0.3230이다.

160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이는 도시 이외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지출액을 갖고 도시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비지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도시지역 거주가구가 0.2923으로 도시 외 지역 거주가구의 0.2417보다 높았다.

[표 IV-7]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거주지역)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도시	0.3865	0.3236	0.2923
도시 이외 지역	0.3807	0.3230	0.2417

주: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 상 동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함

3. 경기변동과 한계소비성향의 변화

가. 분석개요 및 자료

한계소비성향에 관한 횡단면 분석의 측정치는 정책의 주요 타겟팅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량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줄 경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즉, 200만원 소비하던 사람이 소득이 줄었다고 갑자기 100만원으로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채의 우선상환, 장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준비, 재산의 축적, 영리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조건과 이자율이나 재정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소득의 일부

가 저축 또는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에 지출되는 부분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소득의 증감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일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한계소비성향은 조세승수나 재정지출승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경기변동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을 이용한 정책승수 및 시차의 계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상황(경제성장률)의 변화가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반응의 비율이나 시차가 일정하다면,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승수의 크기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요 거시 경제 지표와 한계소비성향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정책효과 파악에 간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GDP의 변화에 한계소비성향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때, GDP의 변화뿐만 아니라 II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거시변수와 한계소비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이론을 종합해서 선정된 거시경제변수는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적 추세자료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한 상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기변동과 단기적인 한계소비성향의 변화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 간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VAR 검정을 실시한다. 이 때 각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검정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 후 VAR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여 추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VAR 모형 자체가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분석에 다소 부적합할 수 있으나 예측모형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162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는 점을 고려하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서 향후 경제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 등의 관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III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득분위별 경기변동과 한계소비성향의 관계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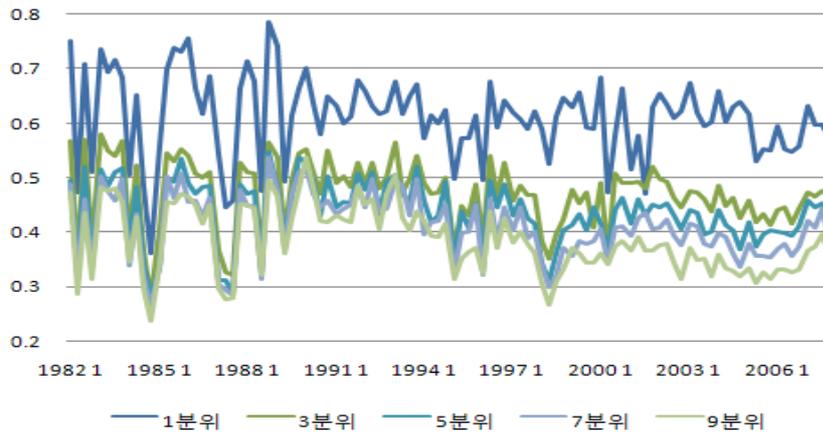
이 장에서 사용한 거시 자료는 경기변동과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III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다. 다른 점은 한계소비성향 자료인데, 이는 한계소비성향은 III장의 미시자료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의 추이, 단위근 검정에서 공통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앞에서 분석한 거시변수를 제외한 한계소비성향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계소비성향은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2007년 사이에 0.2~0.8사이에서 일정한 편이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V-8] 모형에 포함된 변수, 1987.1~2005.3

변수	설명	출처	이용가능기간
Y	실질GDP증가율	한국은행	1970.2~
DA	가계부채비율 =부채/자산	한국은행 <금융자산부채잔액표>	1975.1~2005.3 (2002.4 이후 SNA기준 변경)
R	이자율(회사채, 장외3년, AA-)	한국은행	1987.1~
MPCa (a=0~10)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 (단, a=0일 경우에는 전체가구)	통계청 <가계조사>를 기초로 계산	1982.1~

[그림 IV-1] 한계소비성향의 추이



다. 단위근 검정²¹⁾

한계소비성향의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상수항, 상수항과 추세항을 고려한 경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두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였다. 이 때 추세항이 5%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추세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시계열을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의 존재는 소득 8, 9, 10분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상수항, 상수항과 추세항을 고려한 경우에는 대부분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모두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같았다. 그러나 추세항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IC기준이 아닌 SIC 기준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단위근의 존재유무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분안정화시킨 변수를 VAR모형에 사용하였다.

21) 거시변수에 대한 검정결과는 II장에 있으므로 생략

[표 IV-9]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통계량

	상수항, 추세를 고려한 경우	상수항만 고려한 경우	고려하지 않은 경우
Y	-6.739 ^{***}	-6.389 ^{***}	-2.584 ^{**}
Y_DS	-4.522 ^{***}	-4.561 ^{***}	-4.591 ^{***}
DA	-2.499	-2.183	0.651
ΔDA	-5.638 ^{***}	-2.598 [*]	-2.228 ^{**}
R	-2.627	-0.513	-0.991
ΔR	-5.565 ^{***}	-5.465 ^{***}	-5.405 ^{***}
MPC0	-4.933 ^{***}	-4.302 ^{***}	-0.813
MPC0_DS	-9.475 ^{***}	-7.352 ^{***}	-7.346 ^{***}
MPC1	-3.036	-7.740 ^{***}	-0.577
ΔMPC1	-11.200 ^{***}	-11.154 ^{***}	-11.232 ^{***}
MPC2	-6.724 ^{***}	-6.731 ^{***}	-0.725
ΔMPC2	-5.140 ^{***}	-5.120 ^{***}	-5.164 ^{***}
MPC3	-4.030 ^{**}	-3.974 ^{***}	-0.514
ΔMPC3	-14.756 ^{***}	-14.804 ^{***}	-14.909 ^{***}
MPC4	-5.885 ^{***}	-5.779 ^{***}	-0.656
ΔMPC4	-13.121 ^{***}	-13.177 ^{***}	-13.274 ^{***}
MPC5	-4.962 ^{***}	-4.750 ^{***}	-0.605
ΔMPC5	-9.432 ^{***}	-9.336 ^{***}	-9.397 ^{***}
MPC6	-4.940 ^{***}	-4.573 ^{***}	-0.613
ΔMPC6	-9.798 ^{***}	-9.364 ^{***}	-9.769 ^{***}
MPC7	-4.926 ^{***}	-4.423 ^{***}	-0.629
ΔMPC7	-10.094 ^{***}	-9.967 ^{***}	-10.037 ^{***}
MPC8	-5.025 ^{***}	-3.245 ^{**}	-0.817
MPC8_DS	-7.077 ^{***}	-6.968 ^{***}	-6.967 ^{***}
MPC9	-4.389 ^{***}	-3.538 ^{***}	-0.985
MPC9_DS	-9.535 ^{***}	-7.137 ^{***}	-7.127 ^{***}
MPC10	-4.607 ^{***}	-0.638	-1.056
MPC10_DS	-9.588 ^{***}	-9.621 ^{***}	-9.682 ^{***}

주 1) 변수명 뒤에 “_DS”이 붙은 경우에는 구조적 변화를 제거한 변수임
 2) *, ** 및 ***는 ADF 검정통계량(MacKinnon(1996) 임계치) 기준의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라. 인과관계 검정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서 선택된 후행의 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적합한 후행길이의 선택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본 자료는 분기별 자료이기 때문에 1 ~ 4로 선택하였다. 적합한 후행길이는 F값의 유의미한 변화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후행길이가 1일 경우에는 GDP성장률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와 이자율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후행길이가 2일 경우와 4일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방향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후행길이가 4일 경우의 F값이 더욱 유의하였다.

4가지 시계열 자료들을 4차 후행하여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변수들간의 전도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은 다른 변수들의 원인변수이다. 이 중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만 가계부채비율과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하였다.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의 원인변수라기 보다는 종속변수에 가까웠다. 성장률이나 가계부채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자율이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라는 가설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나, 4분위, 6분위, 9분위 소득구간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며, 8분위, 10분위 소득구간에서도 10% 유의수준에서만 기각될 뿐이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은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이지만(5% 수준에서 유

의), 한계소비성향과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동일하다.

한편 한계소비성향은 성장률과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채비율에는 1~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면 인과관계의 순서는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의 순서이거나 GDP증가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 부채비율의 순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관계)이며, 전자의 결과 또한 유의한 편이기 때문에 ‘GDP증가율, 가계부채비율, 실질이자율, 한계소비성향’ 순서대로 VAR분석을 실시한다.

[표 IV-10]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F값(시차=4)

귀무가설	전체가구 (시차=2)	전체가구 (시차=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자율↗성장률	1.546			0.470		
이자율↖성장률	2.649*			2.209*		
부채비율↗성장률	1.051			1.173		
부채비율↖성장률	4.324**			4.225***		
MPC↗성장률	0.095	0.693	0.202	0.157	0.504	0.369
MPC↖성장률	4.455**	2.933**	2.834**	1.787	2.258**	2.263**
부채비율↗이자율	2.859*			3.022**		
부채비율↖이자율	1.081			1.230		
MPC↗이자율	2.527	0.994	0.182	0.446	0.859	0.542
MPC↖이자율	3.684**	2.921**	2.764**	3.761***	4.053***	1.984
MPC↗부채비율	4.315**	3.761***	3.199**	2.742**	4.022***	3.132**
MPC↖부채비율	0.122	0.783	0.510	0.839	0.725	0.758
귀무가설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MPC↗성장률	0.128	0.401	0.285	0.603	0.404	0.898
MPC↖성장률	3.554**	2.347**	2.945**	2.959**	2.874**	3.023**
MPC↗이자율	0.556	0.107	0.076	1.012	1.175	1.512
MPC↖이자율	3.791***	1.383	2.742**	2.090*	1.982	2.092*
MPC↗부채비율	2.713**	2.856**	3.366**	4.389***	2.825**	3.317**
MPC↖부채비율	1.157	0.685	0.553	0.749	1.190	1.008

주: *, ** 및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마. VAR와 충격반응분석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각 소비의 비중 간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변수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고자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을 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결과를 통한 변수 간 순서 선정은 기초로 VAR모형을 구축하였다. VAR(p)모형의 적정시차 p는 AIC가 최소가 되는 곳에서의 차수인 4를 적정 시차로 정하였다.

다음 표는 GDP증가율, 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의 VAR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부채비율은 전기 자기자신의 값과 양(+)¹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이자율과 한계소비성향은 전기의 값과 음(-)²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이자율과 한계소비성향은 다소 변동이 심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변수 간의 상호관계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한계소비성향과 다른 변수들의 관계이다. 우선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면, 전기의 GDP증가율의 1% 증가는 이번 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93%포인트 증가시킨다. 이는 GDP의 증가는 소득보다는 소비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상승은 다음기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전기 부채비율의 1% 증가는 이번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68%포인트 감소시키며, 전기 이자율의 1% 증가는 이번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42%포인트 감소시킨다. 계수는 부채비율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편이다.

이자율의 상승이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자율이 저축의 대가라면 이자율의 상승은 소득효과보다는 대체효과가 큰 경우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대출의 비용이라면 이자율의 상승은 소득효과나 대체효과 모두 소비를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향의 지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GDP성장율의 충격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1분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지만, 부채비율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4분기 이상,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은 최소 2분기 이상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거시 변수들의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경제성장률이나 부채비율의 전기값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자율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고소득층(소득7분위~10분위)보다 저소득층(소득1분위~소득3분위)에서 훨씬 크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식의 설명력 또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1] VAR 결과: 전체소득분위

	Y	DA	R	MPC0
Y(-1)	0.206 (0.145)	0.108 (0.079)	-0.414 (0.202)	0.933 (0.275)
Y(-2)	0.183 (0.148)	0.173 (0.080)	0.185 (0.207)	-0.291 (0.281)
Y(-3)	-0.144 (0.156)	0.046 (0.085)	0.064 (0.218)	0.158 (0.297)
Y(-4)	0.078 (0.149)	0.044 (0.081)	0.209 (0.208)	0.282 (0.284)
DA(-1)	-0.061 (0.249)	0.231 (0.135)	0.199 (0.348)	-0.677 (0.473)
DA(-2)	0.035 (0.258)	-0.071 (0.140)	0.252 (0.361)	-0.397 (0.491)
DA(-3)	-0.261 (0.241)	0.076 (0.131)	0.457 (0.337)	0.681 (0.458)
DA(-4)	-0.065 (0.241)	0.225 (0.131)	-0.890 (0.337)	0.629 (0.459)
R(-1)	-0.079 (0.089)	-0.061 (0.048)	-0.355 (0.124)	-0.476 (0.168)
R(-2)	-0.015 (0.099)	0.003 (0.054)	-0.126 (0.139)	-0.508 (0.189)
R(-3)	-0.011 (0.095)	0.001 (0.052)	-0.264 (0.132)	-0.032 (0.180)
R(-4)	-0.051 (0.088)	-0.032 (0.048)	0.376 (0.124)	0.063 (0.168)
MPC0(-1)	-0.050 (0.069)	-0.001 (0.038)	0.030 (0.097)	-0.417 (0.131)
MPC0(-2)	0.000 (0.065)	0.078 (0.035)	0.104 (0.091)	0.090 (0.123)
MPC0(-3)	-0.025 (0.064)	-0.021 (0.035)	0.053 (0.089)	0.393 (0.122)
MPC0(-4)	0.017 (0.060)	-0.044 (0.033)	0.014 (0.084)	0.226 (0.115)
Adj. R2	-0.054	0.309	0.550	0.318
F-statistic	0.781	2.928	6.266	3.010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IV-12] VAR 결과: 종속변수=MPC, 1~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Y(-1)	1.060 (0.457)	0.762 (0.404)	0.928 (0.348)	0.919 (0.344)	0.954 (0.307)
Y(-2)	-0.838 (0.474)	-0.517 (0.405)	-0.350 (0.354)	-0.299 (0.352)	-0.414 (0.315)
Y(-3)	0.291 (0.514)	0.273 (0.428)	0.001 (0.369)	0.489 (0.372)	-0.015 (0.333)
Y(-4)	0.213 (0.491)	0.481 (0.414)	0.285 (0.354)	0.240 (0.359)	0.053 (0.312)
DA(-1)	-0.804 (0.825)	-0.650 (0.718)	-0.902 (0.619)	-1.115 (0.598)	-0.574 (0.512)
DA(-2)	-0.391 (0.802)	-1.285 (0.706)	-0.707 (0.613)	-0.661 (0.612)	-0.615 (0.513)
DA(-3)	1.032 (0.792)	0.630 (0.698)	0.770 (0.604)	0.608 (0.600)	0.756 (0.513)
DA(-4)	0.357 (0.756)	0.611 (0.664)	0.089 (0.572)	0.540 (0.569)	0.109 (0.498)
R(-1)	-0.544 (0.284)	-0.771 (0.251)	-0.530 (0.214)	-0.356 (0.211)	-0.417 (0.186)
R(-2)	-0.450 (0.304)	-0.920 (0.280)	-0.535 (0.240)	-0.294 (0.227)	-0.296 (0.205)
R(-3)	0.329 (0.290)	-0.205 (0.277)	0.185 (0.238)	0.164 (0.216)	0.251 (0.197)
R(-4)	0.304 (0.285)	0.039 (0.255)	0.259 (0.222)	0.280 (0.210)	0.251 (0.193)
MPC0(-1)	-0.773 (0.133)	-0.865 (0.130)	-0.884 (0.129)	-0.750 (0.131)	-0.673 (0.130)
MPC0(-2)	-0.330 (0.152)	-0.433 (0.149)	-0.265 (0.152)	-0.387 (0.146)	-0.264 (0.133)
MPC0(-3)	0.111 (0.157)	-0.018 (0.151)	0.113 (0.154)	0.043 (0.150)	0.181 (0.133)
MPC0(-4)	0.032 (0.122)	0.170 (0.116)	0.196 (0.117)	0.097 (0.121)	0.173 (0.112)
Adj. R2	0.537	0.471	0.517	0.433	0.456
F-statistic	6.002	4.842	5.615	4.296	4.619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표 IV-13] VAR 결과: 종속변수=MPC, 6~10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Y(-1)	0.876 (0.346)	1.092 (0.301)	0.950 (0.296)	0.919 (0.275)	0.906 (0.268)
Y(-2)	-0.366 (0.347)	-0.220 (0.313)	-0.356 (0.305)	-0.373 (0.282)	-0.432 (0.274)
Y(-3)	0.142 (0.357)	-0.001 (0.323)	-0.009 (0.322)	0.362 (0.299)	0.319 (0.298)
Y(-4)	0.644 (0.347)	0.250 (0.309)	0.235 (0.303)	0.015 (0.285)	0.256 (0.284)
DA(-1)	-0.620 (0.577)	-0.877 (0.526)	-0.433 (0.515)	-0.895 (0.465)	-0.835 (0.458)
DA(-2)	-0.875 (0.580)	-0.548 (0.528)	0.071 (0.541)	-0.196 (0.477)	-0.392 (0.480)
DA(-3)	0.412 (0.577)	0.642 (0.517)	0.844 (0.505)	0.604 (0.458)	0.588 (0.448)
DA(-4)	0.238 (0.550)	0.674 (0.492)	0.325 (0.503)	0.823 (0.466)	0.724 (0.445)
R(-1)	-0.384 (0.211)	-0.446 (0.185)	-0.426 (0.180)	-0.428 (0.170)	-0.443 (0.165)
R(-2)	-0.281 (0.222)	-0.443 (0.202)	-0.453 (0.198)	-0.262 (0.192)	-0.426 (0.185)
R(-3)	0.088 (0.209)	0.079 (0.194)	-0.100 (0.189)	0.082 (0.179)	-0.028 (0.171)
R(-4)	0.036 (0.207)	0.114 (0.188)	0.031 (0.178)	0.086 (0.170)	0.077 (0.161)
MPC0(-1)	-0.709 (0.130)	-0.807 (0.125)	-0.396 (0.135)	-0.272 (0.137)	-0.353 (0.133)
MPC0(-2)	-0.316 (0.136)	-0.348 (0.136)	0.107 (0.128)	0.071 (0.126)	0.052 (0.122)
MPC0(-3)	0.052 (0.139)	0.125 (0.140)	0.357 (0.122)	0.261 (0.127)	0.423 (0.121)
MPC0(-4)	0.110 (0.121)	0.242 (0.115)	0.122 (0.120)	0.080 (0.115)	0.177 (0.117)
Adj. R2	0.342	0.478	0.273	0.239	0.318
F-statistic	3.244	4.957	2.616	2.352	3.009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충격반응 분석

여기서는 충격반응함수를 사용하여 “경제성장 등의 변화가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충격반응함수에서 충격은 오차의 1표준오차만큼의 충격에 대한 각 변수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여기서는 해석의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 1%의 충격에 대한 각 변수들의 반응으로 수정하였다.

다음 그림은 4개의 내생변수가 각각의 1%만큼의 충격에 대하여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의 충격에 대해 충격이후 10분기 동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열은 성장률 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이다. 성장률, 가계부채비율, 이자율, 한계소비성향의 반응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성장률 충격은 1기의 성장률을 0.01%p만큼 증가시키지만, 2기부터는 충격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어진다. 둘째, 경제성장률의 1% 증가는 가계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이 반응은 7분기까지 지속된다. 성장률 충격에 대한 부채비율의 반응은 상관관계분석²²⁾과는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상관관계분석 및 충격반응분석에서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점과 이자율 변화시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저축을 줄이고 소비나 차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한다면 해석이 가능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본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이자율의 변화보다는 부채비율의 변화가 먼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경제성장률의 1% 증가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단기(2분기)에는 감소하다가, 3분기부터 장기로 갈수록 상승하며, 5분기 이후에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1분기에 경제성장률 증가 충격이 가해질 경우 한계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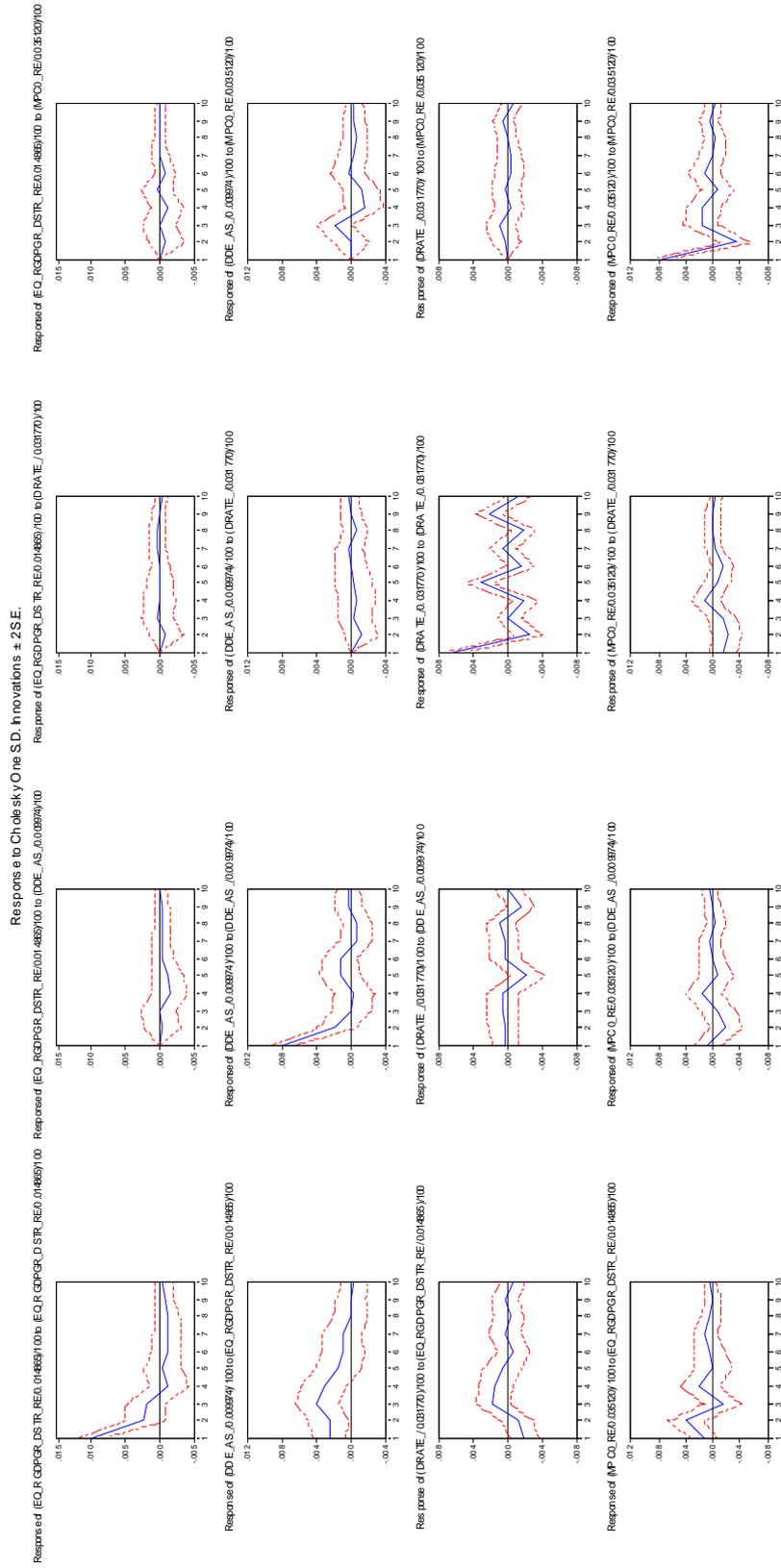
22) 본 보고서에서는 수록하지 않았으나, 표본기간동안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비율은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관관계계수는 10%수준에서 유의하다.

은 2분기에 상승하였다. 이는 앞서 제II장에서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1분기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네 번째 열은 한계소비성향에 1% 충격이 있을 경우 다른 변수들의 반응을 차례로 나타내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을 제외한 변수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인데,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변수의 원인변수라기 보다는 종속변수라는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와 일치한다.

네 번째 행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변수들의 충격에 대해 1기보다는 2기에 더욱 큰 반응을 나타낸다. 한계소비성향의 조정은 그리 긴 시간동안 조정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부채비율과 이자율 충격에 대한 반응이다. GDP 성장률에 대하여 2기까지는 증가하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부채비율은 1기에는 반응이 미약하지만 2기에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역시 감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2기의 반응이 더욱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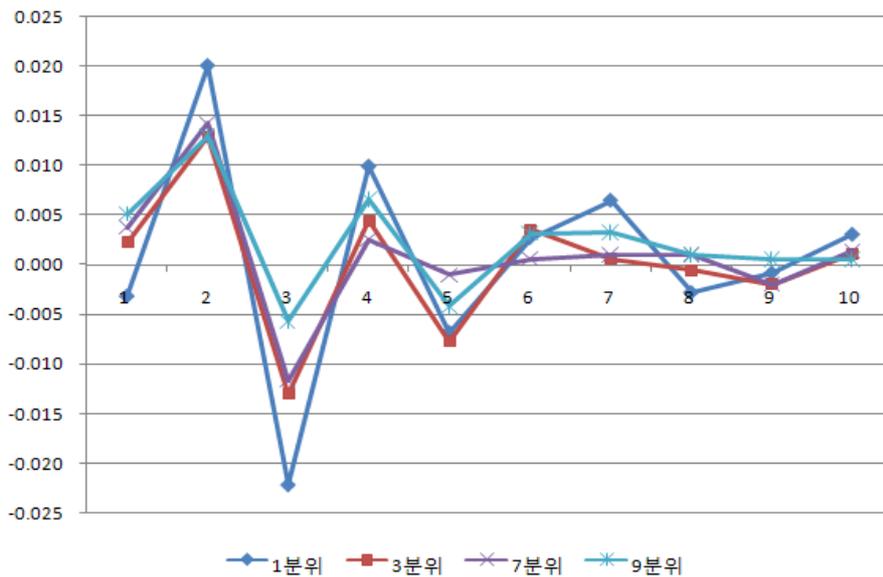
[그림 IV-2] 충격반응함수: 성장률, 부채비율, 이자율, 한계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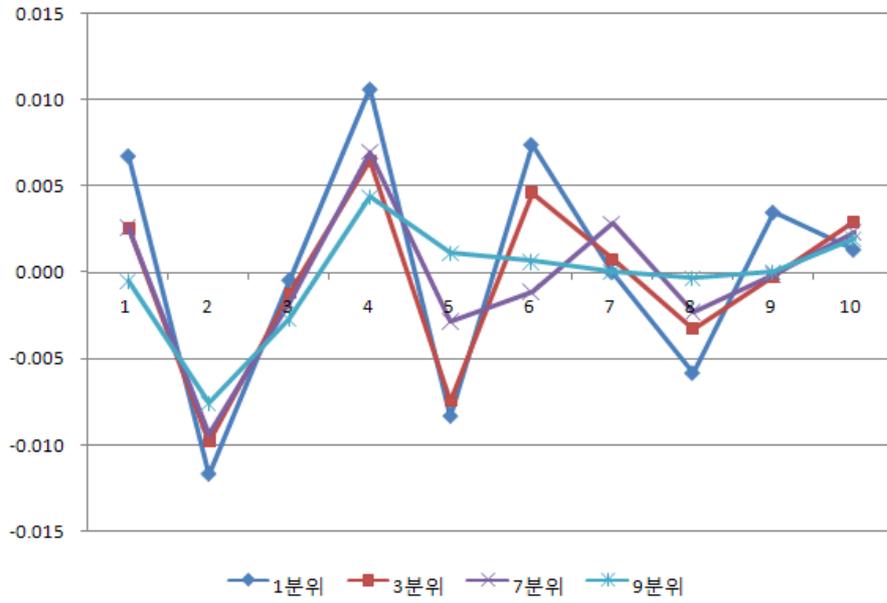
다음 그림은 각 변수들의 충격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의 반응을 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의 크기는 성장률이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지만, 이자율과 부채비율 충격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이것은 절대빈곤이나 지속 불가능한 부채비율로의 진입과 같은 경계선(threshold)에 있는 한계소비자들의 경우 한 번 충격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변동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변동보다 큰데 이는 안중범외(2006)에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안중범외(2006)는 경기변동이 계층별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최저소득계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특히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V-3] 성장률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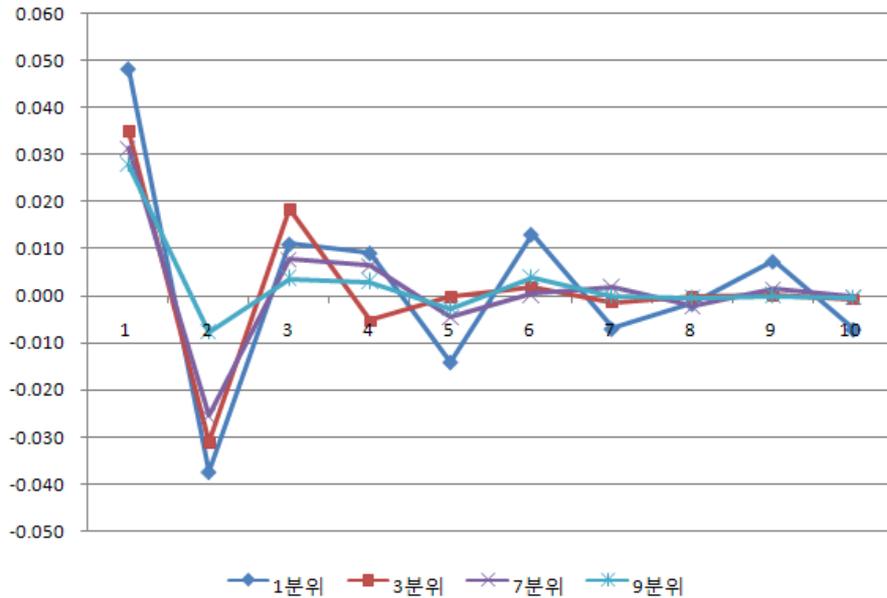
[그림 IV-4] 부채비율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그림 IV-5] 이자율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그림 IV-6] 한계소비성향 충격과 한계소비성향의 반응, 소득10분위별



4. 소결

제 IV장에서는 2007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1인 이상 전국 가구를 소득,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등의 가구 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각 가구집단 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고,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2절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총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총소득이 10,000원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856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235로 측정되었고,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825로 측정되었

다. 한계소비성향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0.6426으로 측정되었으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0.3092로, 소득 1분위 한계소비성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 역시 총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졌다. 그러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이와는 다른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 정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4분위 집단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 소비성 부채의 존재, 유동성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불확실성의 정도나 소비성 부채의 존재는 저소득층의 비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유동성 제약은 저소득층의 비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경상소득에 대한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일수록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득이 낮게 측정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만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이전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금을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한다면, 소비진작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측정 결과가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23) 단, 정부 정책 목표가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소비, 예비적 저축, 부채상환, 어느 곳에 사용되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제 3절에서는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VAR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소비성향은 전기 GDP증가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전기의 GDP증가율의 1% 증가는 이번 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93%포인트 증가시킨다. 이는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소비의 침체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가계소비의 침체는 경기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일정기간(약 1분기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부채비율증감과 이자율은 한계소비성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상승이 다음기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셋째, GDP증가율의 1% 충격은 1~2분기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지만 이자율이나 부채비율의 충격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충격이 더 큰 편이고, 지속기간도 4~7분기로 비교적 긴 편이다.

넷째,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계소비성향에 충격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지만, 반응의 기간은 비교적 짧다. 반면, 이자율과 부채비율 충격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된다. 따라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자율·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율, 부채비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과 부채비율 충격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절대빈곤이나 지속불가능한 부채비율로의 진입과 같은 경계선(threshold)에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한 번 충격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소비자들이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2. 정책시사점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2~2007년 기간의 「가계동향조사(舊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및 소비불평등의 변화,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의 변화를 측정한 후,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 및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가구 특성별, 연도별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199.3만원이다.

항목별 소비 구성을 보면, 식료품(50.3만원, 25.2%), 기타소비지출(36.5만원, 18.3%), 교통 및 통신(35.0만원, 17.6%), 교육(21.8만원, 11.0%) 등의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거비(7.2만원, 3.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8.6만원, 4.3%), 교양·오락(9.3만원, 4.7%), 광열·수도(9.6만원, 4.8%) 등의 소비항목은 소비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항목별 소비비중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식료품,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지출비중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지다가 9분위, 10분위에서는 지출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총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73.7%로, 가구 소득 중 약 73.7%를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소득 대비 평균소비성향은 약 79.0%로 측정되었다. 소득 분위별로 평균 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22.8%로 측정되어, 총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중에서는 근로자 외 가구가,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이 낮았다.

한편 소비지출의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소비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라는 경제충격이 가구의 소비행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II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경기변동이 가계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VAR모형 추정을 통해 구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해 보면,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비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데에는 일정정도 시차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소비항목별로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비중과 교통·통신비 비중은 거시 변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교육비, 피복·신발비, 광열·수도비의 순서대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충격의 지속정도나 시작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다른 변수들과 동행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이들 항목의 경우 단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은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시점이 경기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충격의 시작점과 차이가

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하는 지출항목으로 드러났다.

한편 VAR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은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때의 소비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III장에서는 소비지출 지니계수를 통해 소비불평등도를 측정 한 후,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항목별 소비의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0.340이고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0.368,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 0.370이었다. Shorrocks(1982)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소비항목별 기여도를 측정 한 결과 항목별 소비비중 대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비항목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전체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52.9%에 달하였다.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982~2007년 기간 중 연도별 지니계수를 측정 한 결과에서는 소비불평등도가 1982년 이후 1985년까지는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불평등도의 변화추이는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변동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비불평등도의 충격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경제성장률 충격은 1~4분기에는 소비불평등도를 상승시키지만, 5분기 이후에는 소비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변동이 항목별 소비의 불평등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II장에서 예측한 경기변동에 따른 항목별 소비비중 변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소비의 불평등이 악

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제 IV장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후,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총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이다. 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3235로 측정되었고,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825로 측정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이와는 다른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정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4분위 집단의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 소비성 부채의 존재, 유동성 제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기의 GDP증가율의 1% 증가가 이번 기의 한계소비성향을 0.9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소비의 침체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가계소비의 침체는 경기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일정기간(약 1분기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채비율증감과 이자율은 한계소비성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부채비율과 이자율의 상승이 다음기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관련 변수가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GDP증가율의 경우 1~2분기 정도지만, 이자율이나 부채비율은 4~7분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경기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2.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 등의 분석을 통해 가계소비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조세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인 재정·조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목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향후 정책을 입안하거나 평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소득 분위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해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볼 때 1~2분위, 경상소득 기준으로 볼 때 1~3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의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상당수의 소비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기변동이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저소득층이 경기변동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위기 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더 악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자율과 금융부채비율의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가계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은 가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정책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 주택 미소유 가구와 도시 지역 외 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가구나 도시지역 거주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았지만, 평균소

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계특성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가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계소비 진작이 유일한 정책목표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여타 가계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은 가계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방법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총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지만,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득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함의하는 바는 만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이전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금을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한다면, 정책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지원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며, 중산층의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 역시 효과적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이 가계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채상환이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등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⁴⁾

24) 한편 2009년 1차 추경(안)을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4.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6개월에 걸쳐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액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의 지원금액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소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가계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넷째, 경기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가계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이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및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을 때, 1분기 정도의 시차를 갖고 가계소비가 증가하거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졌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소비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규(2008)는 정책의 시의성, 적절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가계로 하여금 정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대응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안심과 믿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적절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소득, 고용, 가계부채의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입게 될 타격을 최소화해 나갈 때 소비심리도 서서히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자율과 가계의 금융부채비율의 변화추이 및 이의 파급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자율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자율이나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자율, 부채비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여섯째,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불평등도의 변화추이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현재의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가 소비불평등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가계소비가 가계의 후생수준에 직접

생활을 일정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소득불평등도와 함께 소비불평등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평등도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인적자본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분위별 가계지출구조를 살펴보면, 교육비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지출비중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지다가 9분위, 10분위에서는 지출비중이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이미 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비지출 규모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있어 차이가 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비지출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녀세대의 소득수준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안중범·전승훈(2008)은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자녀세대의 교육수준 및 교육수준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두용,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산업연구원, 2005.6
- 강중구, 「경기하강에 취약한 우리의 소비구조」,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09.3.4
- 고희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유동성제약과 저축률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제1호, 2005
- 김동석,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2006, 1~49
- 김대일,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 77~102
- 김병화·문소상, 「주가와 소비의 관계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7권 1호, 2001. 3
- 나성린·유종구, 『한국의 조세·사회부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1991
- 김준영·이광호, 「경기변동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파급효과-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현 한국재정학회), 제18집 제2호, 2004.
- 김학주,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141~161
- 김현숙,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06.12
- 남상호·임병인,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 56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8, 219-247
- 남주하·이수희·김상봉, "고령화가 개별 가구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4.
- 박대근·이창용,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 박명호, 「소득 충격의 지속성이 예비적 저축과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적 접근」,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13권 3호, 2007.1
- 박종규,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 50호, 한국금융연

194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구원, 2008

- 박주영,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0403, 산업은행, 2004. 3
- 소연경,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 분석-IMF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48권 12호, 2000, 1~14
- 안중범·임병인·석상훈, “경기변동과 분배 및 빈곤간 동태적 관계”, 『경제학연구』, 2006.12
- 윤성훈, 「자산가격 급변동이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131호, 2002.8
- 이선형·김근홍, 「노인가계지출 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6호, 2003., 43~60
-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이항용, 「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181호, 2003
- 전철환·장병화·박형수, 「부의 변화 및 금리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8권 제1호, 2002
-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7
- 조동필·양세정, 「한국가계의 소비지출 패턴 추이분석: 1980~2002년」, 사회과학연구, 제17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최요철·김은경,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2007.10
- 차은영, 「저축행동과 유동성 제약: 한국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0집 4호, 1996
- 황덕순·정운영,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구조 비교분석」, 소비자학연구, 9권 4호, 한국소비자학회, 1998, 1~17
- 허석균,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동성 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5
- 홍기석·김준경,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연구, 1997
- Antonio Spilimbergo et al.,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SPN/08/01, December 29, 2008
- Kuznets, Simon, “National Income and its Composition,” Vol. II, New York: NBER, 1946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 50, No. 1, 1982.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발 간 일 2009년 3월 30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도서출판 한학문화(TEL 02-313-7593)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Tel 02·788·377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186-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